한국 경제 바로알기

2019.11



관계부처 합동

CONTENTS

PART 1

거시경제

Q1	경제위기?	글로벌 경기하강 속에서 적극 대응 중	6
Q2	내년 상황?	금년보다 개선 전망	11
Q3	수출?	내년에는 성장엔진 재가동 기대	14
Q3–1	수출시장?	적극적 경제외교로 신시장 개척 중	18
Q4	투자?	경기 반등의 핵심, 투자 회복에 총력전	22
Q4–1	해외투자 증가?	기업 글로벌화의 자연스러운 흐름	26
Q5	디플레이션?	일시적 저물가 현상	29
Q6	고용?	양적 · 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	33
Q7	소득분배?	최근 악화추세가 완화되는 모습	37
Q8	일본 수출규제?	민관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 대응 중	41
Q9	부동산시장?	투기는 철저히 차단, 실수요자는 보호	46
Q10	재정건전성?	세계 최고 수준	50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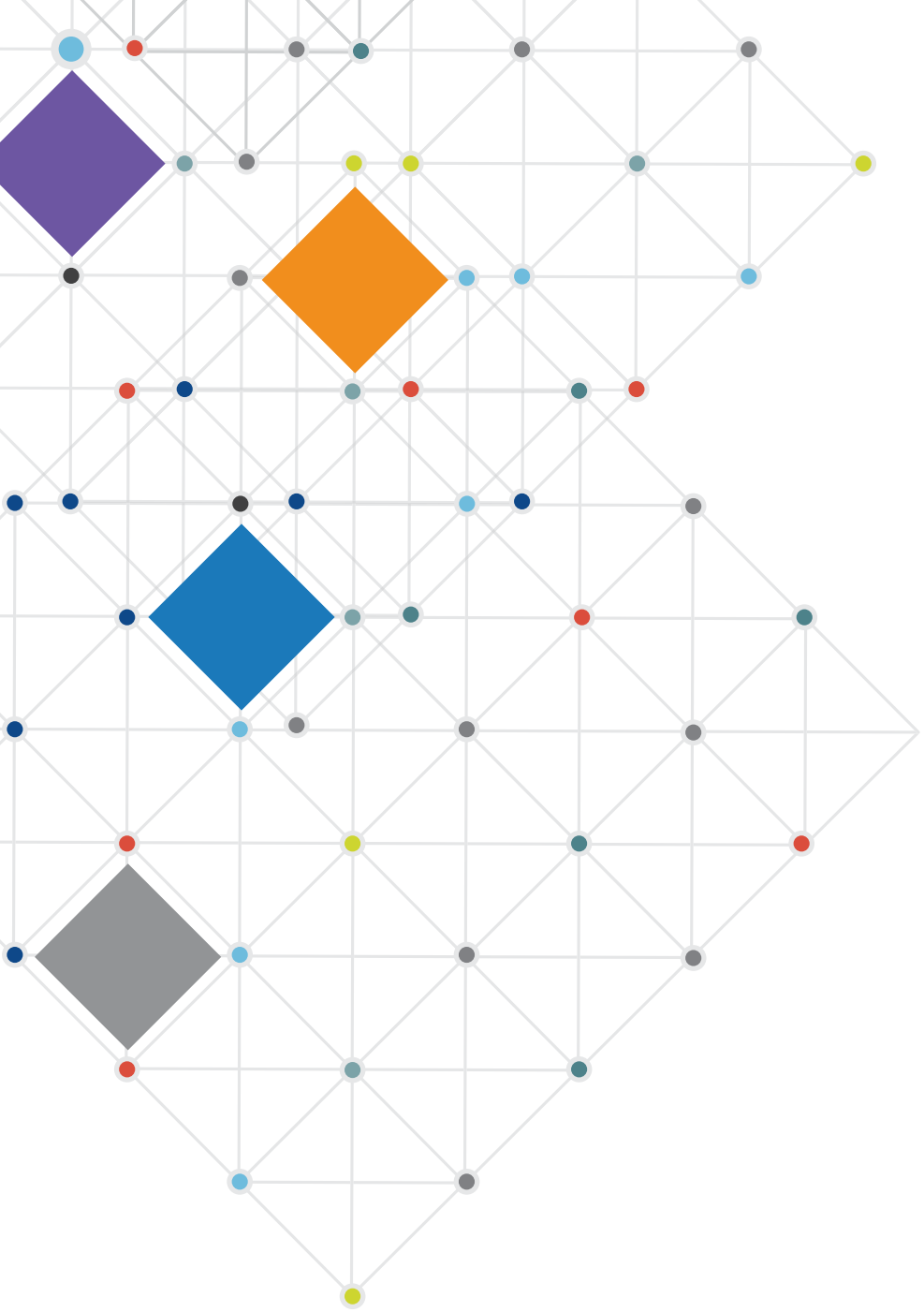
혁신성장

Q1	혁신성장?	Dynamic Korea를 위한 성장전략	56
Q2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위기를 기회로, 경쟁력 강화 3종세트 마련	60
Q3	창업 · 벤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제2벤처 붐” 확산	66
Q4	신산업?	제2 · 제3의 반도체 산업 발굴에 총력	70
Q5	서비스산업?	성장 · 일자리 보물창고로 육성 중	73
Q6	규제혁신?	先허용 · 後규제 등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성과사례 창출	78
Q7	공정경제?	기업 투명성과 상생의 분위기 확산	81

PART 3

포용성장

Q1	포용성장?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선진국도 추진하는 글로벌 트렌드	86
Q2	일자리 정책?	기업 · 근로자 ·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양질의 일자리	89
Q2–1	상생형 지역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	92
Q3	청년 대책?	일자리 · 교육 · 주거 등 희망사다리 복원	95
Q4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조절하되 가야하는 길	99
Q5	근로시간 단축?	현장에 안착시켜 “생산성 향상과 쉼표 있는 삶” 구현	103
Q6	사회 안전망?	촘촘하고 튼튼하게 보강	106
Q6–1	국민 살림살이?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계비는 줄이고	109
Q7	저출산 · 고령화?	투트랙 대응 : 삶의 질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	113



한국경제 바로알기

거시경제

PART 1

경제위기?	글로벌 경기하강 속에서 적극 대응 중
내년 상황?	금년보다 개선 전망
수출?	내년에는 성장엔진 재가동 기대
수출시장?	적극적 경제외교로 신시장 개척 중
투자?	경기 반등의 핵심, 투자 회복에 총력전
해외투자 증가?	기업 글로벌화의 자연스러운 흐름
디플레이션?	일시적 저물가 현상
고용?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
소득분배?	최근 악화추세가 완화되는 모습
일본 수출규제?	민관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 대응 중
부동산시장?	투기는 철저히 차단, 실수요자는 보호
재정건전성?	세계 최고 수준

01 경제위기? 글로벌 경기하강 속에서 적극 대응 중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세계경제 동반 둔화(Synchronized slowdown)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대외건전성
역대 최고 신용등급 지속, 외환보유액 세계 9위

양호한 재정건전성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OECD 4번째로 양호

국가경쟁력 141개국 중 13위
'17년 17위 → '18년 15위 → '19년 13위

'19년 성장률 전망 30-50클럽 중 2위
OECD 2.1%('19.9), IMF 2.0%('19.10)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외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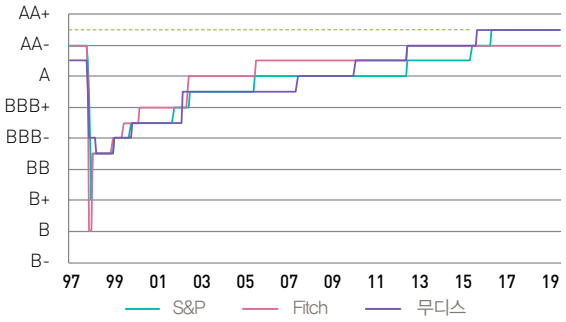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중국 · 일본**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 무디스('15.12월~, Aa2), S&P('16.8월~, AA), Fitch('12.9월~, AA-)

	S&P	무디스	피치
AA(Aa2)			
AA-(Aa3)			
A+(A1)			
A(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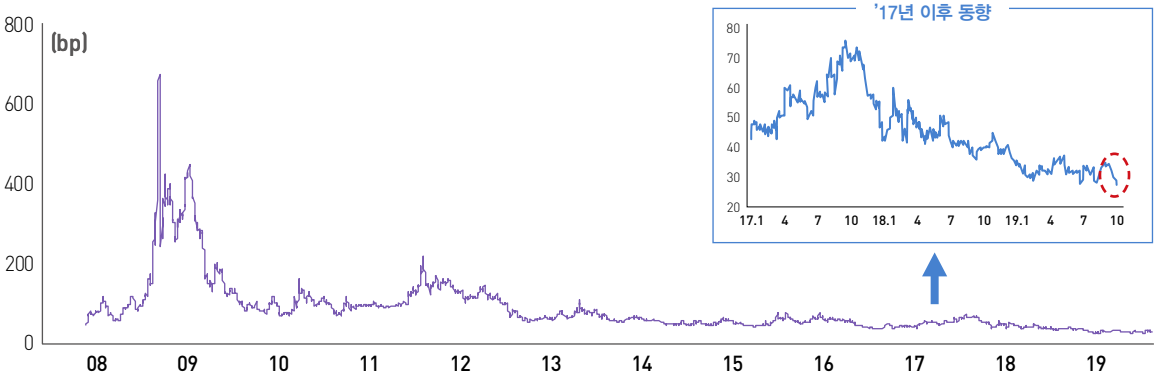
* 괄호안 등급은 무디스 기준



- **국가부도위험**(CDS프리미엄)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27bp, 11.5일)

  * 국가부도위험(CDS프리미엄, bp, 기말) : ('17)53 ('18)39 ('19.3)34 (6)32 (7)28 (9)33 (11.5)27

국가부도위험(CDS 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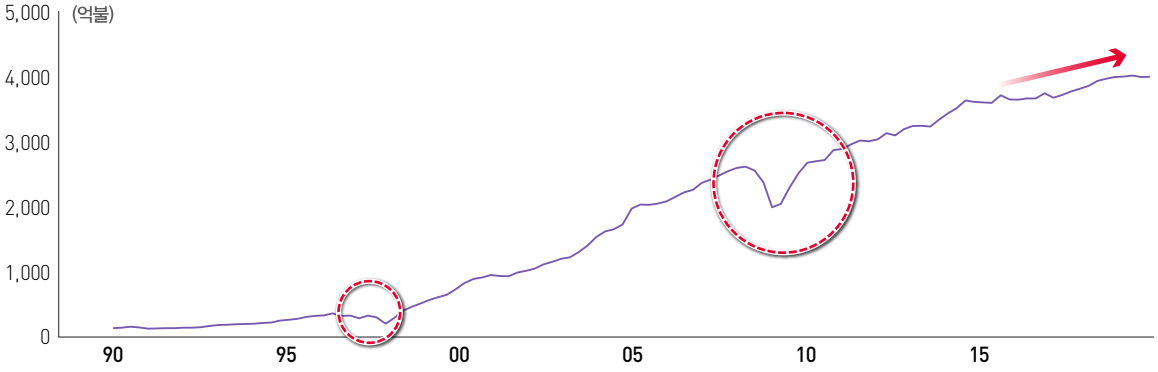


- **외환보유액**(세계 9위), **단기외채 비율** 등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 외환보유액(기말, 억불) : ('08)2,012 ('11)3,064 ('15)3,680 ('18)4,037 ('19.10)4,063 〈사상 최고치〉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19.1/4) : (한국)34.7('19.6) (중국)36.6 (인니)43.3 (아르헨티나)101.5 (터키)123.1

외환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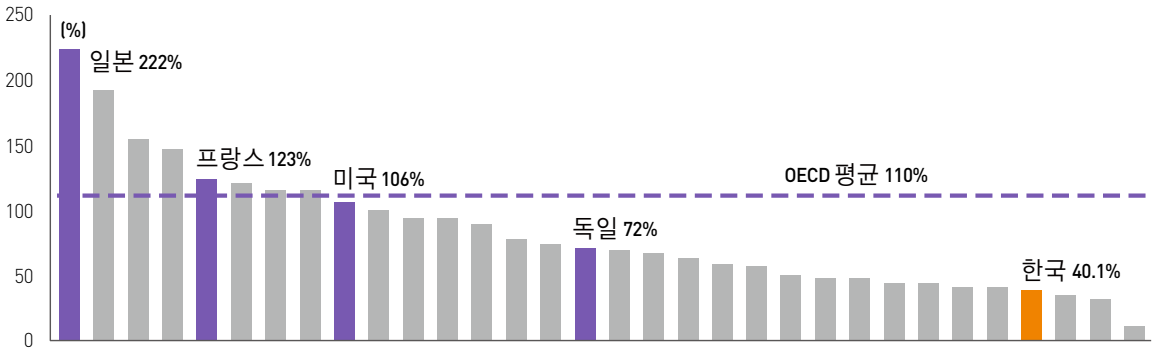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또한 세계 최고수준(OECD 4위)으로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 (FT)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범사례로 평가('19.9)
(IMF) 한국, 독일 등은 재정여력이 충분하여 재정확대로 경기대응할 수 있다고 지목('19.10, 신임총재 연설)

OECD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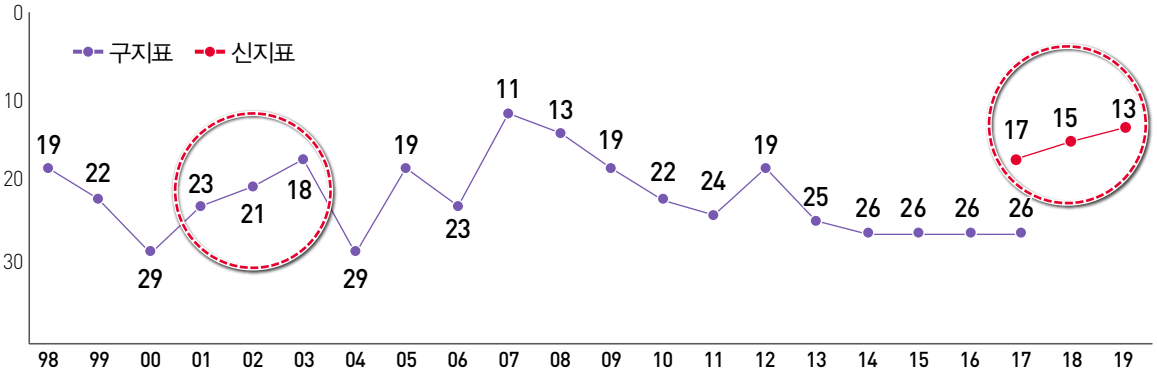
* 자료 : OECD('19.5)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종합순위가 2년 연속 2단계 상승하며 전세계 1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WEF는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과 **적극적인 ICT** 및 **인프라 확충**, **혁신성장 추진**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

WEF 국가경쟁력 순위



* '18년부터 국가경쟁력 지표의 현실 반영력 제고를 위해 지표 산정체계를 개편, '17년까지 소급하여 신지수 발표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

글로벌 투자자들이 경제위기인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해외의 견조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19.6월, 역대 최저금리로 15억불 규모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였습니다.
- 정부는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확충함으로써 향후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여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국내기업 · 은행도 양호한 조건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년물 녹색 및 지속가능채권	10년물 일반채권
발행 규모	5억불	10억불
가산 금리	30bp 우리보다 신용등급 높은 홍콩(S&P,AA+) 가산금리 (32.5bp) 보다 낮은 수준	55bp 10년물 기준 역대 최저 수준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

다만,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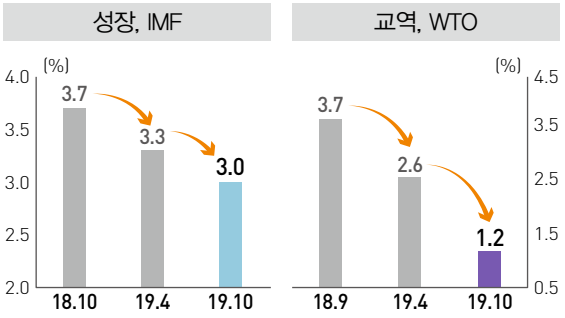
-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 경기 둔화**에 **직면**하였습니다.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10.8일) : "지금은 동반 둔화(synchronized slowdown) 국면, 전세계 90%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질 것"

- 특히,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위축**으로 **우리나라, 독일, 싱가폴**과 같은 **제조업 기반 수출국**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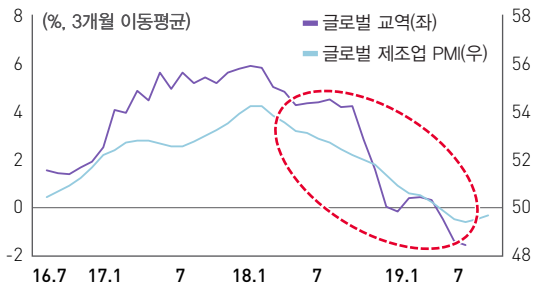
  * 세계교역 전망(%, WTO) : ('17)4.6 ('18)3.0 ('19e)1.2〈금융위기 이후 최저〉
    글로벌 제조업PMI 6개월 연속 기준선 하회 : ('19.4)50.4 (5)49.8 (6)49.4 (7)49.3 (8)49.5 (9)49.7 (10)49.8

'19년 세계경제 성장 · 교역전망 변화



* 자료 : IMF, WTO

글로벌 교역 · 제조업PMI 추이



* 자료 : CPB,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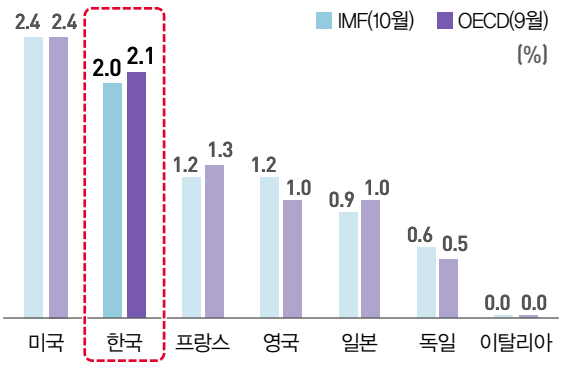
성장률 국제비교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우리 경제는 재정의 역할 등을 통해 경기 하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금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경제수준 · 규모**가 유사한 **30-50클럽** 중 **2위, G20중 5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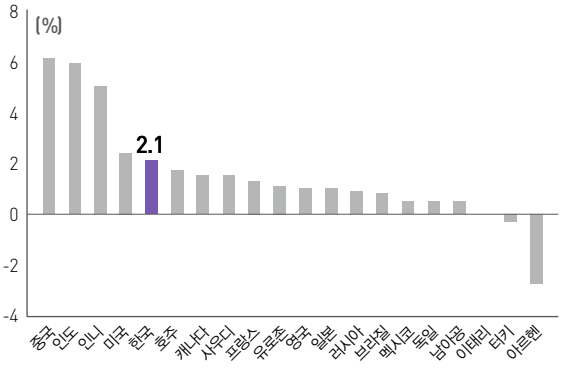
*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불 이상 & 인구 5천만명 이상)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30-50클럽 '19년 성장률 전망치 비교



* IMF('19.10), OECD('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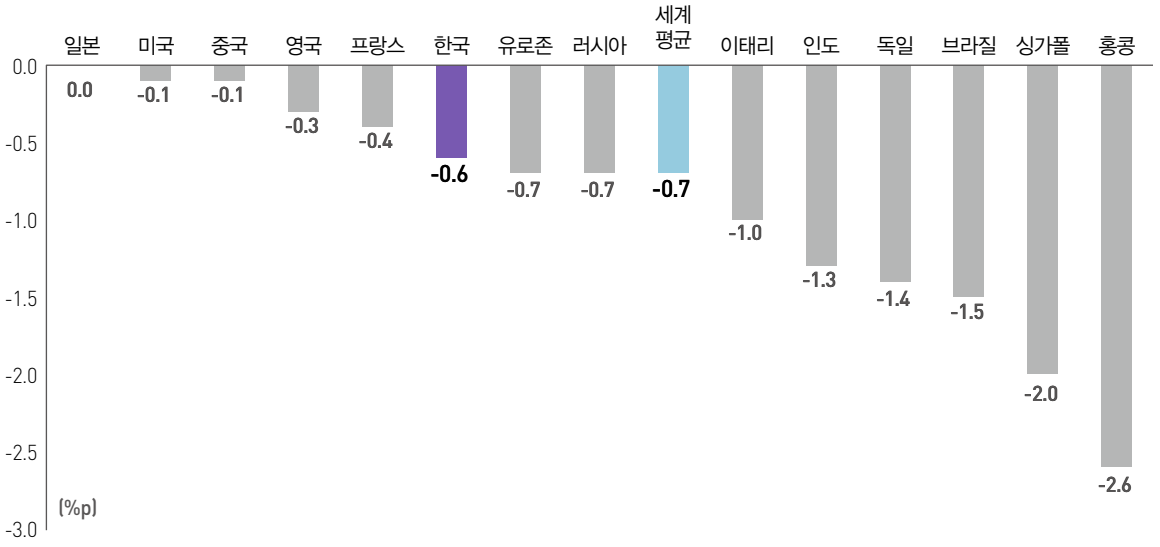
G20 국가 '19년 성장률 전망치 비교



* OECD('19.9)

• 작년 말과 비교한 IMF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폭**도 **세계경제**의 평균적인 **하향폭**보다 **작게 조정**되었습니다.

IMF '18.10월 전망치 대비 '19.10월 전망치 하향조정폭



* IMF('19.10)

정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02
내년 상황?
금년보다 개선 전망

세계경제 개선,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재정 등에
힘입어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세계경제 · 교역 개선 전망

세계경제(%, IMF, '19.10) : ('19)3.0 → ('20)3.4

세계교역(%, WTO, '19.10) : ('19)1.2 → ('20)2.7

글로벌 반도체 업황 내년에 업턴 전망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WSTS) : ('19)△13.3 → ('20)4.8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개선 전망

IMF(%) : ('19)2.0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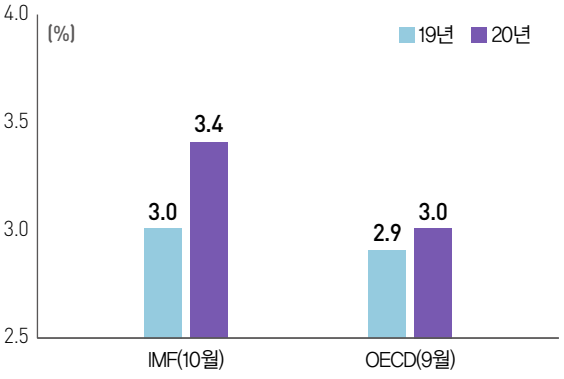
OECD(%) : ('19)2.1 → ('20)2.3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세계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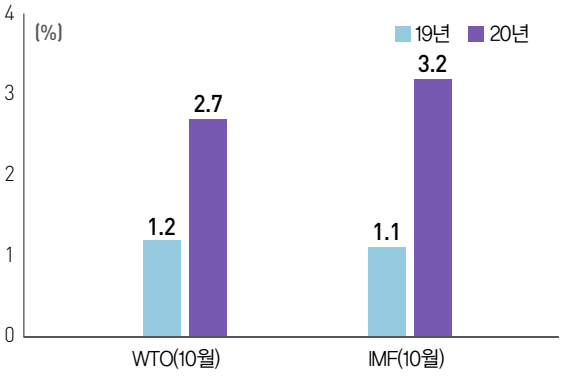
국제기구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20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



* IMF, OECD

'19~'20년 세계교역 전망



* WTO, IMF

반도체 업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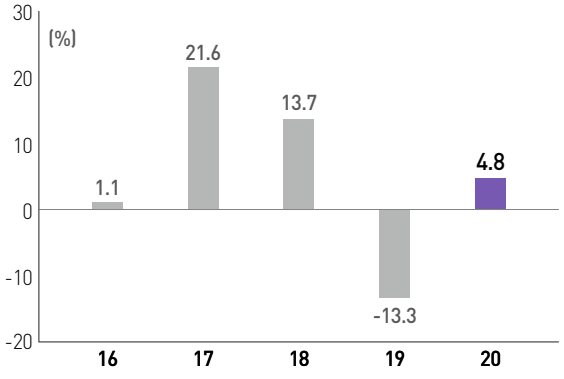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는 업턴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 **미중 무역분쟁** 등의 **부담 요인**이 있으나, 주요 **시장예측기관**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업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시장예측기관 모두 '20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 전환 예상 :
    (WSTS)4,261억불, 4.8% (IHS)4,480억불, 6.0% (Gartner)4,647억불,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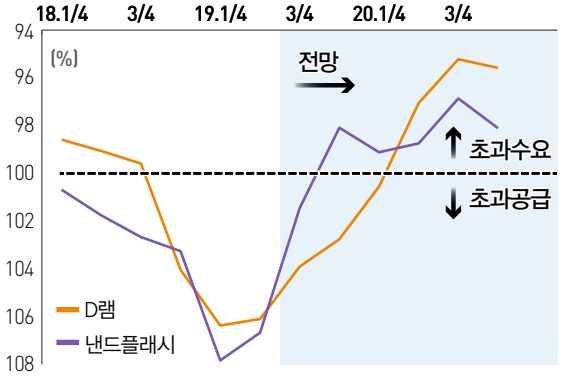
  **'20.2분기부터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이 초과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Gartner)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



* WSTS

글로벌 반도체 초과공급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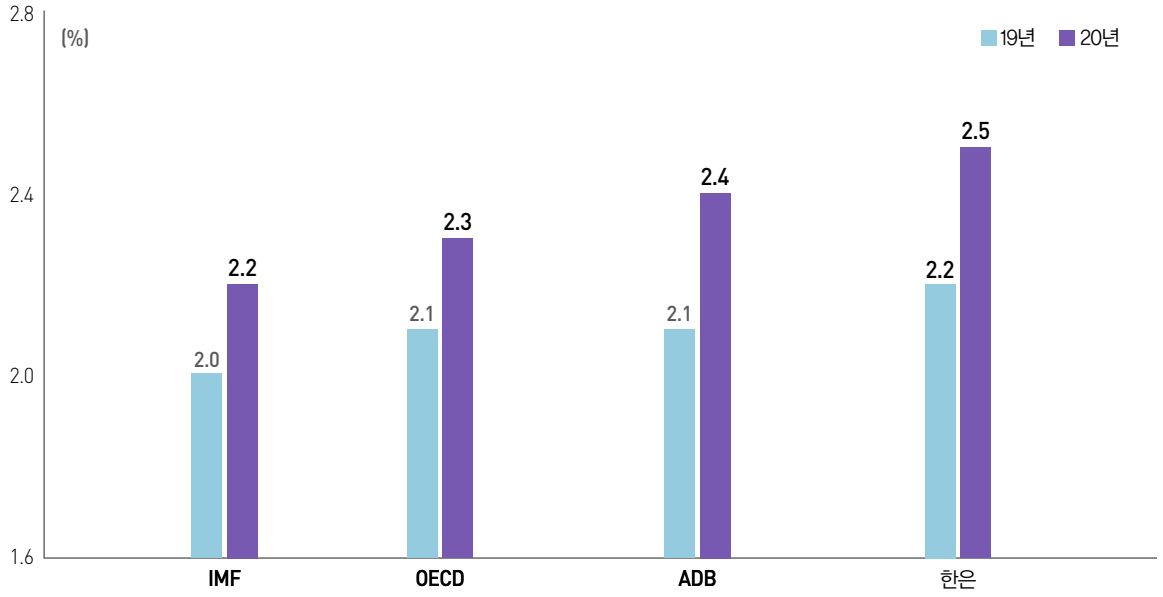


* Gartner

주요기관의 한국경제 전망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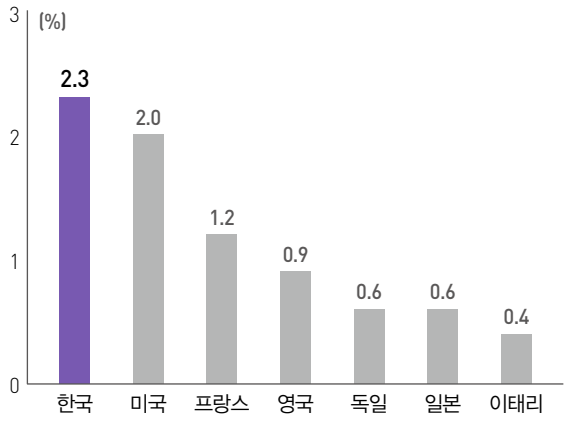
'19~'20년 한국경제 전망



* 자료: 각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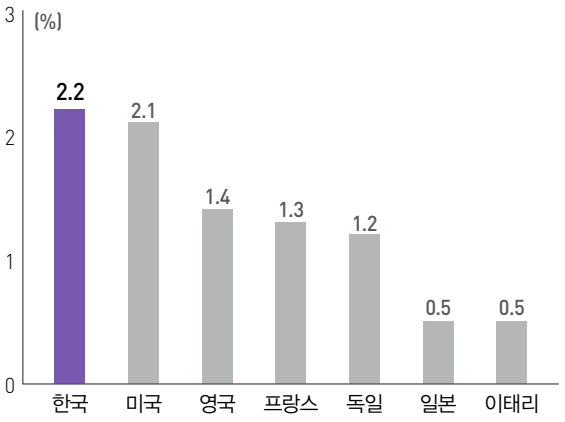
• **내년 성장률**은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최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30-50 국가 중 1위, G20 중 4위)

OECD '20년 성장률 전망



* 자료 : OECD ('19.9)

IMF '20년 성장률 전망



* 자료 : IMF ('19.10)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03
수출?
내년에는 성장엔진 재가동 기대

우리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교역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이나, 내년에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18.12월부터 '19.10월까지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

특히 글로벌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19년 1~10월까지 △26.0% 감소

수출 감소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4월 · 6월 · 8월 중 수출규모 상위 10개국 수출이 모두 감소

정부 정책노력 + 대외여건 개선으로 내년도 수출 회복 전망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등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중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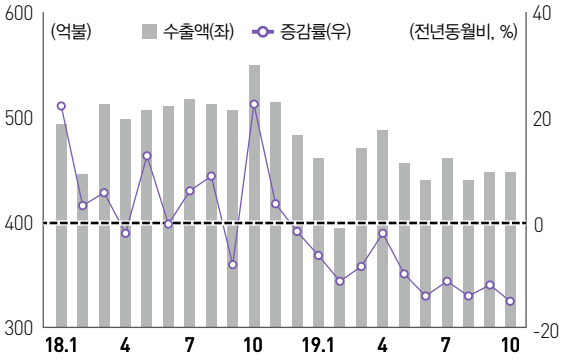
최근 수출 동향

최근 우리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 **주로 반도체, 석유류 등 수출제품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수출 물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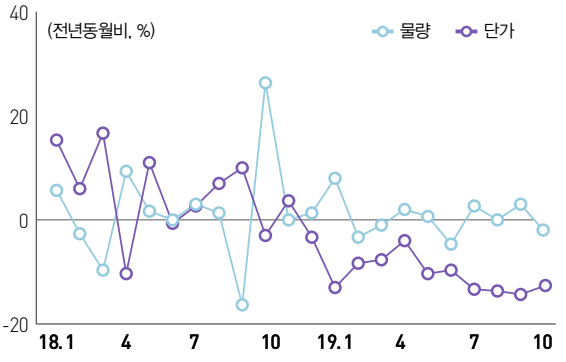
* 수출금액 증가율 ≒ 수출물량 증가율 + 수출단가 증가율

최근 수출금액/증감률 추이



* 자료 : 산업부

최근 수출물량/단가 추이



* 자료 : 산업부

수출 감소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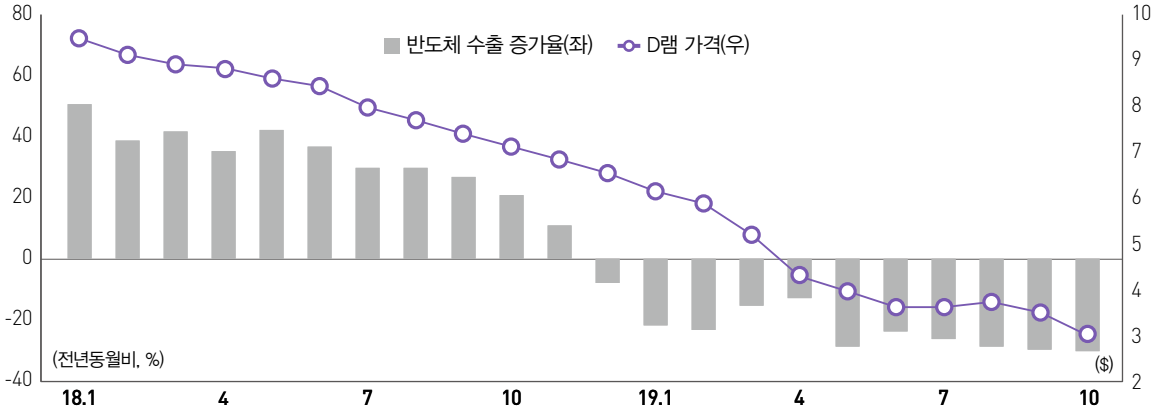
세계경제 성장·교역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가 우리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입니다.

•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우리 수출의 21%에 해당하는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연간 교역증가율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예상(%, WTO)
: ('09)△12.6 ('10)13.9 ('11)5.3 ('12)2.2 ('13)2.5 ('14)2.7 ('15)2.3 ('16)1.7 ('17)4.6 ('18)3.0 ('19e)1.2

* 반도체 가격($, '18.10 → '19.10) : (D램, 8Gb)7.09 → 3.01〈△58%〉 (낸드, 128Gb)5.83 → 5.78〈△1%〉

반도체(D램) 가격/수출금액 추이



* 자료: 산업부, DramExchange

주요국 비교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성장 · 교역 둔화로 수출규모 상위 10개국 수출**이 대부분 **작년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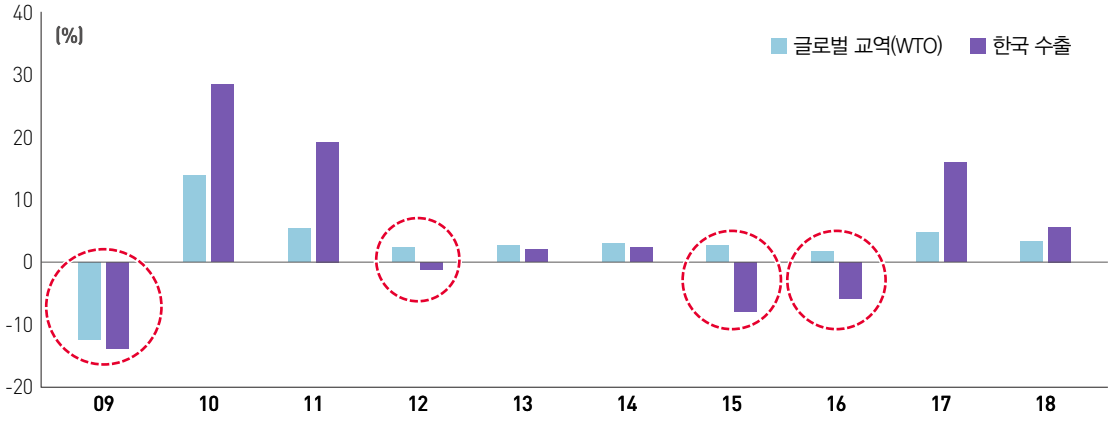
* 특히 4월 / 6월 / 8월은 10개국 수출이 모두 감소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프랑스	홍콩	이탈리아	영국
1월	9.2	3.7	△5.0	△6.8	△4.7	△6.2	△1.4	△1.7	△3.6	△8.1
2월	△20.8	1.9	△4.5	△3.4	△1.4	△11.3	△1.4	△6.6	△5.0	△0.8
3월	13.8	△1.1	△6.8	△6.3	△1.5	△8.4	△5.7	△3.9	△8.4	1.3
4월	**△2.8**	**△2.1**	**△8.8**	**△5.9**	**△0.3**	**△2.1**	**△2.1**	**△4.1**	**△3.1**	**△1.8**
5월	1.0	△2.1	△0.9	△9.4	△1.2	△9.8	9.2	△6.1	2.3	△1.1
6월	**△1.3**	**△5.0**	**△11.2**	**△4.9**	**△4.7**	**△13.8**	**△7.0**	**△15.2**	**△6.7**	**△10.4**
7월	3.3	△0.6	△0.5	1.4	△0.2	△11.1	0.4	△9.4	2.1	△11.2
8월	**△1.0**	**△1.0**	**△7.5**	**△4.0**	**△7.7**	**△13.9**	**△2.9**	**△8.6**	**△7.0**	**△16.9**

단위 : 전년동월비, % / 출처 : WTO

Q 과거 글로벌 교역 둔화기에도 우리 수출이 어려웠나요?

•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12년 유럽 재정위기, '15~'16년 중국 및 신흥국 경기부진으로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수출도 감소한 바 있었습니다.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정부는 **조속한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활력 제고 대책(3월)**」,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9월)**」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금년 중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제3차 전시산업 기본계획**」 등 **추가 대책**을 마련,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3월)



- 무역금융 신규 프로그램 가동
  → 8개 무역금융 프로그램 신설 · 확충



- 수출상담회 확대 지원 등 수출마케팅 확대 · 효율화
  → 수출 중소 · 중견기업 42,273개社 지원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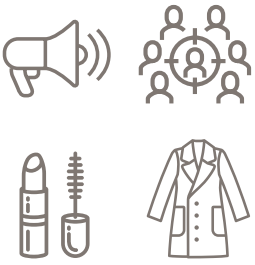


- 3대 시장 지원
  → 전략 / 신흥 / 주력시장



- 3대 분야 지원
  → 산업 / 글로벌공급망 / 통상

분야별 수출지원 대책(4~6월)



- 「수출 마케팅 지원강화 방안(4월)」
  →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 전문 무역상사 활성화 등
-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 · 해외진출 지원대책(5월)」
  → 온라인 수출 지원 확대 / 신흥시장 진출지원 확대 등
-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6월)」
  →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등) 적극 육성

향후 수출 전망

정부 정책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나아지면서,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 교역이 회복**되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도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계경제 성장 전망(전년비, %, IMF) : ('19e)3.0 → ('20e)3.4
  * 세계교역 증가 전망(전년비, %, WTO) : ('19e)1.2 → ('20e)2.7
  *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19e → '20e, 전년비, %) : (WSTS)△13.3 → 4.8, (IHS)△12.8 → 6.0

내년에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추가대책 마련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03-1

수출시장?
적극적 경제외교로 신시장 개척 중

적극적 FTA 체결과 신남방국가와의 정상외교로
교역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신규 FTA 체결을 통해 신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니 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

신남방 11개국 정상순방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적극적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부산)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를 내겠습니다.

FTA 확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신시장 개척을 위한 4대 FTA를 신규로 체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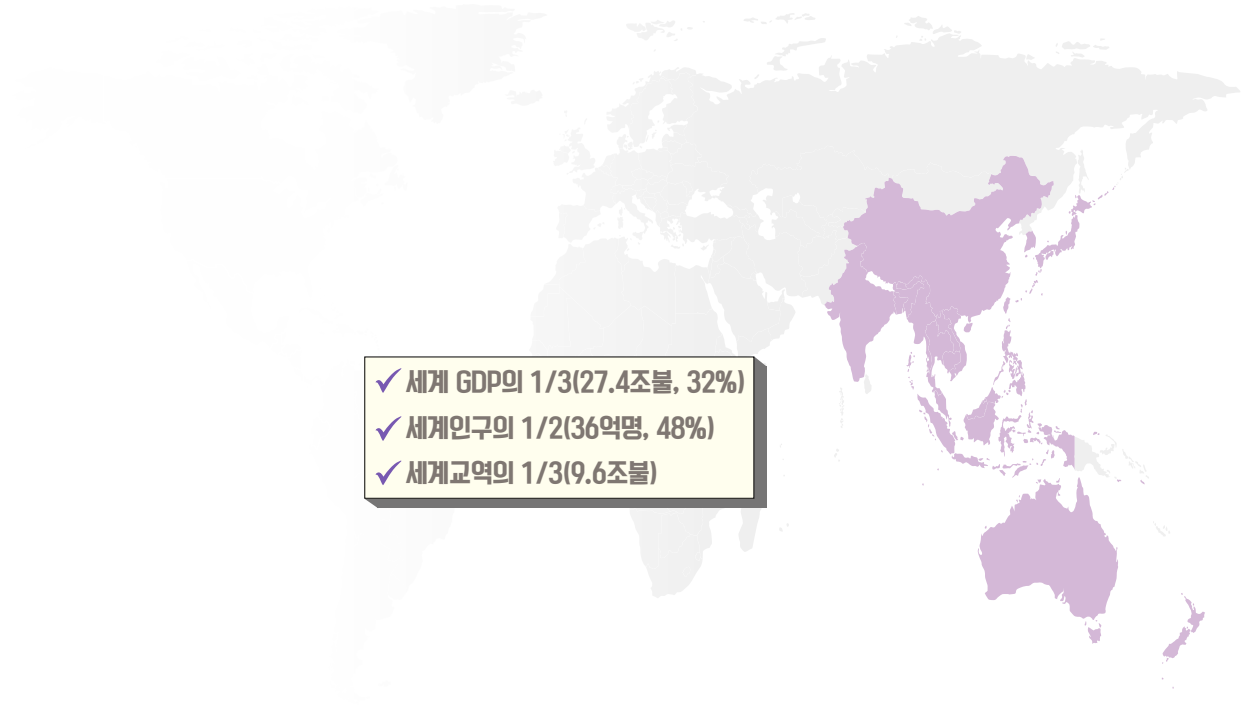
-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19.11)하여 **역내 교역 ·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19.11월 협정문 타결 선언(인도 제외), 내년 최종서명을 목표로 협상 추진중

RCEP 참여국가 현황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 참여**



- **아세안 중 교역 2위**이자 **아세안 최대시장**인 **인도네시아**와의 CEPA를 **최근 개시한 對아세안 양자 협상** 중에서 **첫 번째로 타결**('19.10)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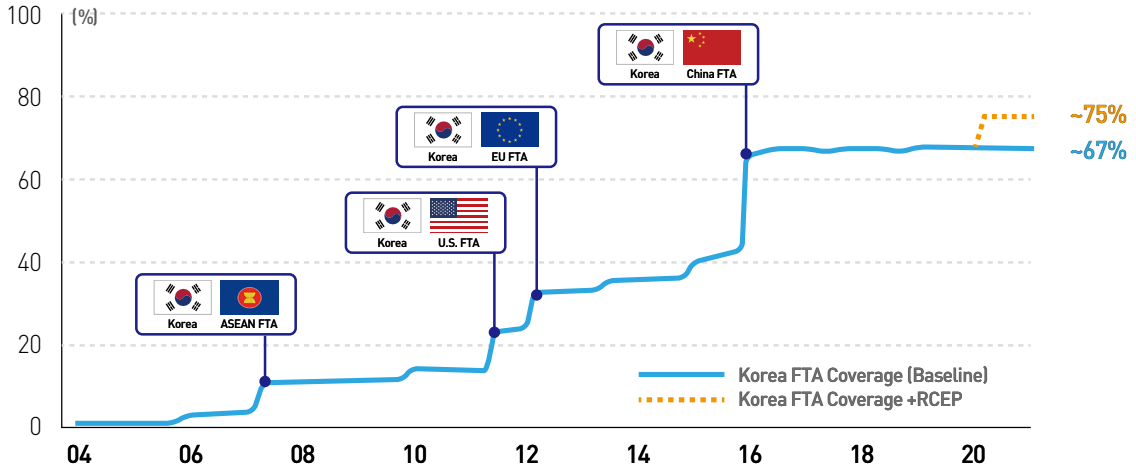
- **한-중미* FTA 발효**('19.10)로 북미(미국 · 캐나다)와 남미(페루 · 칠레 · 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아시아 최초**로 구축하였습니다.

  *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해당국 비준절차가 완료된 니카라과 · 온두라스와 우선 발효)

• **아시아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타결**('19.8)하여 경쟁국 대비 **신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되며, **기술 협력 확대로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GDP 대비 R&D 투자(OECD, '17) : 1위 한국(4.55%), 2위 이스라엘(4.54%)

우리나라 전체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FTA Coverage)



신남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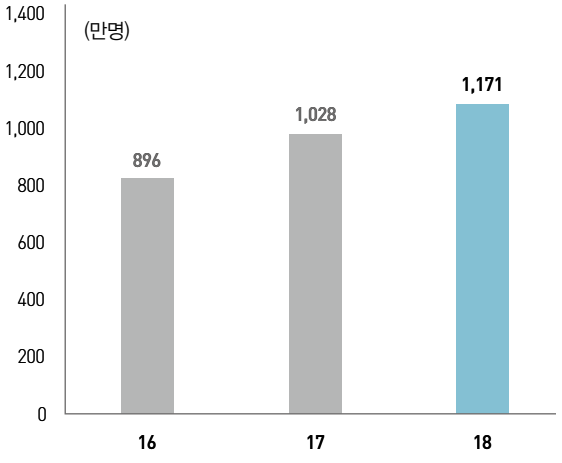
적극적 정상외교로 신남방 국가들과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 인도 및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정상방문을 임기 전반에 조기에 완료**하여 신남방국가들과 **관계 업그레이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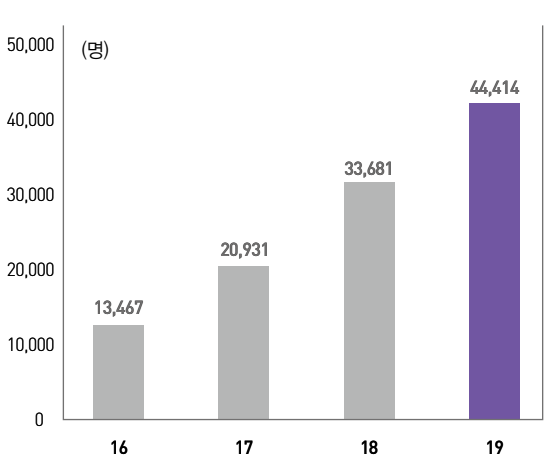
* ('17)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베트남 ('18) 베트남 · 싱가폴 · 인도
('19) 말레이시아 · 캄보디아 · 브루나이 · 태국 · 미얀마 · 라오스

• 경제협력 확대, 한류 확산 등으로 **'16~'18년간 상호방문객은 연평균 14%, 유학생은 3배로 증가**하는 등 **인적교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상호방문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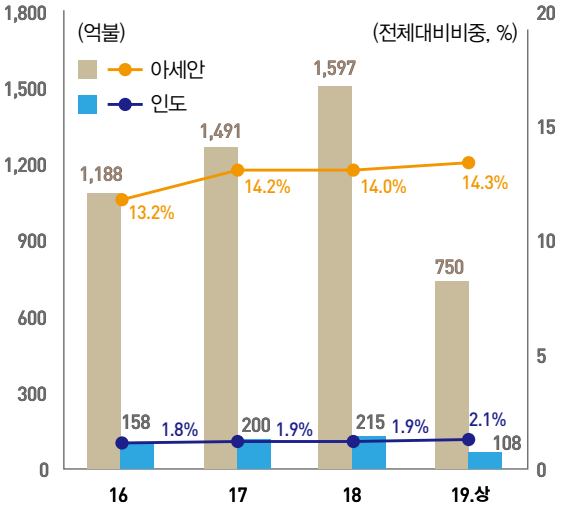


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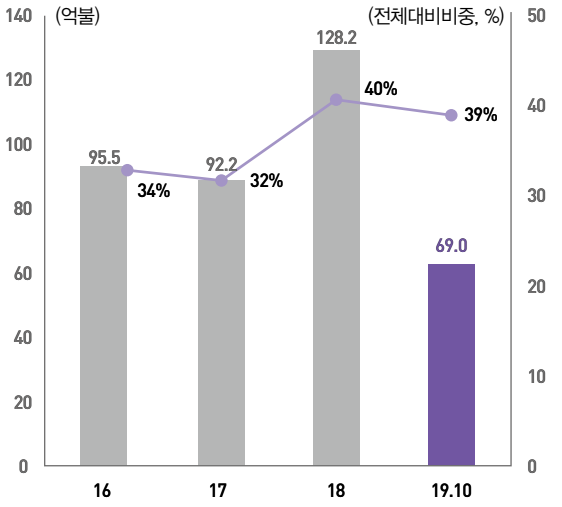


• 제2위 교역대상, 제1위 해외인프라 수주처('18년말 기준)로서 신남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도 공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역



신남방국가 대상 해외수주



3P(People, Prosperity, Peace) 공동체 비전 하에
신남방국가들과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PEOPLE
사람공동체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PROSPERITY
상생번영공동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PEACE
평화공동체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04
투자?
경기 반등의 핵심, 투자 회복에 총력전

과거 반도체 슈퍼 호황과 건설투자 급증이
최근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투자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슈퍼호황이 마무리되면서 설비투자 6분기 연속 감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전년동기비, %)
: ('16)0.2 ('17)61.5 ('18)30.2 ('19.1/4~3/4)△35.2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 ('15)5.1 ('16)2.6 ('17)16.5 ('18.1/4)10.2 (2/4)△4.3 (3/4)△9.4 (4/4)△5.3
('19.1/4)△17.4 (2/4)△7.0 (3/4)△2.7

과거 급증했던 건설투자 조정으로 6분기 연속 감소

건설투자(전년동기비, %)
: ('15)6.9 ('16)10.0 ('17)7.3 ('18.1/4)1.2 (2/4)△2.5 (3/4)△8.7 (4/4)△5.7
('19.1/4)△7.2 (2/4)△3.5 (3/4)△3.0

신산업 육성·주력산업 혁신을 통해 5G 등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생활 SOC, 서민주택, 도시재생 등을 통해 건설투자 부진을 보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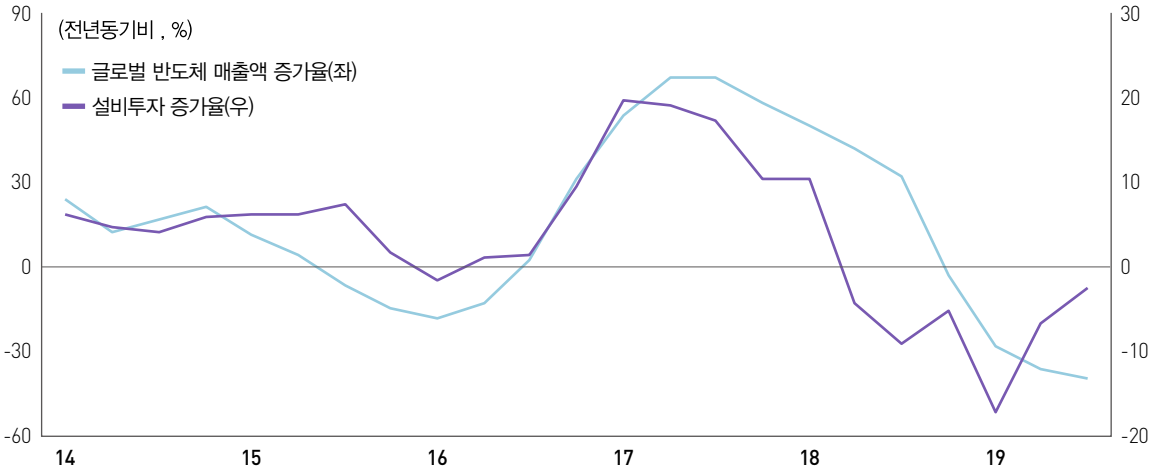
최근 설비투자 동향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급격한 위축 과정에서 설비투자가 6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반도체 슈퍼 호황이 마무리**되면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감소중입니다.

*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 〈설비투자 = 기계류(제품 생산에 사용) + 운송장비〉
('18.1/4)10.2 (2/4)△4.3 (3/4)△9.4 (4/4)△5.3 ('19.1/4)△17.4 (2/4)△7.0 (3/4)△2.7
기계류(비중 : 75.3%) : ('18.1/4)11.2 (2/4)△2.5 (3/4)△13.6 (4/4)△14.4 ('19.1/4)△21.7 (2/4)△13.3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설비투자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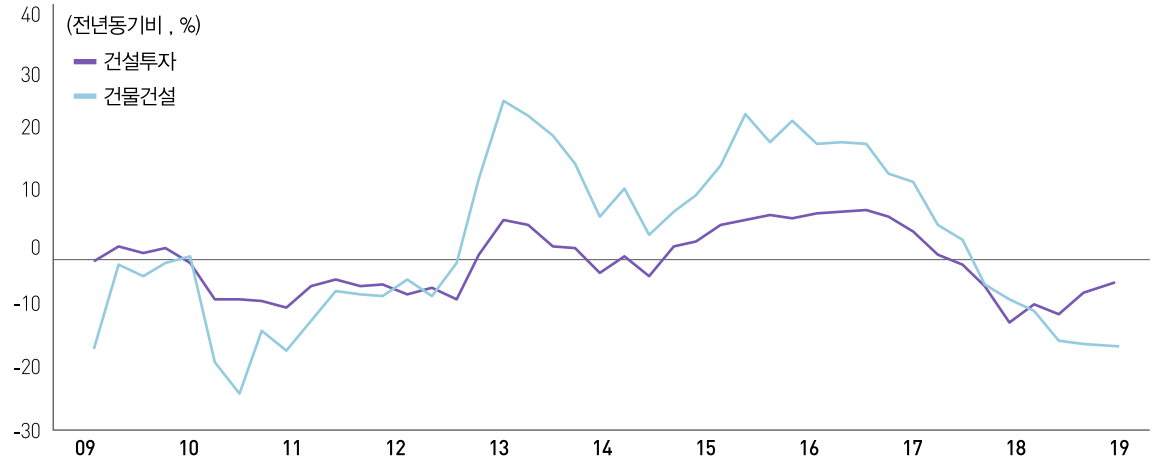
최근 건설투자 동향

건설투자도 '15~17년간 큰 폭 증가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 **'15~'17년간 장기평균을 상회**하면서 급증했던 건설투자가 최근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6분기 연속 감소중**입니다.

* 건설투자(전년동기비, %) : ('15)6.9 ('16)10.0 ('17)7.3 ('18.1/4)1.2 (2/4)△2.5 (3/4)△8.7 (4/4)△5.7 ('19.1/4)△7.2 (2/4)△3.5 (3/4)△3.0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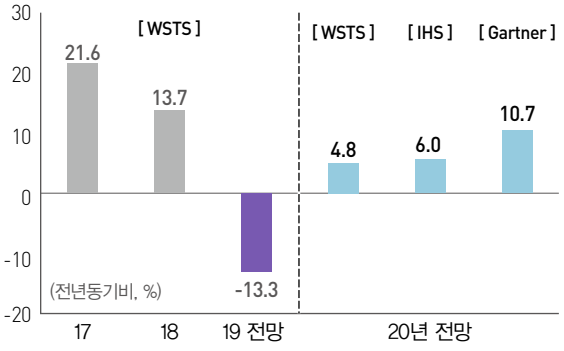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향후 전망 및 대응

투자 부진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설비투자**는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개선**되면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전망



* 자료 : WSTS, IHS, Gartner

신산업 및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DNA + 수소경제
Data + Network + AI + 5G + 수소경제
산업 간 융 · 복합 촉진



핵심 신산업 : BIG 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주력산업 혁신
산업구조고도화 지원('19 → '20) 4 → 6조원

- **건설투자는 당분간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부문**에서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착공면적, 인허가물량, 분양물량 등 향후 건설투자 움직임에 선행하는 지표들이 아직까지 감소세 유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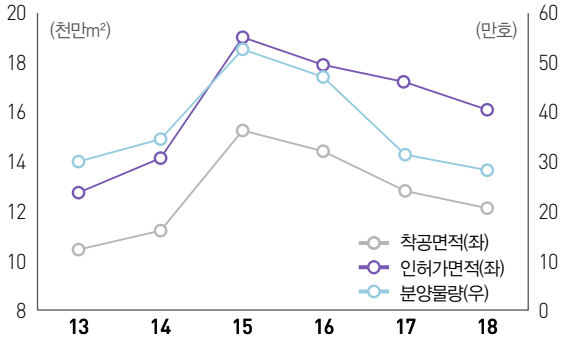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정부의 계획

→서민 ·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생활 SOC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년('18~'22)간 총 104.5만호 공공지원 주택 공급(공공임대주택) 69.5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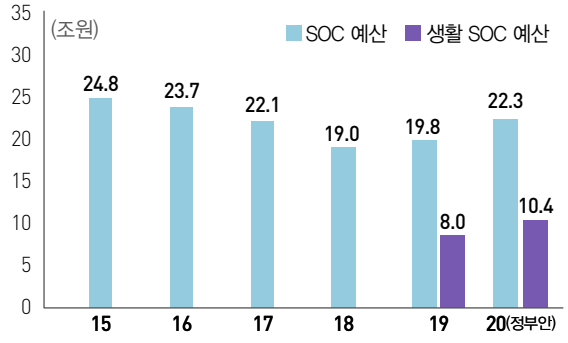
*총 13조원 GTX-A노선('23년 개통 목표), B · C노선 조기 착공 적극 추진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청

SOC 및 생활 SOC 예산



*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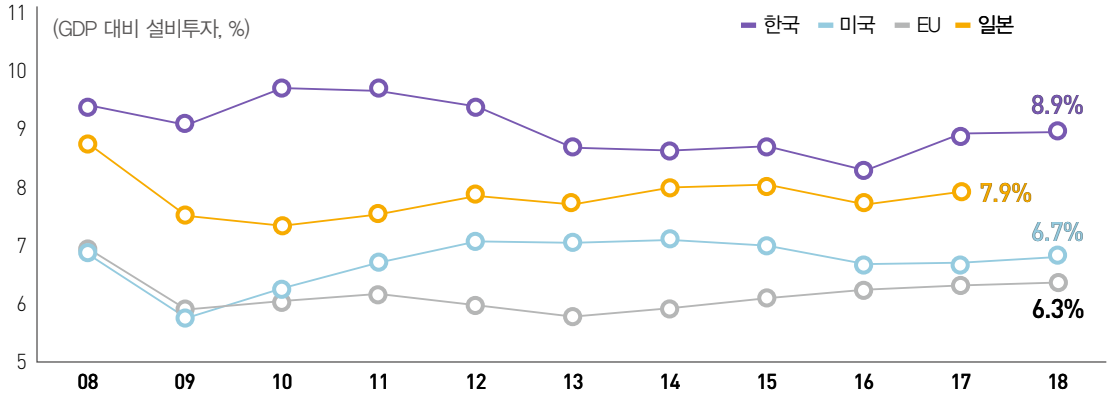
내년 경기 반등의 핵심요인이 될 투자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공·민자·기업투자 활력 제고와 함께 건설투자 보완(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 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 최근 감소 중이긴 하나 아직까지 우리 설비투자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생산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08~'17년 GDP 대비 설비투자 평균(%) : (한국)9.0 (미국 · 일본 · EU)6.8

주요국의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



* 자료 : OECD,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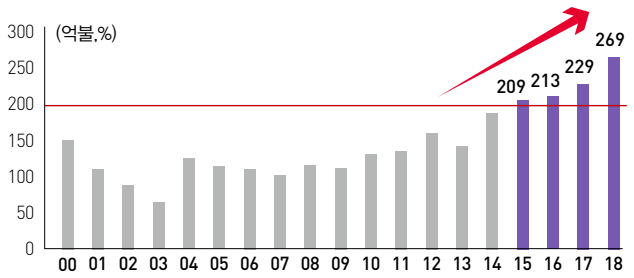
Q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고 있나요?

-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관심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15년부터 4년 연속 2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 해외 기업 등이 우리나라에 직접 공장을 짓는 등의 투자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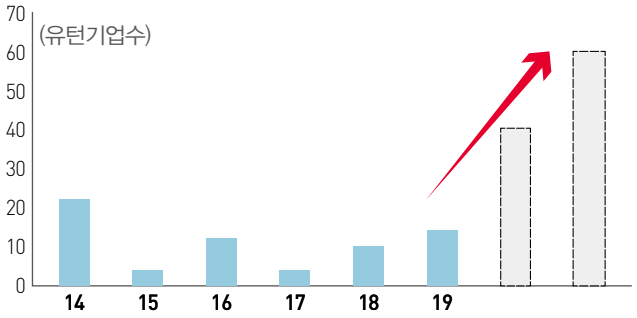
- 금년에도 3분기까지 134.9억불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200억불 이상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0~'18년간 외국인직접투자



* 자료 : 산업부

국내 유턴기업 현황



* 자료 : 산업부

- 해외 기업 뿐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국내 유턴 기업도 정부 유턴기업 촉진 정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❶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기존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추가)

  ❷ 국 · 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등
  입지지원 강화

04-1

해외투자 증가?
기업 글로벌화의 자연스러운 흐름

해외투자는 기업의 글로벌화, 금융 투자 확대 과정에서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 지속

해외직접투자(억불) : ('15)303.6 ('16)395.9 ('17)446.0 ('18)497.8 ('19.상)299.8

기업 글로벌화, 금융 해외펀드 투자 확대가 주된 원인
→ 비용절감을 위한 제조업 기반 이전 투자비중은 감소

금융 · 부동산업 비중(%) : ('15)37.3, ('16)39.2, ('17)38.5, ('18)42.8 ('19.상)44.9

제조업 목적별 투자비중('19.상, %) : 현지시장진출(71.4), 선진기술도입(7.6), 저임금활용(4.4) 등

국내외 투자 환경, 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 감안시
해외투자 증가는 불가피하며, 대외건전성 제고에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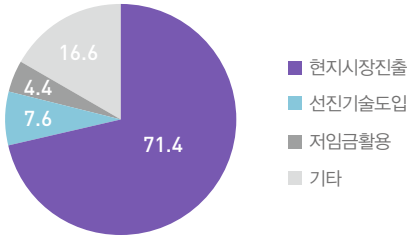
국내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 동향

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현지시장 확보, 수익목적 금융투자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용 절감을 위한 제조업 기반 이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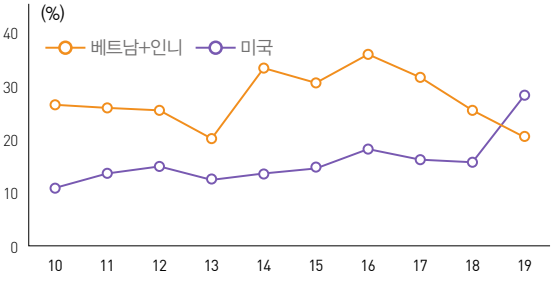
• **제조업 투자**는 **현지시장 확보, 선진기술도입 등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가 **대다수**이며, **비용 절감**을 위해 **제조업 기반을 이전**하는 투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19년 상반기 제조업 투자 목적 비중(%)



* 자료 : 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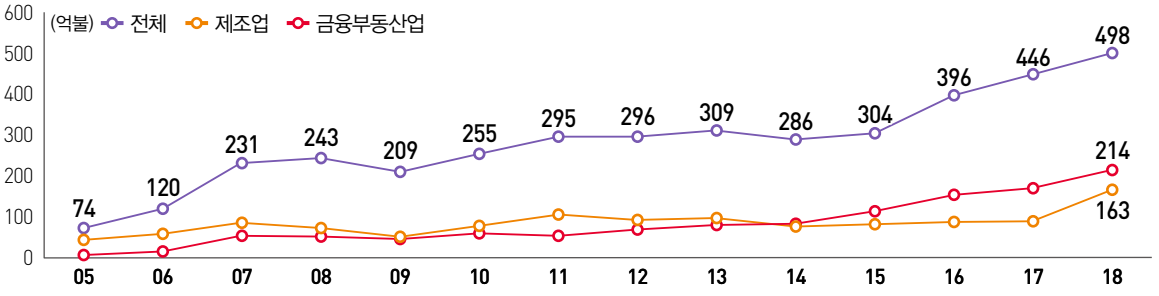
국가별 제조업 투자 비중



* 자료 : 수출입은행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국내 **유동자금 확대**로 **수익 창출**을 위한 **해외펀드 투자가 확대**되면서 **제조업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05~'18년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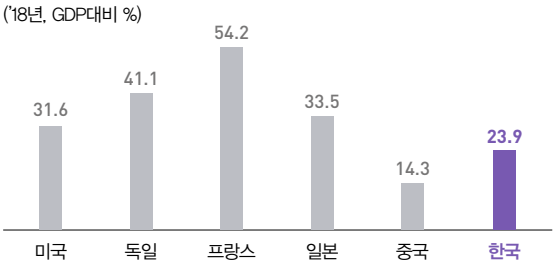
* 자료 : 수출입은행

글로벌화된 국내외 투자 환경과 **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을 감안하면 **해외투자 증가는 불가피**하며, **소득수지 개선, 대외건전성 제고,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 증가** 등은 **해외투자의 긍정적 측면**입니다.

* 현지법인 대상 순수출(억불) : ('13)941 ('14)1,104 ('15)1,123 ('16)1,159 ('17)1,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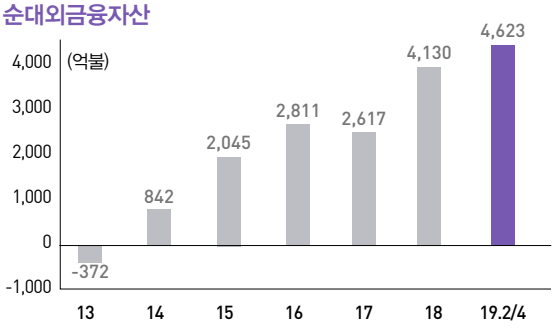
* 본원소득수지('18년, 억불) : (미국)2,540 (독일)1,078 (프랑스)682 (일본)913 (한국)28

누적 해외직접투자 규모



* 자료 : 한국은행

순대외금융자산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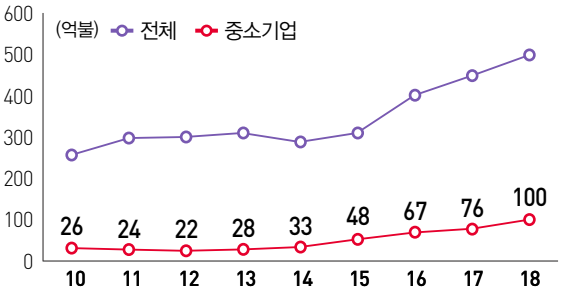
분야별 동향

국내 규제, 조세 회피 목적의 자금·인력 유출의 경우, 뚜렷한 증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중소기업 해외투자는 금융 · 부동산업 투자 증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현지시장 진출 목적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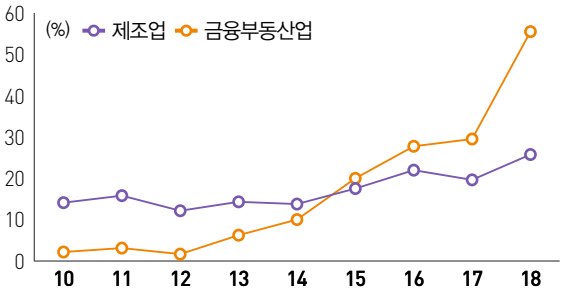
* 제조업 목적별 비중('14년 → '19.상, %) : (현지시장진출) 47.6 → 80.5 (저임금 활용) 19.3 → 6.7

중소기업 투자



* 자료 : 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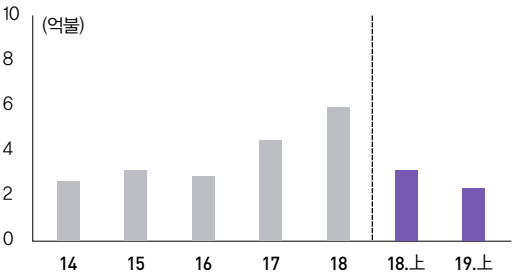
중소기업 업종별 투자 비중



* 자료 : 수출입은행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직접취득**은 **사전신고 절차와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직접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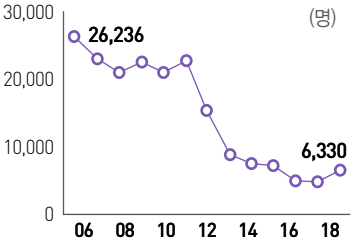


사전 및 사후 관리체계

사전	• 취득 전 외국환은행에 신고 • 은행은 조세체납여부, 취득금액 적정성, 실제 사용목적 등을 엄격히 심사 후 수리
사후	• 신고수리 후 2년마다 보유사실 입증, 처분 시 처분대금 국내회수 의무부과 • 신고 및 사후관리 내역을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 → 자본유출 모니터링, 과세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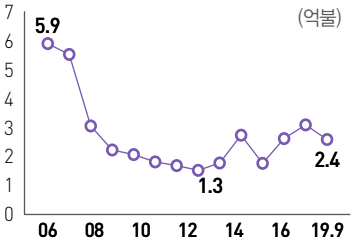
• **해외이주자 수, 해외이주비, 주요국 이민자 수** 등 살펴볼 때 **최근 해외이민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이주신고자



* 자료 : 외교부
('13~'17년은 제도변경으로 통계 일부누락)

해외이주비 송금



* 자료 : 외환전산망

우리 국민의 주요국 이민 규모

(명, 시민권+영주권)

	'14	'18
미국	33,900	33,471
캐나다	9,944	7,197
호주	2,300	1,540

* 자료 : 각국 정부
(호주는 전년도 7월~당해연도 6월 이민자)



05
디플레이션? 일시적 저물가 현상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모습을 보이지만,
물가가 장기간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는 금년 0% 중반으로 둔화
'19.9월 △0.4%, 10월 0.0%

저물가의 주된 원인은 농산물과 유가 하락
농산물(전년동월비, %) : ('18.10) 15.2 vs. ('19.10) △7.5
국제유가($/bbl) : ('18.10) 79 vs. ('19.10) 59

물가하락의 범위는 제한적
'12년 이후 물가하락 품목 비중 20~30% 유지 중

금융위기 이후, 주가 · 부동산 가격 안정세
'12~'18년간 비교적 안정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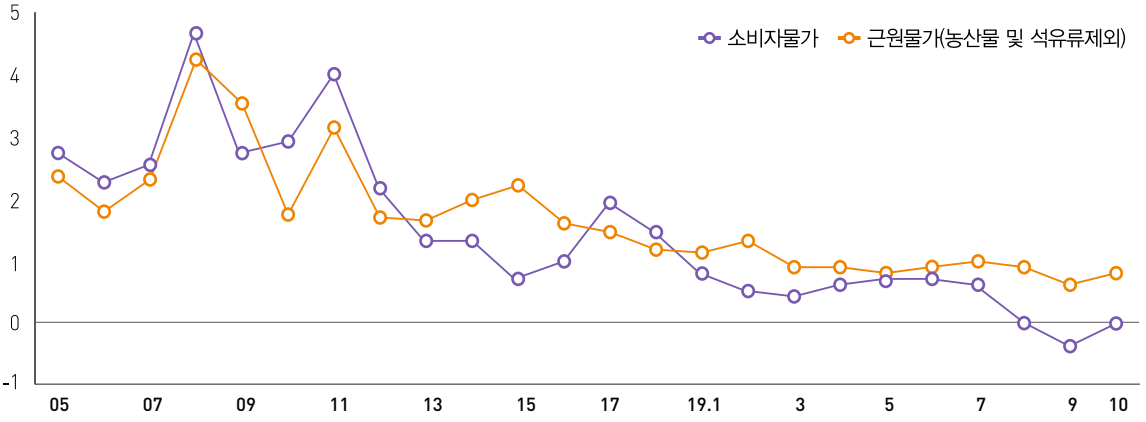
소비자물가는 '19년 연말에는 0%대 중반,
그리고 내년 초에는 1%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흐름

작년 1.5%, 금년들어 0%대 저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들어 0% 중반수준을 보이다가
  9월에 △0.4%으로 하락한 이후 10월에는 0.0%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현재 물가 상황

최근 저물가는 공급측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물가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닙니다.

- 최근 저물가는 수요측 물가압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작년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저효과와 공급측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연말부터 이러한 효과가 완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 소비자물가(%) : ('18)1.5 ('19.1)0.8 (2)0.5 (3)0.4 (4)0.6 (5)0.7 (6)0.7 (7)0.6 (8)0.0 (9)△0.4 (10)0.0

- 따라서, 현재 상황은 장기간에 걸쳐 물가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과는 다릅니다.

디플레이션이란

❶ 물가가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는 현상(IMF 기준 2년 이상)
❷ 물가하락이 일부 품목이 아닌 상품 ·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하게 발생

디플레이션 발생시의 주요 현상

❶ 가격하락 기대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면서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자기실현적 물가하락 현상이 발생
❷ 경기침체 · 자산가치 급락이 동반되면서 다시 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최근 저물가의 원인

농산물과 유가하락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농산물 가격**은 작년에는 폭염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금년에는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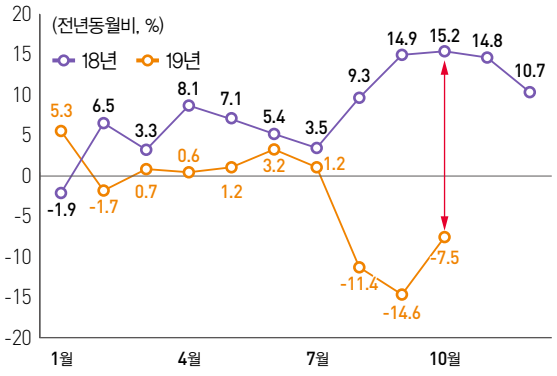
  * 농산물(%) : ('18.7)3.5 (8)9.3 (9)14.9 (10)15.2 (11)14.8 (12)10.7 / ('19.7)1.2 (8)△11.4 (9)△13.8 (10)△7.5

- **석유류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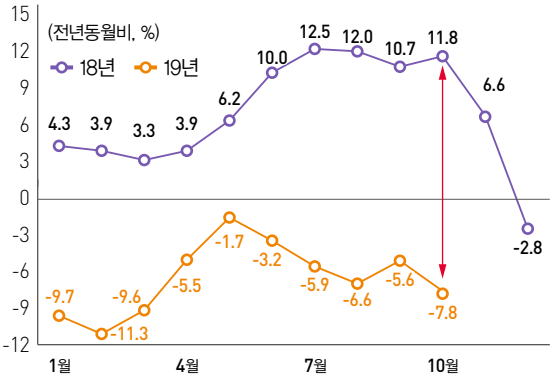
  * 국제유가($/bbl) : ('18.7)73 (8)73 (9)77 (10)79 (11)66 (12)57 / ('19.7)63 (8)59 (9)61 (10)59

-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 확대도 가계부담을 감소시켜 물가지표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농산물 상승률



석유류 상승률



향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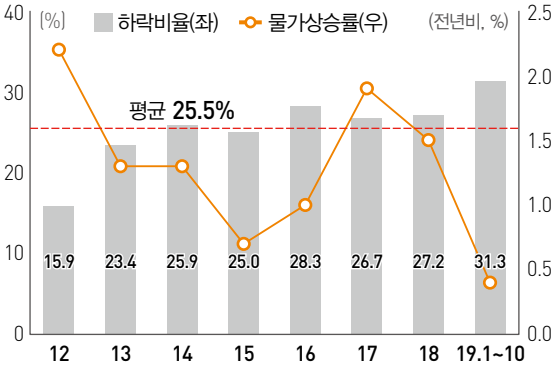
일시적 물가하락으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농산물 · 유가 하락 등 일시적 요인으로 1개월 물가가 하락하였으며, 연말에는 0% 중반, 내년 초에는 1%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됩니다.
- 물가하락 범위('12년 이후 하락품목 비중 20~30%)도 제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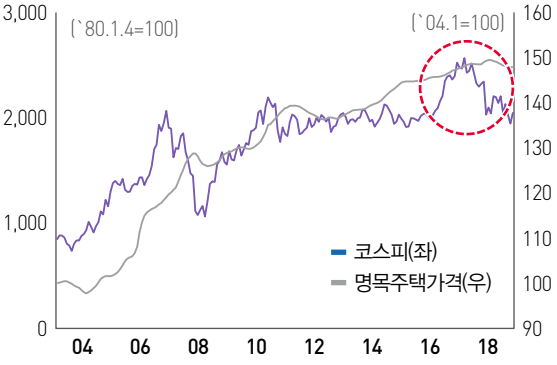
  * 10월 소비자물가 전체 460개 품목 중 146개 하락(31.7%), 283개 상승, 31개 보합

-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비교적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낮습니다.

물가상승률 및 하락품목 비중



주식, 부동산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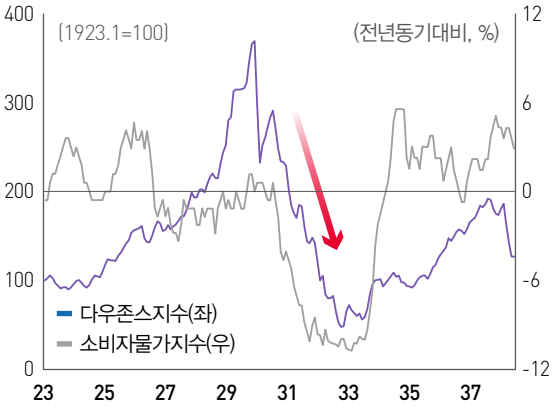
해외사례와의 비교

해외 디플레이션 사례(미국·일본)와는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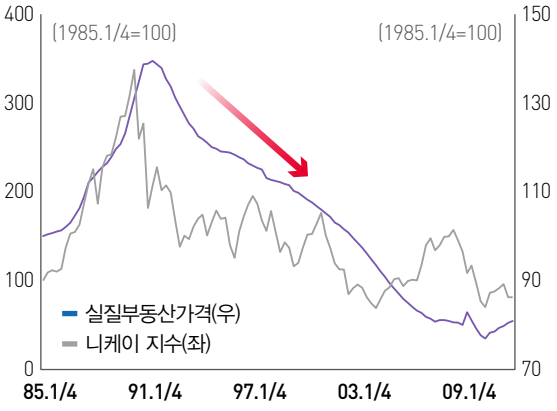
- **미국**은 **4년 연속**('30~'33년), 일본은 **7년 연속**('99~'05년)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는 등 **장기간 물가가 하락** 하였습니다.
- **일본은 물가가 연속해서 하락했던 기간 동안 가격하락 품목 비중이 평균 58.8%, 최대 67.2%('02년)로 매우 광범위한 물가하락이 나타났습니다.**
- 그 결과, 장기간 저성장이 지속되었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 미국 '30~'33년 연평균 성장률 △8.1%, 일본 '95~'12년 연평균 성장률 0.9%

대공황시기 미국 주가



일본 자산가격



수급조절 등을 통한 물가 불안요인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통해 물가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저물가라는데, 왜 낮은 물가가 체감되지 않는 걸까요?

- 물가지표는 전체 가계의 대표적 구입품목 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가구별 구입 품목과 빈도 및 소비량이 달라 지표와 체감물가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이처럼 실제 가구별로 자주 구매하는 상품 가격이 올랐을 경우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느끼는 것을 '바스켓 효과'라고 합니다.

- 가격이 하락한 품목보다 상승한 품목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가격상승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 이처럼 가격이 내려서 혜택을 볼때보다 가격이 올라서 손해를 볼 때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손실회피편향 효과'라고 합니다.

- 물가지표는 소비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따져 산정(가중평균)하는 반면, 일반적으로는 품목별 동일한 가중치(산술평균)로 물가상승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6 고용?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되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세 확대

'18년 9.7만명 → '19년 1~9월 26.0만명 증가

고용률 역대 최고 수준

15세 이상 고용률 61.5% (9월기준 '96년 이후 최고)
15~64세 고용률 67.1% (9월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 '13년 이후 최저 수준

실업률 3.1% (9월기준 '13년 이후 최저)

상용직 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

상용직 취업자 비중 69.8% (9월기준 역대 최고)

다만, 인구 둔화 가속화, 수출·투자 부진 등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개혁 등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의 양 :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가가 작년의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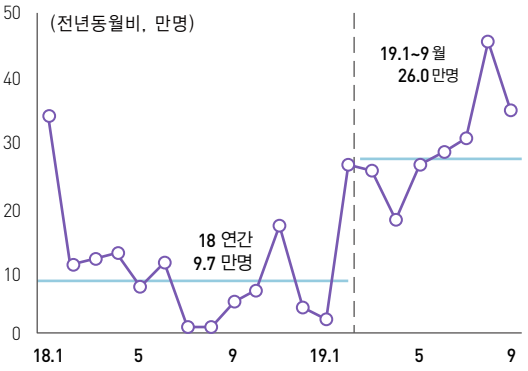
- 작년 9.7만명에 머물렀던 **취업자 증가**가 올해 들어(1~9월 평균) **26만명**으로 **확대**되었고,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 증가폭**을 **상회했습니다.**

  * '19.9월 인구 증감(33.5만명) 〈'19.9월 취업자 증감(34.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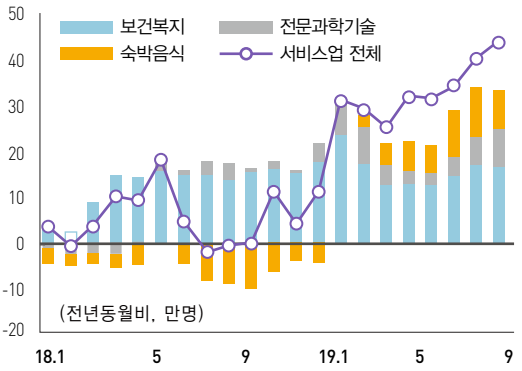
-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보건복지 · 전문과학기술**도 회복세를 보이는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입국 외국인 수 증감(만명, 전년비) : ('17)△32.5 ('18)16.8 ('19.1/4)15.8 (2/4)24.8

취업자 증가 추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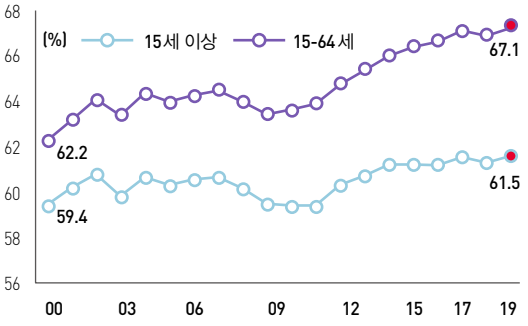


고용의 양 : 고용률,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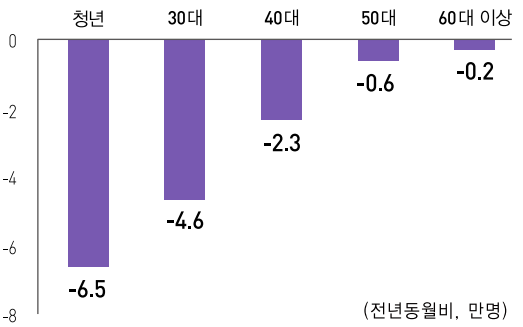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실업률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 '19.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96년 이후 최고 수준**(9월기준)을 보였으며, **15~64세 고용률**은 67.1%로 통계발표 이래 **최고 수준**(9월기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19.9월 **실업률**은 3.1%로 **'13년 이래 최저 수준**(9월기준)이고, **실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며 **'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9월기준)하였습니다.

고용률 추이(9월 기준)



'19.9월 실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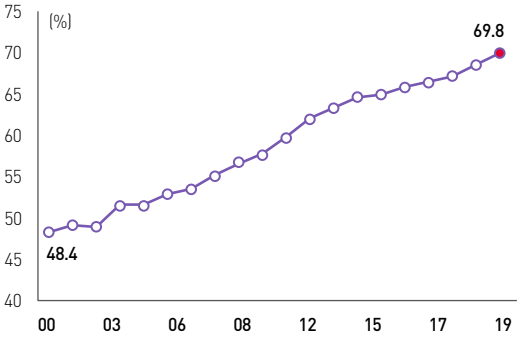


고용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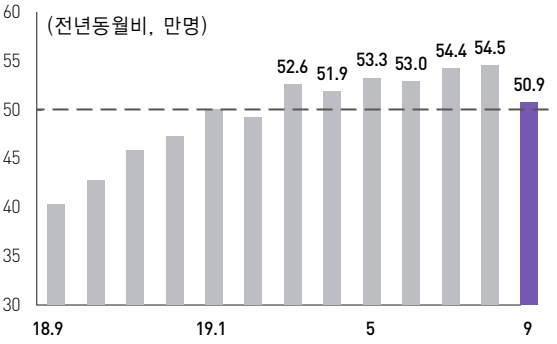
상용직 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용안정성 · 임금수준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대비 **54만명 증가**(9월기준, '14.4월 이후 최대폭)하며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9월기준)을 보였습니다.
  * 상용직 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도 지속 증가하여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9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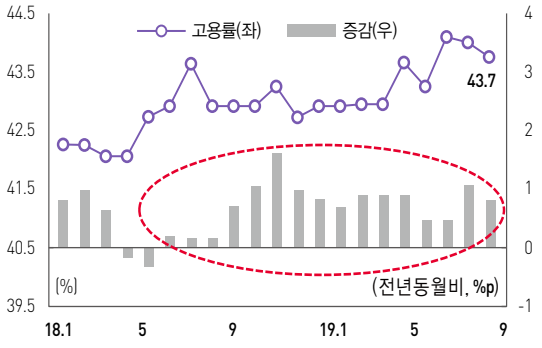


고용회복 흐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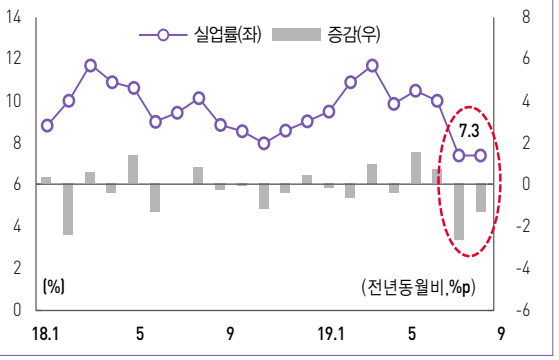
Q 청년 고용 상황은 어떤가요?

- 청년(15~29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실업자도 감소하였습니다.
  * '19.9월 청년인구 8.4만명 감소, 취업자 4.1만명 증가, 실업자 6.5만명 감소
- 그 결과, 청년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6개월 연속 상승하며 '05년 이후 최고 수준(9월 기준)을 보였고, 청년 실업률은 '12년 이후 최저 수준(9월 기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 추이



Q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이고, 세금으로 확대된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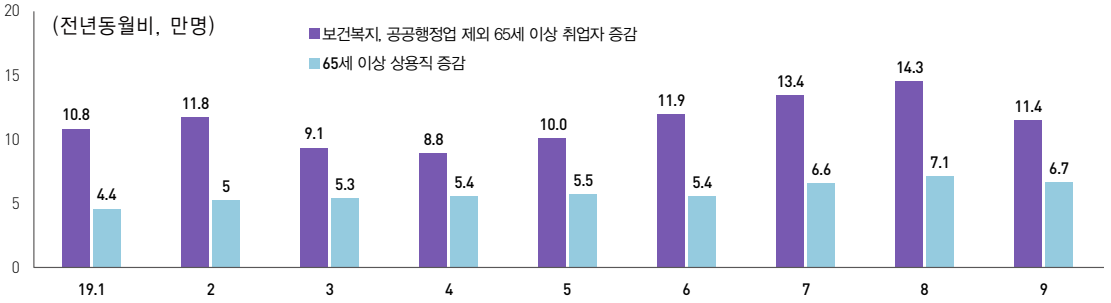
- 고령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19.9월 인구 증감(전년비, 만명) : 〈15세이상〉+33.5 〈15~64세〉△0.5 〈65세이상〉+34.0
  * '19.9월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34.8 +11.8 +23.1

  – 인구요인을 고려한 비율지표인 고용률을 비교하면, 고령층을 포함한 15세이상 고용률과 고령층을 포함하지 않은 15~64세 고용률 모두 올해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고령층 취업자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무관한 산업(보건복지·공공행정 제외) 및 지위(상용직 등)에서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물량(+10만) 〈 65세이상 취업자 증가('19.9월 +23.1만)



Q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일자리만 증가한 것은 아닌가요?

- 최근 취업자는 주 54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가 대폭 감소하고, 주 40시간 근처 적정시간대(36~44시간) 근로자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주당근로시간	전체	1~17	18~35	36~44	45~53	54이상
'19.1~9월 평균	26.0	28.1	△21.5	72.1	△5.8	△47.4
'19.9월 기준	34.8	37.1	36.6	30.9	△39.2	△36.8

- 한편, 고령화, 노인·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문화·여건변화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글로벌 추세입니다.

  –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 비중은 OECD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단시간근로자(30시간미만) 비중(%) : 〈OECD평균〉 ('05)15.2 → ('18)16.5 / 〈한국〉 ('05)8.9 → ('18)12.2

07

소득분배?
최근 악화추세가 완화되는 모습

정부정책이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면서
올해 들어 분배악화 추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배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분위소득 증가 전환(전년동기비, %)

'18.4/4분기 △17.7 → '19.1/4분기 △2.5 → '19.2/4분기 0.0

'19.2/4분기 분위별 소득증가율(전년동기비, %)

(1분위)0.0 (2분위)4.0 (3분위)6.4 (4분위)4.0 (5분위)3.2

5분위배율 확대 추세 완화

(2/4분기 기준) '16년 4.51(+0.32) → '17년 4.73(+0.22) → '18년 5.23(+0.5) → '19년 5.3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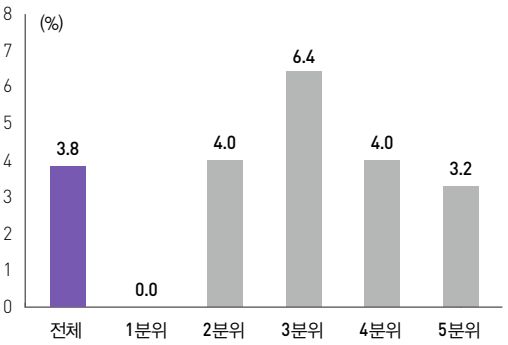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저소득층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가계살림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가계소득 동향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소득은 5분기만에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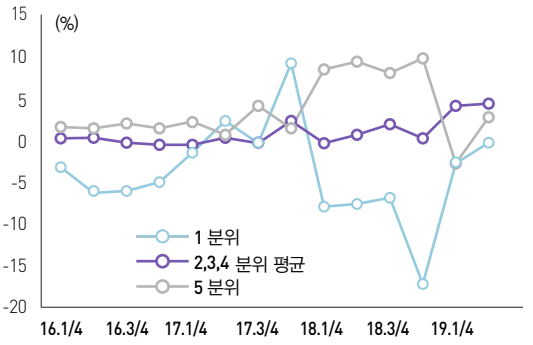
- **전체 가계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간계층인 2 · 3 · 4분위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1분위 소득**은 **'15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정책 노력**에 힘입어 **5분기만에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19.2/4분기 분위별 소득증가율



*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분위별 소득증가율



*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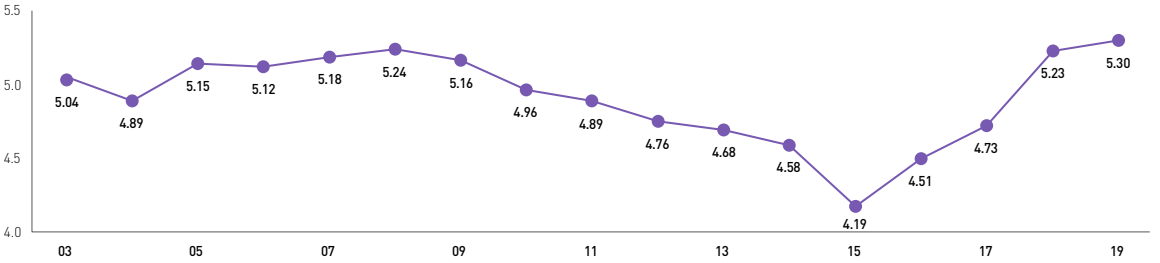
소득분배 동향

5분위 배율은 소폭 확대되었으나, '15년 이후 급격한 확대 추세가 완화되었습니다.

- **정부 정책의 분배 개선효과**가 1 · 2분기 각 분기별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정책**이 **분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정책 분배개선효과 : [1/4분기] ('17)2.38 ('18)3.01 ('19)4.11 / [2/4분기] ('17)1.95 ('18)2.76 ('19)3.77

소득 5분위배율 추이



*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2/4분기 기준)

5분위배율이란?

"상위20% 소득 ÷ 하위20% 소득"을 의미, 값이 작을수록 분배가 개선됨을 의미

정책 분배개선효과란?

"시장소득기준 5분위배율 – 가처분소득(정부 분배 정책이후 실제 가계의 소득)기준 5분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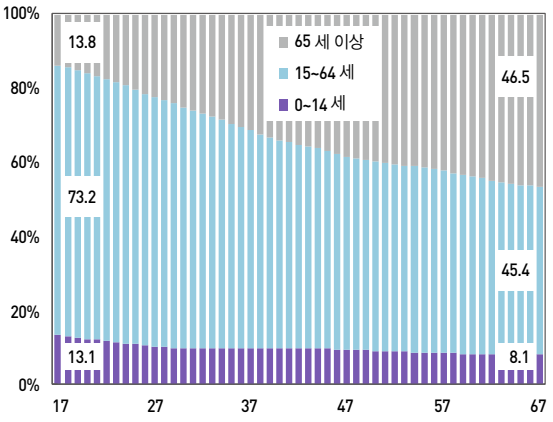
→ 값이 클수록 분배개선 정도가 큼을 의미

향후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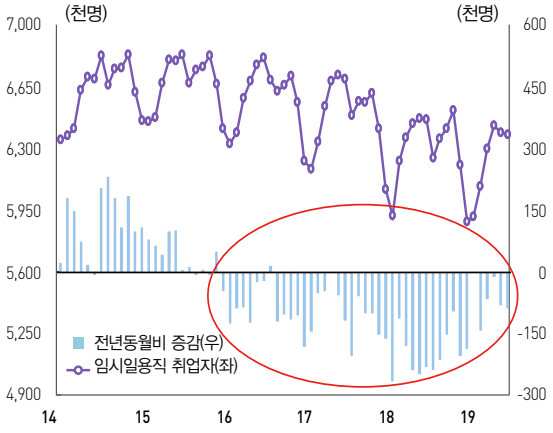
인구 ·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가 우려됩니다.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며 고령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60세 진입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 만명) : ('13)52 ('16)69 ('18)77 ('19)85 ('20)92 ('21)91
  * 1분위 60+비중(2/4분기, %) : ('15)55.2 ('16)60.1 ('17)59.9 ('18)61.3 ('19)63.8
    1분위 무직가구 비중(2/4분기, %) : ('15)39.5 ('16)45.1 ('17)41.8 ('18)54.4 ('19)54.8
- **온라인 · 자동화 확대, 플랫폼 경제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로 임시일용직 등의 일자리 축소요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시장 매출(모바일 비중) : ('15) 54.1조원(46.0%) → ('18) 111.9조원(61.6%)

인구구조 변화 전망(장래인구추계)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추이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년 하반기~'20년 주요 고용 ·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소득요건 : (단독) 1,300 → 2,000만원 (홑벌이) 2,100 → 3,000만원 (맞벌이) 2,500 →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1.4 → 2억원 미만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 30세 이상 → 연령요건 폐지

EITC 확대

반기별 EITC 지급

지급방식 : 다음연도 연 1회
→ 해당년도 반기별 지급 추가(근로소득자)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19.9월 | 10월 | 12월 | 2020년

실업급여 확대

지급기간 : (근로자)90~240일 → 120~270일 (자영업자)90~180일 → 120~210일
일지급수준 : (근로자)평균임금의 50 → 60% (자영업자)기준보수의 50 → 60%

Q 분배가 악화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실패 때문이 아닌가요?

-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이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추진되며 고용시장 등에 단기적 영향을 미쳤으나,
  - 최근 소득분배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고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 오히려 5분기 연속 감소하던 1분위 소득은 기초·장애인연금 인상('19.4월) 등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증가전환 되었습니다.

  * 1분위 소득증감률(전년비, %) : ('18.1/4)△8.0 (2/4)△7.6 (3/4)△7.0 (4/4)△17.7 ('19.1/4)△2.5 (2/4)0.0
  1분위 이전소득증감률(전년비, %) : ('18.1/4)21.6 (2/4)19.0 (3/4)19.9 (4/4)11.0 ('19.1/4)5.6 (2/4)9.7

  -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분배 개선효과도 1,2분기 모두 각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 및 개선효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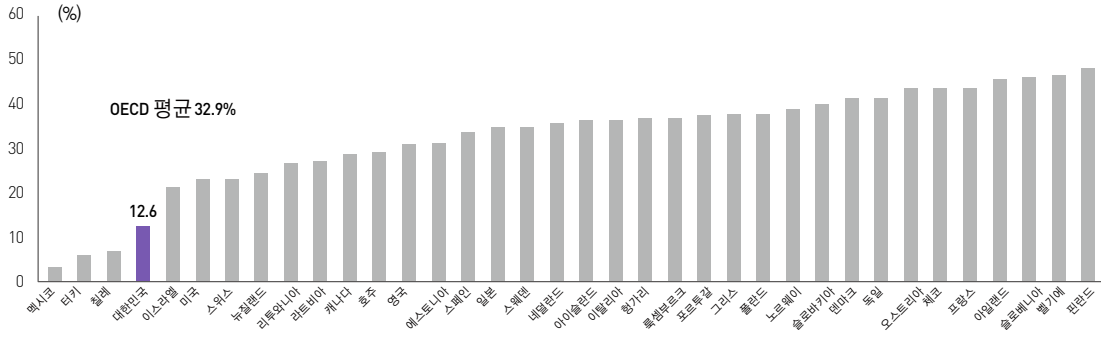
	2017				2018				2019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시장소득기준 5분위 배율(A)	7.73	6.68	7.32	6.54	8.96	7.99	8.80	9.32	9.91	9.07
처분가능소득기준 5분위 배율(B)	5.35	4.73	5.18	4.61	5.95	5.23	5.52	5.47	5.80	5.30
개선효과(A-B)	2.38	1.95	2.14	1.93	3.01	2.76	3.28	3.85	4.11	3.77

Q 우리나라 분배상황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 OECD 국가중 5분위배율('17년 7.0)은 31위, 지니계수('17년 0.355)는 30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분배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OECD 주요 해외국가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 지니계수개선율(%, OECD) : (한국)12.6 (덴마크)41.7 (독일)41.8 (프랑스)43.6 (OECD)32.9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 /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 x 100

OECD 국가의 지니계수 개선율





08

일본 수출규제?
민관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 대응 중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정부 · 유관기관 · 협회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총 1,100여 건의 기업 현장애로 해소

100+α 핵심품목을 선정하여 R&D 집중투자
'19년 예산 0.8조원 → '20년(안) 2.1조원으로 대폭 확대

3대 품목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WTO 제소(9.11일)

수출규제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10월부터 본격 가동

일본과 대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동향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과 협의·대응 및 국제 대응을 지속하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종합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의 **3대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강행에 대해
  우리 정부는 **범정부「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일본 정부	우리 정부
• (7.1일) 일본 경제산업성 수출규제 조치 공식 발표 • (7.4일) 3개 품목 수출 규제 실시(포괄허가→건별허가) • (8.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각의 결정 • (8.28일) 우리나라 백색국가 배제 시행	• (7.1일~) 수출규제 등에 강력히 항의 · 반박하고 양자협의 제안 * WTO 등 국제회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도 적극 전파 • (8.2일)「종합 대응계획」 발표 • (8.5일)「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 (8.28일)「소재 · 부품 · 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 (9.11일) 3대 품목 수출규제 WTO 제소 • (10.11일) 제1차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위원회 개최

정부는 ① **단기적으로 기업의 피해 최소화**, ② **근본적인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③ **국제 대응 및 대응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기업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지원

- 온 ·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애로해소 지원

단기공급 안정화

- 물량 및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정

2. 근본적 경쟁력 강화대책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 향후 1년 내 20대 품목 공급 안정화
- 향후 5년 내 80대 품목 공급 안정화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R&D 경쟁력 강화대책

- 핵심품목 진단을 토대로 R&D 우선순위 설정 및 맞춤형 전략 마련
- '22년까지 5조원 이상 R&D 투자

3. 국제 대응 및 대응체계 강화

국제 대응 확대

- WTO 제소 이후 한일 양자협의
- 미국 등 주요국과의 협의 및 전방위적 국제사회 대상 아웃리치

대응체계 강화

-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위원회 신설

단기적 기업피해 최소화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단체 등 32개 기관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중점 관리 기업을 지정**하여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9천 건 이상 애로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입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등 1,100여건의 기업애로 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애로유형별 지원현황(~11.5, 누적)

(단위 : 건수, 억원)

수급애로			기술개발	간접피해	합계
물량 확보	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12	10	22	2	9	55
특별연장근로	976명		화학 인 · 허가 Fast-Track		5개사

근본적 경쟁력 강화

핵심품목의 기술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100대 핵심 품목을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대책**을 실시 중입니다.

*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품목 선정
〈20대 품목〉 수급 위험이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하여 기술확보가 시급한 품목
〈80대 품목〉 업종별 취약 품목이면서 중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

20대 품목	80대 품목
➔ **즉각적 공급안정화와 조기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하여 1년 내 공급을 안정화하겠습니다.** * ① 수입국 다변화 ② 공장 신증설 신속처리 ③ 조기 기술개발	➔ **대규모 R&D에 집중 투자하고 기술 획득 방식을 다양화하여 3~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습니다.** * ① 대규모 R&D 집중 투자 ② M&A 및 해외기술 도입 등

對일본 협의 · 대응 및 국제 공조

일본 측에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채널 및 WTO 등 다자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입니다.

대응체계 재정립 및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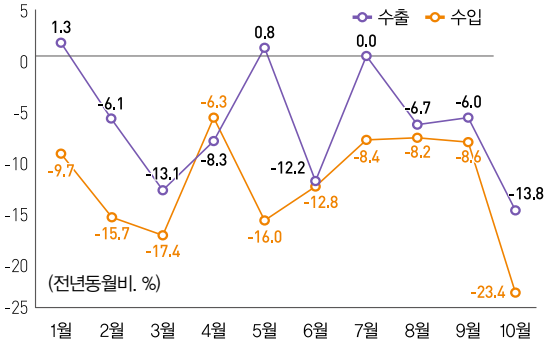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강력한 추진체계와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현안 대응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경쟁력 위원회를 10월부터 본격 가동하였으며 규제 ·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입니다.
- 또한, 소재 · 부품 · 장비 특별법의 대상 · 기능 · 범위 · 방식 ·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강력한 법적 기반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소재 · 부품 뿐 아니라 장비도 포함, '21년 일몰 예정인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 이러한 노력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회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한일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Q 일본의 수출규제로 양국 수출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했나요?

對일본 수출입 증감률



-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7.1일) 이후 양국간의 수출입 변동을 보면, 우리의 일본 수출 감소율보다 일본의 한국 수출(우리측 수입)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관세청

- 다행히도, 일본과의 갈등 관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 불확실성은 여전하므로 안심하지 않고 수출 여건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WTO에 제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일본 조치를 상세히 분석하고 증거자료 수집 절차를 거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9.11)하였습니다.
- 정부는 먼저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과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 다만,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장(양자협의요청서) 발송 → 양자협의 → (양자협의 실패시) 패널설치 요청 → 패널심 → (패소국 요청시) 상소심

Q 일본은 왜 수출규제 조치를 했나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인가요?

- 강제징용 배상판결('18.10.30) 이후 일본 고위 인사들은 자국 기업에 피해 발생시 보복 조치가 있을 것임을 언급한 바 있고, 조치 직후에도 동 판결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이후 일본이 제시하는 수출규제의 근거는 계속 변경되었고, 그 근거들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7. 1~6일 징용문제, 청구권 협정 위반	→ (경제산업성) 韓 징용문제 해결책 未제시로 양국간 신뢰 훼손 → (아베 총리)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언급
7. 7일 불화수소 제3국 반출	→ (日언론) 화학무기 제조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가 북한 등 제3국으로 유출될 우려
7. 12일 한국 수출통제 체제 미흡	→ (3대 품목) 수출관련 부적절한 사안 발생(구제적 근거 未제시) → (백색국가 배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미흡, 양자협의 3년간 부재

* (캐치올 제도) 수출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그간 일본 주요 인사의 발언, 조치 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보복적 조치라고 판단되며,
주요 해외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09

부동산시장?
투기는 철저히 차단, 실수요자는 보호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3대 원칙에 따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매매, 전월세가격 모두 안정 지속
'19.1~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0.92%, 전세가격 △1.62%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17년 12.7만호 → '19년 17.6만호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
'18년 중위소득 43% → '19년 44% → '20년 45%

주택시장 안정세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서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주택매매가격

전국 주택매매시장은 9.13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중입니다. 앞으로도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3대 원칙에 따른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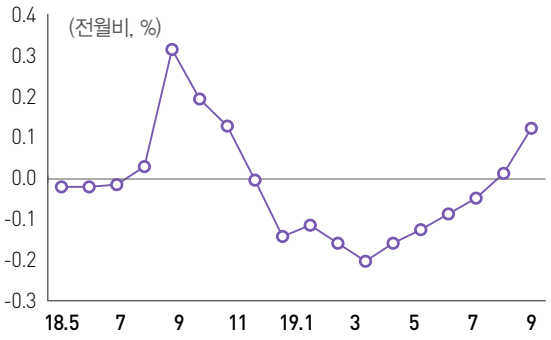
('18.9)0.31 ('19.1)△0.15 (2)△0.12 (3)△0.16 (4)△0.21 (5)△0.16 (6)△0.13 (7)△0.09 (8)△0.05 (9)0.01 (10)0.12

- 서울도 7월 이후 매매가격 상승중이나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며, OECD 주요국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9.13대책 전후 3개월('18.6~9) 서울주택상승률(%) : 2.21, 최근 3개월('19.7~10) 서울주택상승률(%) :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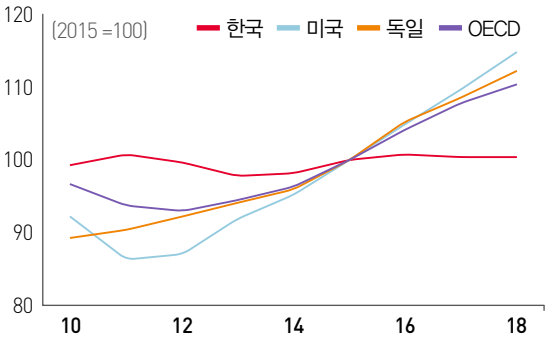
* '10~'18년 실질주택매매가격 변동률(%) : (독일)25.9 (미국)24.3 (OECD)14.4 (한국)0.9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 자료 : 한국감정원

주요국 실질주택매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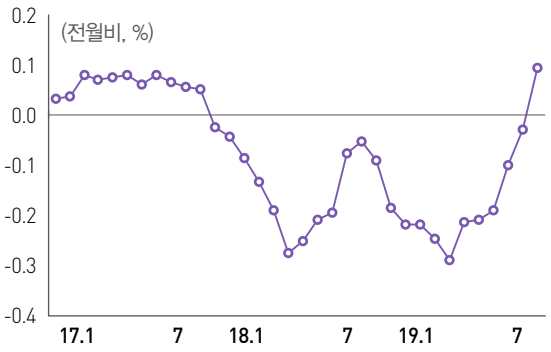
* 자료 : OECD

주택전월세가격

주택전월세시장도 '18년 이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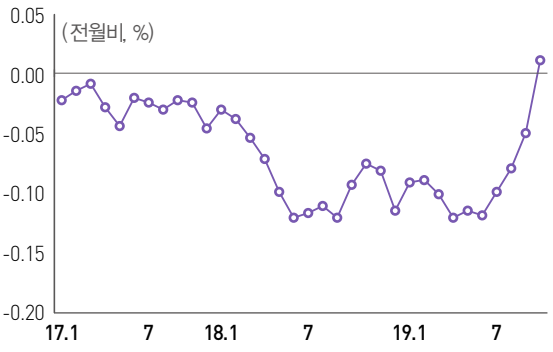
* 전국 주택전월세가격 누적변동률('18.1~'19.10월, %) : (전세)△3.39 (월세)△1.97

전국 전세시장 가격변동률 추이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 월세시장 가격변동률 추이



* 자료 : 한국감정원

주택공급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지속하겠습니다.

• 3기 신도시 개발이 포함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지속하겠습니다.

* 3기 신도시 : 경기 5곳 17.3만호 ⇒ '21년부터 주택공급(분양) 개시

* 중소규모 택지 :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 활용하여 81곳 12.7만호 ⇒ '20년부터 주택공급(분양) 개시

수도권 주택 30만호 연도별 입주자모집 계획(만호, 변동가능)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이후	계(만호)
주택수	7.0	6.7	5.8	6.1	4.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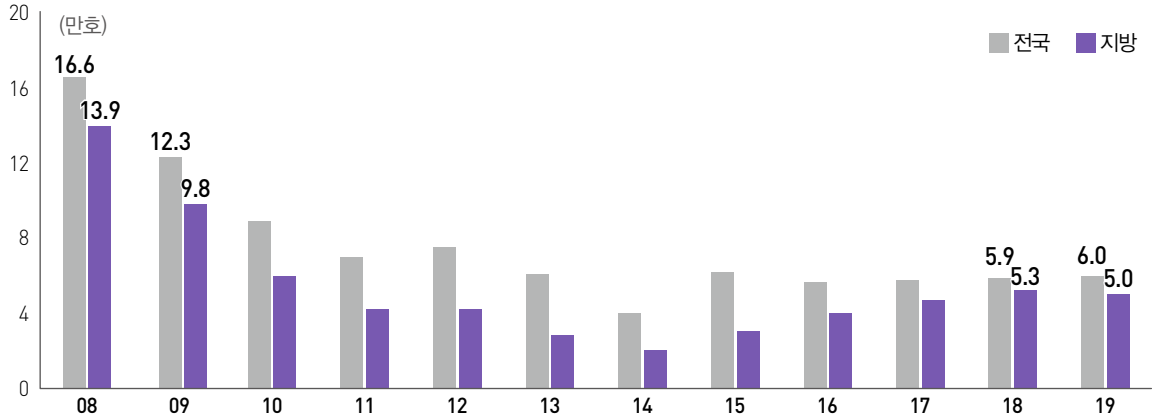
미분양

미분양 물량('19.9월, 6.0만호)은 6만호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거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09.3월, 16.6만호)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지방 미분양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미분양관리지역*을 적극 운용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총 37개 지역(수도권 6개, 지방 31개) 지정중('19.10),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지역 시장상황, 미분양재고 등을 고려한 심사항목을 적용하여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 실시

미분양 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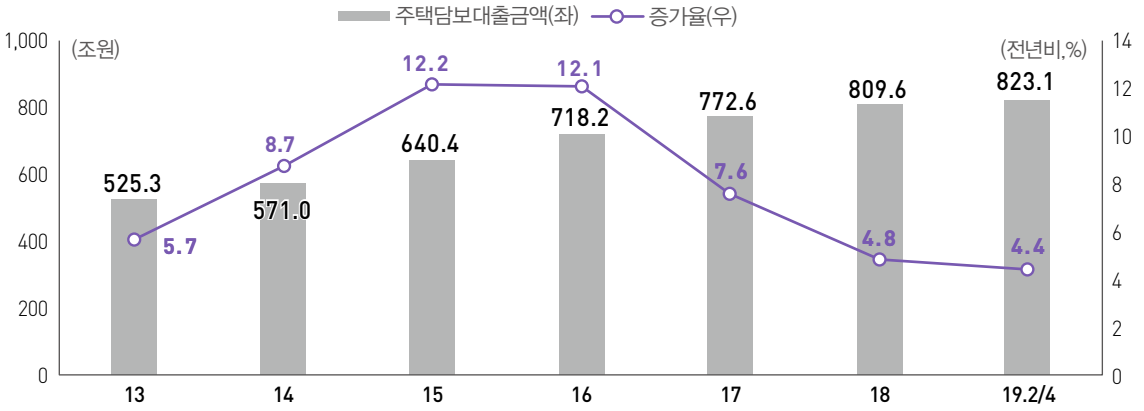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금융

주택담보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17년 이후 지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거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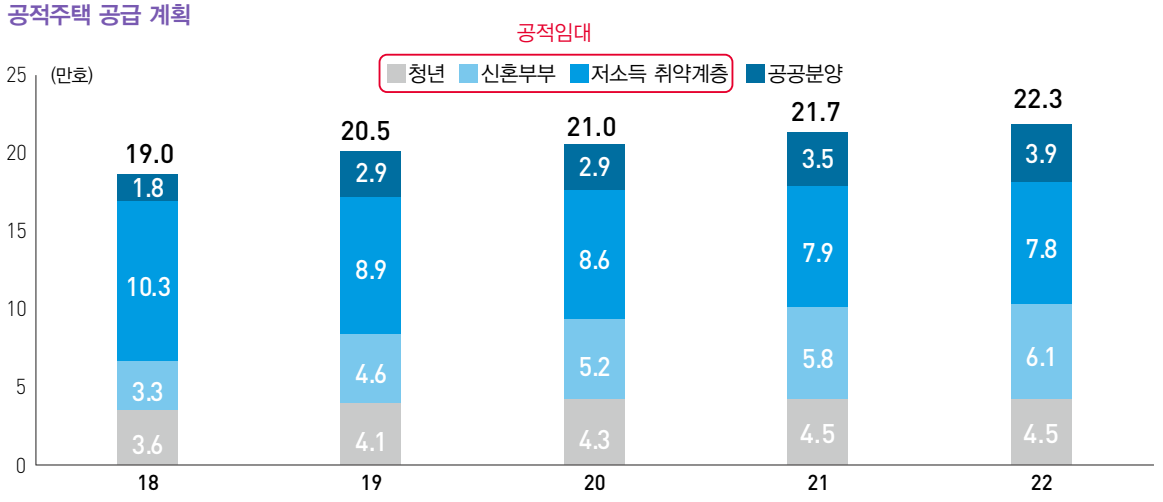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2년까지 공적주택을 104.5만호 공급하겠습니다.

• 또한 '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도 '19년 대비 최대 14.3% 상향할 예정입니다.

* 수급가구수(단위 : 만) : ('17)81 → ('18)94 → ('19.9)101.9

(예) 서울(1인가구) : '17년月20만원 → '18년月21.3만원 → '19년月23.3만원 → '20년月26.6만원

공적주택 공급 계획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0 재정건전성? 세계 최고 수준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도 양호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이며,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 국가채무(D1) 비율 39.8%
'23년까지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
('23년 46.4%,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OECD 32개국 중 4위

공공기관 부채비율 6년 연속 감소
'12년 220% → '18년 155%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확충,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보다 과감하게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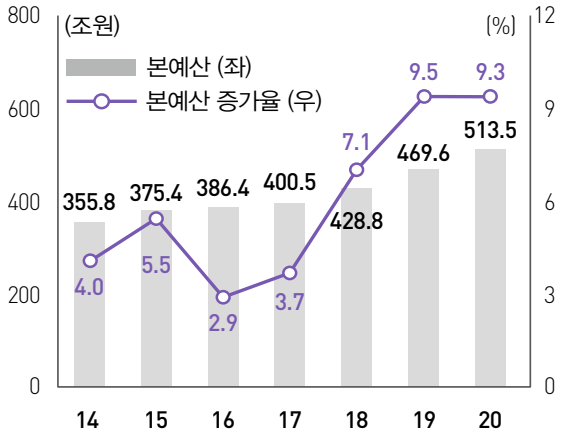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그간 미세먼지 · 산불 등 국민 안전, 구조조정 · 청년 일자리 등 민생경제 문제에는 추경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으며 '20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도 9.3% 증가한 513.5조원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추경 규모(조원) : ('17)11.0 [추경 배경 : 체감경기 악화, 청년실업] ('18)3.8 [청년일자리 · 구조조정] ('19)5.8 [국민안전 · 선제적 경기대응]

총지출 규모 및 증가율 추이



'20년 예산안 주요 내용

❶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조기공급 안정 「DNA + BIG3」 집중지원 등 혁신성장 가속화**

*(DNA) Data, Network(5G), AI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❷ **수출 · 투자 · 내수 보강,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간경제 활력 제고 뒷받침**

* 생활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

❸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안전망 보강**

*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❹ **스마트 인프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생활 편의 · 안전 증진**

•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확장재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IMF) 재정여력 있는 한국 · 독일 등에 인프라와 R&D 중심으로 재정확대 권고('19.10, 신임총재 연설)
(OECD) 확장재정이 성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하며 '20년에도 확장재정 권고('19.5, Economic outlook)
(FT) 한국의 확장적 재정을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범사례로 평가('19.9)

Q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최근 대내외 위험요인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경제 체질개선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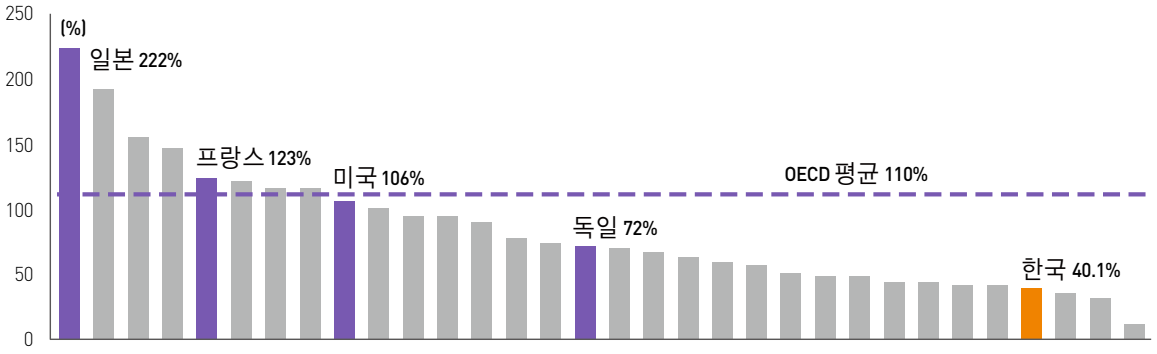
– 확장재정을 통해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 관리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합니다.

- '20년 국가채무비율(D1 기준)은 39.8%로 예상되며,
  중기적(~'23)으로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국가채무비율(%, D1,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 : ('18)35.9 ('19)37.2 ('20)39.8 ('21)42.1 ('22)44.2 ('23)46.4
- 국제 비교시 활용되는 D2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OECD 32개국 중 4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17년 기준)



* 자료 : OECD('19.5)

※ 참고 : 부채 통계 유형

유 형	규모(GDP대비)	포괄범위	활 용	발표시기
국가채무(D1)	'18년 결산, 680.5조원(35.9%) '20년 예산, 805.5조원(39.8%)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 기금	국가재정운용계획	결산(익년 4월) 예산(전년 8월)
일반정부 부채(D2)	'17년 735.2조원(40.1%)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비교(IMF, OECD)	익년 12월
공공부문 부채(D3)	'17년 1,044.6조원(56.9%)	D2 + 비금융공기업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Q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적정수준(예 : GDP 대비 40%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 재정 제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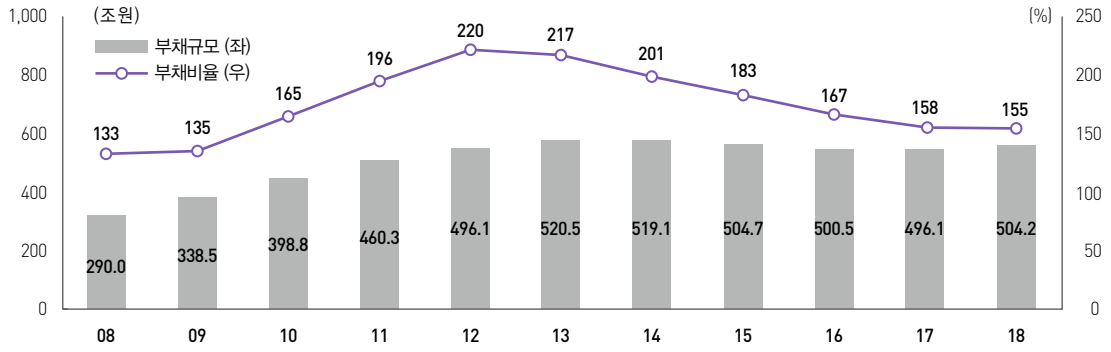
  * 국제적으로도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EU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 수준(60%)도 별도로 적정 수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EU 설립당시 회원국의 채무 평균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경영효율화와 부채관리 노력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13년 520.5조원 → '18년 504.2조원 수준으로 안정세이며, 부채비율(부채/자본)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도 '0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 ('09)29 → ('12~'13)36 → ('14)33 → ('15)30 → ('16)29 → ('17)27 → ('1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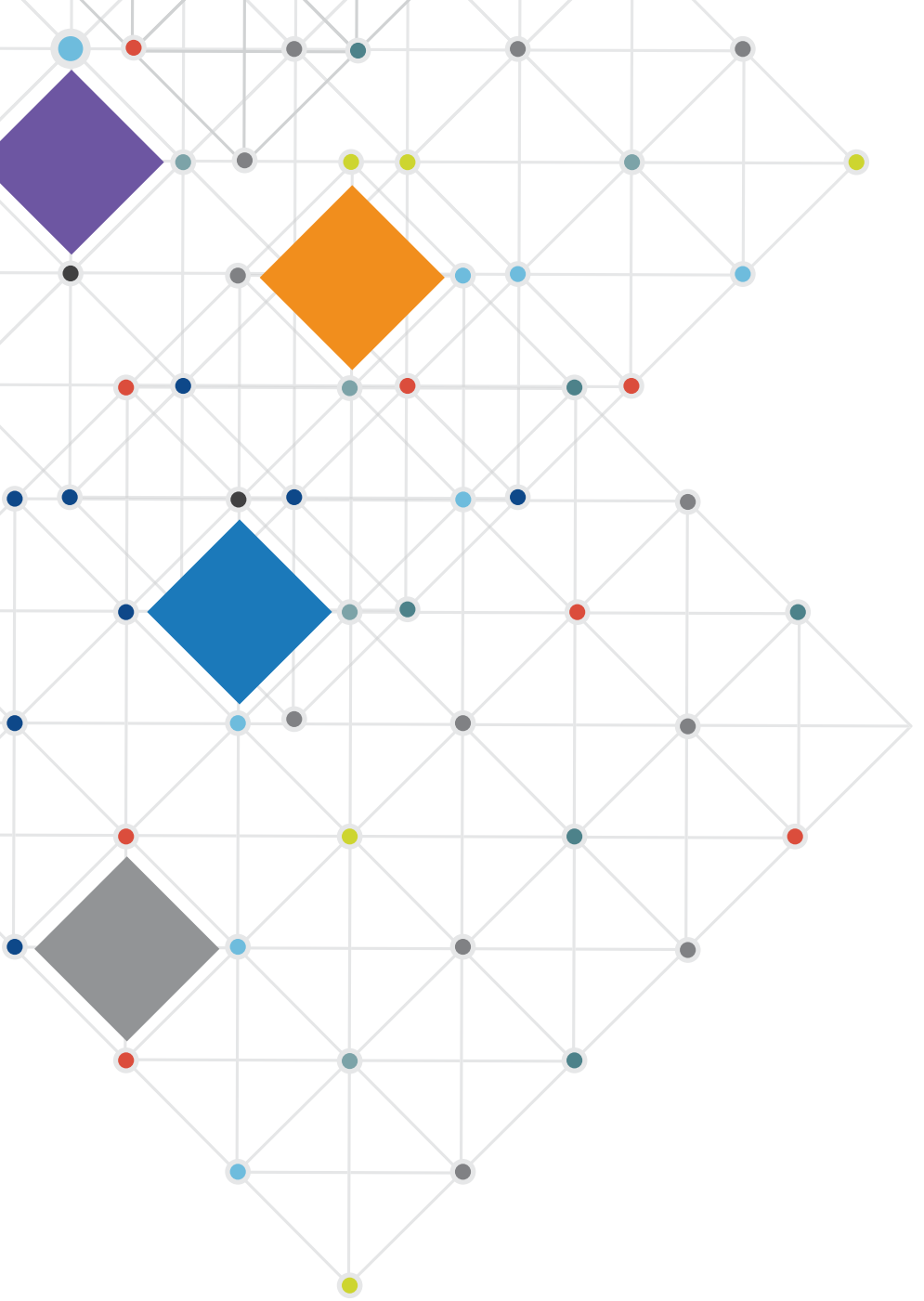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세입확충, 지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Q 건강보험공단, 한전 등 주요 기관 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는데, 앞으로 공공기관 부채 비율 괜찮을까요?

- '18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난임수술 · 틀니 · 초음파 등 건보 적용)와 국제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한전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 건보공단 : 〈부채규모, 조원〉 ('17)7.9 → ('18)11.3 / 〈당기순이익, 조원〉('17)0.4 → ('18)△3.9
  한전 : 〈부채규모, 조원〉 ('17)108.8 → ('18)114.2 / 〈당기순이익, 조원〉('17)1.4 → ('18)△1.2
  전체 공공기관 : 〈부채규모, 조원〉 ('17)496.1 → ('18)504.2 / 〈당기순이익, 조원〉('17)7.2 → ('18)0.7

- 다만,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년 연속 하락('18년 155%)하였으며, 당기순이익도 6년 연속 흑자('18년 0.7조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바로알기

혁신성장

PART 2

혁신성장? Dynamic Korea를 위한 성장전략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위기를 기회로, 경쟁력 강화 3종세트 마련

창업 · 벤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제2벤처 붐" 확산

신산업? 제2·제3의 반도체 산업 발굴에 총력

서비스산업? 성장·일자리 보물창고로 육성 중

규제혁신? 先허용·後규제 등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성과사례 창출

공정경제? 기업 투명성과 상생의 분위기 확산



01
혁신성장?
Dynamic Korea를 위한 성장전략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위하여 규제혁신 · 기업투자, 산업혁신, 미래먹거리, 벤처창업의 4대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 기업투자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 기업투자 유도

산업혁신
단기 애로 해소 + 중장기 경쟁력 확보

미래먹거리
DNA + BIG3 등 전략투자 · 선도사업 성과 가시화

벤처창업
제2벤처 붐 + 선순환 생태계 조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혁신인재 육성, 규제 · 제도 정비 등 사회전반의 혁신역량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 기업투자 촉진

혁신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며 민간 · 기업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규제혁신) 규제개혁 체계를 구축하여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19.10.2일 기준

- 규제샌드박스 : 現 적용사례 141건 창출
- 포괄적 네거티브 : 現 172건 전환 완료
- 규제입증책임제 : 연내 1,800여개 행정규칙 정비 추진, 現 1,017건 완료

규제 샌드박스 국가간 비교

국가	도입 범위	심사 기간 및 승인 실적
	실물경제 포함하는 4대 분야	2~3개월, 금년중 100여건 이상
	금융 중심, 최근 에너지분야 확대	통상 6개월, 年 40여건 승인
	금융 중심, 최근 에너지분야 검토	'16년 도입 후 승인 6건
	'18년 실물경제 제한적 도입(4건)	통상 6개월, '18년 후 승인 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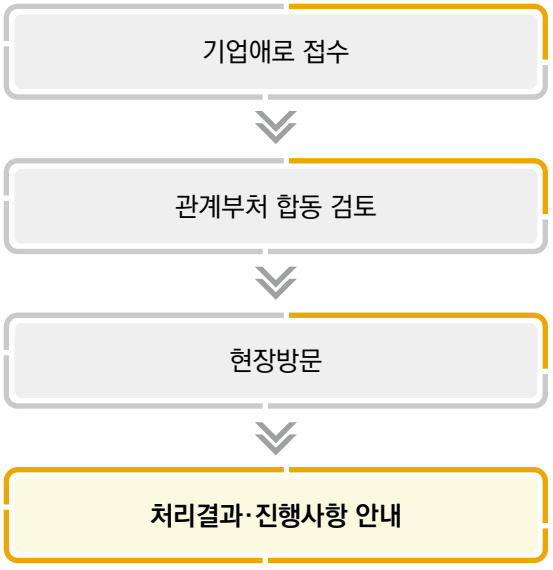
– 네 차례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여 현장규제(Small Ball)를 신속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 '18.9.27일, '18.12.19일, '19.4.17일, '19.10.14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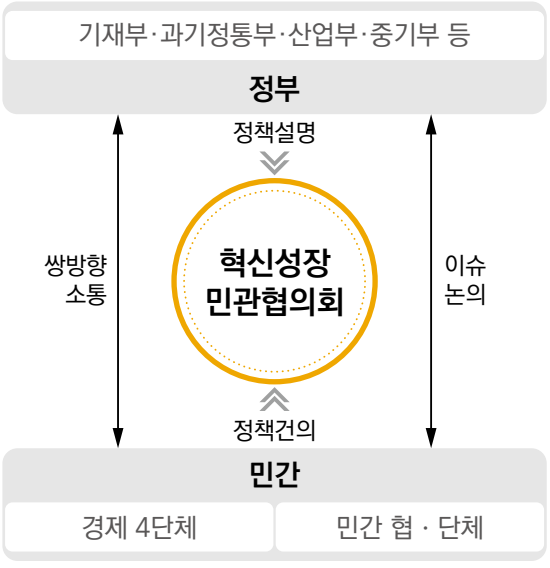
• (기업투자)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약 16.1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 · 지원하였고,
기업 문제해결 및 애로해소 창구를 구축하여 신규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 1, 2단계 기업투자 지원 8.3조원, 3단계 기업투자 지원 7.8조원

투자지원 카라반



혁신성장 민관협의회



산업혁신

단기적으로는 애로 해소를,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 :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 **(주력산업)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을 수립하여 제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산업별(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지원방안도 지속 마련 중입니다.**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조선산업 활력제고 및 보완 방안('19.4),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19.8),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신산업 : 스마트공장 · 산단,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 **(신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대 신산업 (스마트공장 · 산단,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을 선정하여 육성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 핀테크 활성화 규제개선방안('19.6),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19.9),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등

서비스산업 :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혁신TF 구축,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 등을 토대로 서비스산업 주요 과제의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 중입니다.**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19.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19.5), 물류산업 혁신방안('19.6),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 등

미래먹거리

DNA + BIG3와 전략투자 · 선도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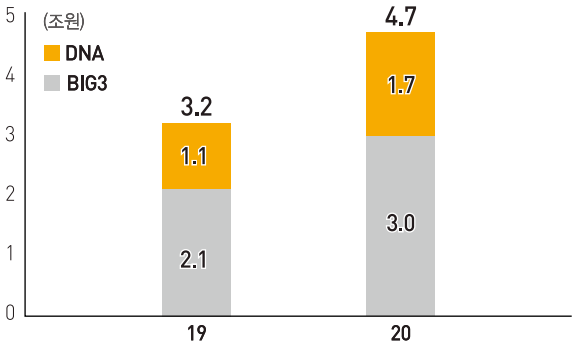
- 산업여건 ·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20년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DNA (데이터 · AI, 5G) +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관련 예산 : ('19) 3.2조원 → ('20) 4.7조원 (44.7% 증액↑)

- DNA+BIG3 외 전략투자 · 선도사업 분야도 지속적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소경제, 스마트 공장 · 산단,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 新산업, 드론

DNA + BIG3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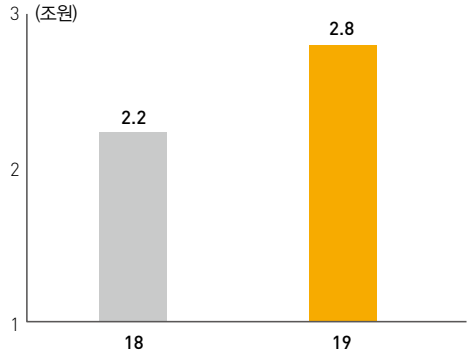


벤처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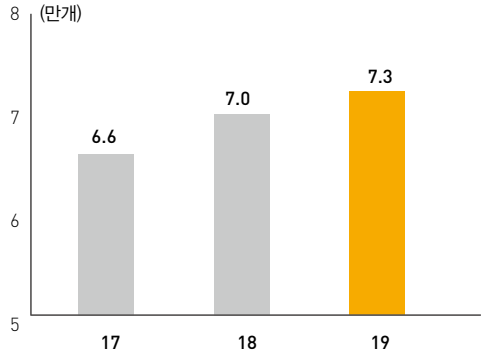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등 다양한 벤처·창업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제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성장단계별(창업 →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신규 벤처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신설법인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벤처투자(1~8월)



신설법인수(1~8월)



**혁신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이를 통해 성과 창출 가속화 및 경제·사회 시스템 개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02

소재·부품·장비산업?
위기를 기회로, 경쟁력 강화 3종세트 마련

범정부 차원 T/F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핵심품목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투자가 확대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 3종세트 마련

-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 지원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신설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비

국내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공급 안정화

- 미국, 중국, 유럽 등 수입선 다변화
- 공장 증 · 신축 등 국내 생산능력 확대
- 핵심품목 생산에 대한 투자 적극 유치

이번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반드시 우리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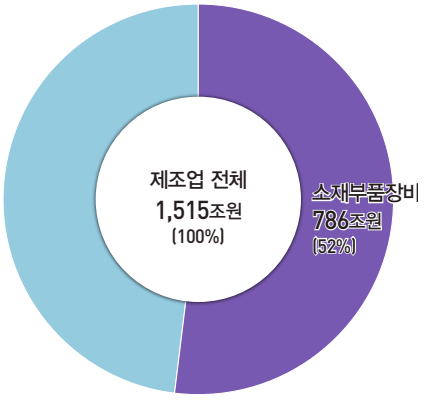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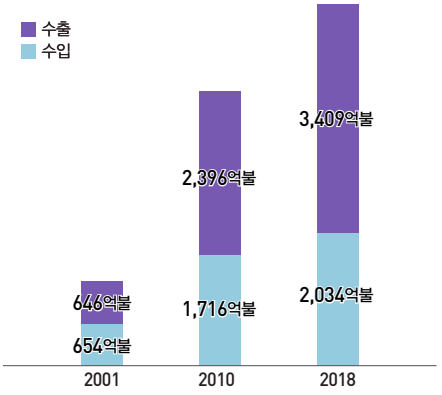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의 핵심요소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은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만성적 해외 의존구조라는 취약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별 수입 중 소재 · 부품 · 장비 수입 비중(%) : (일본) 69.0, (미국) 41.2, (EU) 46.5
-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중요도

소재 · 부품 · 장비 생산현황



소재 · 부품 · 장비 교역 추이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목표

- 업계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선적으로 공급 안정화를 달성해야 할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100+a개의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20개의 핵심전략품목은 1년 이내에, 80개 핵심 전략품목은 5년 이내에 반드시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단기

안보상 수급위험이 큰 품목,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

→ 1년 이내 공급안정화

장기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

→ 5년 이내 공급안정화

경쟁력 강화 3종 세트 마련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3종세트로 이번에는 확실히 성과를 내겠습니다.

• 첫째로, 수요-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간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예산, 세제, 자금, 규제개선 등의 패키지 정책을 이행합니다.

주요 기업간 협력모델 유형

수직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간)	**협동 연구개발형** • 기술로드맵 공유 R&D → 기술활용 R&D	**공급망 연계형** •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 (공동 Fab 등)
수평적 협력 (수요기업 간)	**공동 투자형** • 협력사 공동 개발 / 시설투자	**공동 재고확보형** • 공동 구매, 보관

대 · 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협력일 경우

대중소 상생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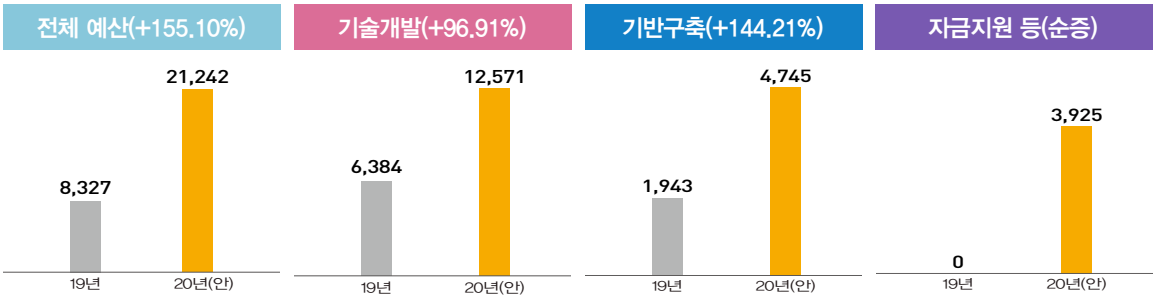
• 둘째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 관련 정부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내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신속한 대책 이행을 위하여 '19년 추경으로 2,732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20년 정부안으로 2.1조원 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20년도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 사업 (안)

(억원)

구분	'19년	'19년 추경	'20년 안	비고
계	**8,327**	**2,732**	**21,242**	
기술개발	**6,384**	**1,277**	**12,571**	
• 소재부품기술개발	2,360	650	6,027	• 핵심전략소재 자립화 기술개발(66개) • 약 200개 과제 신규 추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217	764	• 340개 기술개발 과제
•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	-	373	• 전략소재 중심 24개 원천 기술개발
기반구축	**1,943**	**955**	**4,745**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641	400	1,834	• AI 가상 시뮬레이션 SW 구축(200억원) • 소재 테스트장비 구축(15개 센터, 790억원) • 대기업 양산라인 평가(50건 이상, 400억원)
• 공공나노팹 장비 고도화	-	-	723	•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장비 확충
자금 지원 등	-	**500**	**3,925**	
• 산업은행 출자(성장지원펀드)	-	-	2,000	• 소재부품산업 특별지원 용도 펀드 조성
• 신용보증기금 출연	-	-	600	• 중소기업 투자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19년 대비 '20년도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 예산(안) 증가추이(억원)



• 셋째로, 협력모델, 특별회계 등의 대책들을 안정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정비를 추진(9.30일 발의)하고,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10.11일)하였습니다.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위원회 구성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위원회
(위원장 : 경제부총리 / 부위원장 : 산업부장관)

전문위원회	대중소 상생협의회
특별위원회	(중기부 지원)

실무 추진단 (산업부 내)

〈특별위원회〉 특정 현안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현안별 특별위원회 운영
〈전문위원회〉 소재부품, 장비, 제도개선 3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대중소 상생협의회〉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참여

핵심품목의 수입국 다변화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 3대 핵심품목(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공정상 핵심 소재)에 대해 미국, 중국, 유럽산 등 제품을 공정 테스트 중이며, 불산액의 경우 테스트 완료 후 일부 생산공정에 일본산 이외 제품을 투입 중입니다.
• 3대 품목 이외의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 거점 무역관(38개소)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예) 밸브 관련 가社에 6개국 32개처, 웨이퍼 관련 나社에 9개국 34개처 등 7개 기업에 수입국 다변화 가능기업 발굴 · 제공 (3개 기업 요청 관련 조사 중)

수입국 다변화 진행상황

품목	수요기업	기업	진행상황
불산액	A社, B社, C社 등	중국(D社, E社) 등	일부 생산공정 투입 중
불화수소가스	A社, B社 등	미국(F社) 등	제품 테스트 중
EUV 레지스트	A社 등	유럽(G社) 등	제품 테스트 중
로봇제어부품	A社 등	유럽, 중국, 미국 등	제품 테스트 중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능력 확대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고 있습니다.

- 국내 공급기업인 H社는 불산액 기존공장을 증설 · 가동 중이며, 완공된 신규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능력이 2배 확대됩니다.
-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요기업인 A社, C社는 H社 불산액 테스트를 완료하고 일부 공정에 투입 중입니다.

국내생산 확대 진행상황

품목	수요기업	기업	진행상황
불산액	A社, B社, C社 등	H社 등	증설공장 가동 중, 신규공장 완공
불화수소가스	A社, B社 등	I社 등	신규공장 완공 예정
불화 P.I	C社, D社 등	J社 등	신규공장 완공 예정
실리콘웨이퍼	A社, B社 등	K社 등	공장증설 완공 예정
블랭크마스크	A社, B社 등	L社 등	신규공장 완공 예정

핵심품목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탄소섬유(효성, 8.20), 친환경차 부품(현대모비스, 8.28) 등 핵심 소재 · 부품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 효성
'20년부터 '28년까지 전주공장 추가증설에 1조원 투자



친환경차 부품 : 현대모비스
'21년 양산목표로 울산공장 신설에 3천억원 투자

-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 핵심 소재 · 부품기술을 보유한 해외 주요기업의 인수, 합작법인 설립도 진행 중입니다.

SK siltron DUPONT

SK 실트론,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 발표(9.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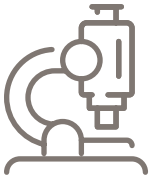
HYUNDAI APTIV

현대차, 미국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와 Joint Venture 설립 발표(9.23일)

핵심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유망한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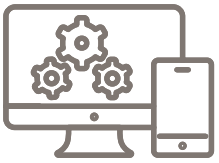
• 국내 투자의향이 있는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해외기업에 대해 국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국내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비회사 다社,
한국내 R&D센터 유치 결정(9월말)



미국 화학소재분야 라社,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검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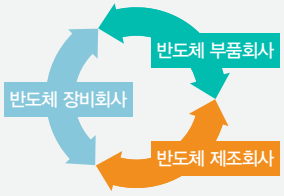


독일 소재분야 마社,
반도체 ·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시설 투자 검토중

건강한 산업 생태계 형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 기획부터 기술개발, 실증, 신뢰성 · 양산평가를 거쳐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수요 · 공급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사례

국내 공급기업인 반도체 부품회사 A社와 반도체 장비회사 B社의 경우,
국내 수요기업인 반도체 제조회사들과 신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등을 협력하여 수행 중

• 정부는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등 211개의 협력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협력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3종세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 안정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03

창업·벤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제2벤처 붐" 확산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한 대책 수립·발표('19.3)하였고 이후
창업·벤처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제2벤처 붐이 가시화

신규 벤처투자 최고치 기록
'19.1~8월 : 27,944억원(전년비 +25.5%)

신설법인 수 사상 최대치
'19.1~8월 : 72,596개(전년비 +3.1%)

유니콘 기업의 급격한 증가
'16년 2개 → '19.9월 9개(세계 6위)

제2벤처 붐 대책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창업·벤처 성과를 확산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벤처 · 창업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정책을 추진하여 벤처창업·투자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입니다.

- 최근 미국 ·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벤처 · 창업기업들이 각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예) 美 구글 · 페이스북 · 아마존, 中 바이두 · 알리바바 · 텐센트 등
- 우리정부도 혁신성장의 핵심축으로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정책들을 마련해왔습니다.
  – 그 결과, 벤처창업 · 투자가 확대되는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살아난 벤처창업·투자의 불씨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질적 성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2벤처붐으로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①창업, ②투자, ③성장, ④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와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추진을 위한「제2벤처 붐 확산 전략」발표(3.6일)



창업 : 기술인재 高기술 창업 및 新산업 분야 창업 촉진



- 사내창업, 대학내 창업 등 지원 확대
- 바이오, 빅데이터 등 신산업 중심 스타트업 발굴 · 육성

투자 :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도



- 초기 엔젤투자에 대한 보증확대(2배, 최대 3억원)
- 크라우드 펀딩 모집한도 및 지원대상 확대
- 비상장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지원(BDC 도입 등)

성장 : 기업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 적극 지원



-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펀드 조성(12조원),
  예비 유니콘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도입
- 해외VC 들이 국내 창업 ·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

회수 · 재투자 : 벤처투자의 회수 · 재투자 촉진



- '21년까지 M&A 전용펀드 1조원 조성
-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인프라 :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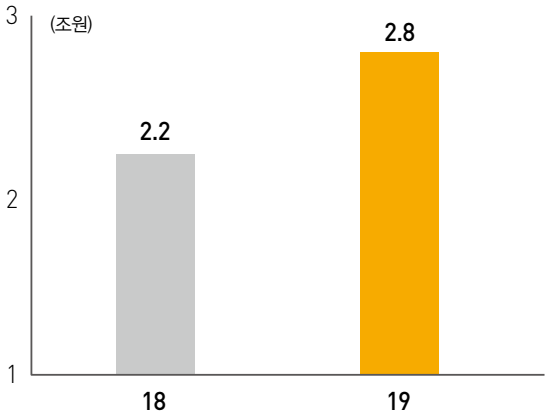
- **(인재 양성)** AI 대학원 선정,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교육생 본격 운영 등
- **(인프라 조성)** 네트워킹형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송도)의 구축 추진
- **(붐 확산)** 도전! K-스타트업 2019,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ComeUp 2019) 등 추진

제2벤처 붐 대책 시행 후 창업 · 벤처 지표가 지속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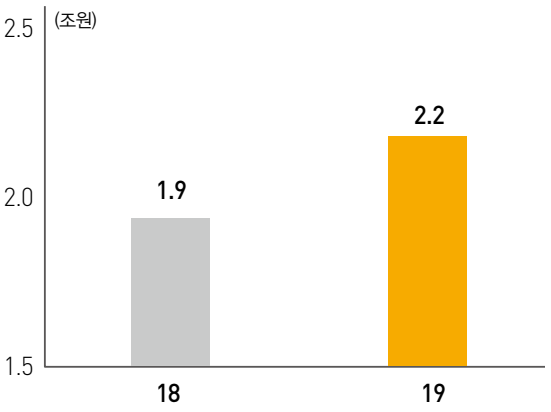
벤처투자 지표가 개선되고 민간의 참여도 확대되었으며 혁신창업도 최고치를 기록중이며, 유니콘 기업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규 벤처투자(1~8월)



벤처펀드 결성액(1~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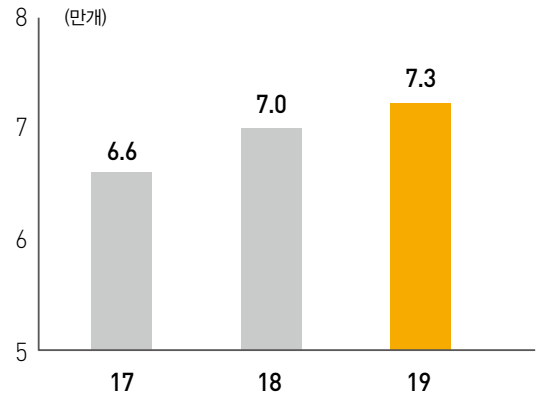


특히, 모태펀드 등 정부의 출자가 마중물이 되어 벤처투자 펀드에 민간참여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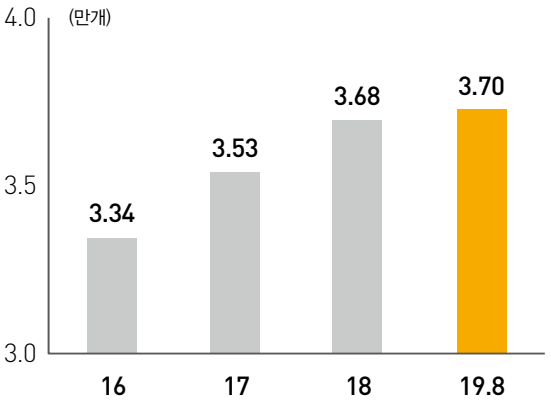
* 벤처투자 펀드 민간출자 비중(%) : ('17) 60.5 → ('18) 65.4 → ('19.1~8) 73.3

• 신설법인 수는 사상 최대치를 지속 경신하고 있으며 기술성 있는 벤처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설법인 수(1~8월)



벤처기업 수



• 유니콘 기업이 급격히 증가('16년 2개 → 現 9개)하고 있으며,
벤처천억기업은 10년 연속 증가하여 572개('17년말) 기록하고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CB Insights) : ('16) 2 → ('17) 3 → ('18.8) 4 → ('19.2) 7 → ('19.9) 9

– 특히, 9개 유니콘 기업중 7개는 모태펀드출자 펀드의 투자를 받아 모태펀드의 선별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유니콘 기업 20개,
M&A 투자회수 비중 1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4
신산업?
제2·제3의 반도체 산업 발굴에 총력

데이터·AI, 5G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핵심 신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육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장규모 확대
'17년 4,547억원 → '18년 5,843억원

5G 가입자수 대폭 증가
'19.4월 27만명 → '19.9월 346만명

핵심 신산업 분야 주요 기업 중장기 투자 계획
미래차 '30년까지 7.6조원,
시스템반도체 '20년까지 133조원,
바이오헬스 '30년까지 40조원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 조기성과를 가시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20년에는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DNA(혁신인프라)와 BIG3(핵심신산업) 분야에 집중투자하여 혁신성장을 全산업으로 확산하겠습니다.

• (DNA : 데이터 · AI, 5G) 全산업과 융 · 복합이 가능한 혁신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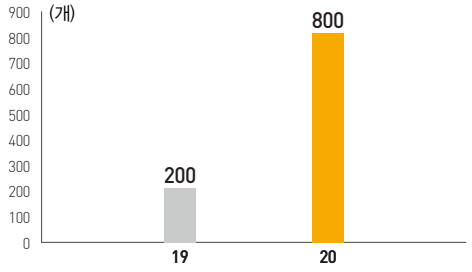
데이터 · AI

빅데이터 플랫폼(10개*), 센터(100개) 구축 · 운영을 통해 데이터 생산 · 유통 촉진, 컴퓨팅자원 · AI바우처 등 AI 활용 지원**, 광주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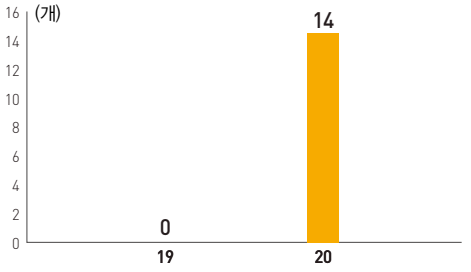
*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 (고성능 컴퓨팅자원) '19년 200개사 → '20년 800개사, (AI바우처) '20년 14개사(신규)

(데이터) 고성능 컴퓨팅자원 지원



(AI) AI 바우처 지원



5G

5G 핵심기술을 재난 · 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
동대문 VR 쇼핑몰, 광화문 실감형 문화체험공간 조성 등 5G 기반 콘텐츠 개발

* 5G 기반 노후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20년 50개), 5G 기반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 등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기존 산업의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겠습니다.

미래차

■ 미래차 보급확대 및 인프라 구축(누적)
- 전기차 및 전기충전소
  '19년 9.9 → '22년 43만대
  '19년 5,200 → '22년 10,000개소
-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19년 0.6 → '22년 6.7만대
  '19년 86 → '22년 310개소

■ 테스트베드(K-CITY)고도화
- 교통혼잡 시스템 도입
- 악천후 시스템 구축

시스템 반도체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기술개발
- ('20~'29) 1조원 투자
- 미래 반도체기술 상용화 및 원천기술 개발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 센터
- 차별화된 인프라 제공, 팹리스기업 지원
- 지원센터 출범식('18.7)

바이오 헬스

■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0~'29)
- ('20~'21) 2만명 규모
- 질병극복 · 산업발전 기반

■ 생명 · 보건의료 정부 R&D
- ('17) 2.6조원
  → ('25) 4조원 이상

신산업 분야 시장규모 확대 및 민간 투자 활발

조기에 혁신성장 전략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혁신성장 확산을 촉진하겠습니다.

• (DNA) 데이터 · AI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며,
세계최초 5G 상용화(4.3일)로 5G 융합서비스 발전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 AI

빅데이터 시장규모 ('17) 4,547억원 → ('18) 5,843억원

AI 전문기업수 ('16) 27개 → ('18) 43개

5G

5G 가입자수 : ('19.4) 27만명 → (9) 346만명

5G 기지국 개수(만 개) : ('19.4) 4.9 (5) 5.9 (6) 6.1 (8) 8.9 (9) 9.2

• (BIG3) 주요 기업도 핵심 신산업 분야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현대차는 수소차 50만대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30년까지 7.6조원 투자,
美 앱티브(APTIV)社와 $40억 가치의 자율차 관련 합작법인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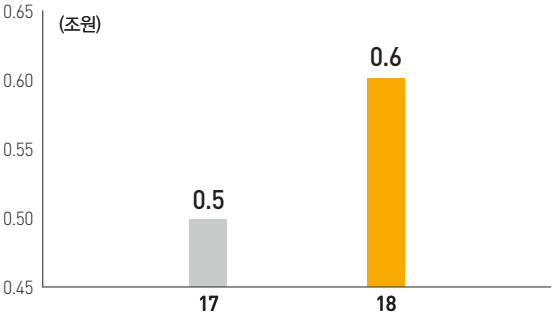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는 '20년까지 국내 R&D 73조원 및 생산시설 확충 60조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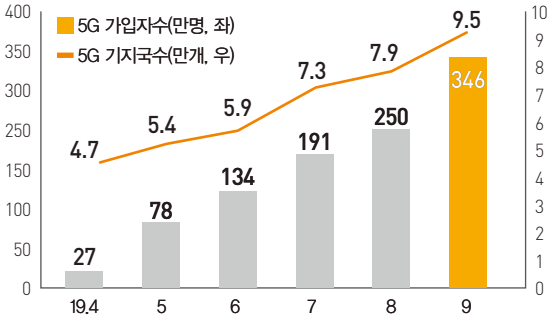
바이오헬스

셀트리온은 '30년까지 R&D 및 설비투자 등에 40조원 투자

빅데이터 시장규모



5G 가입자 및 기지국 수(준공신고 기준)



DNA+BIG3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혁신성장의 전산업 확산을 촉진시키겠습니다

05 서비스산업? 성장·일자리 보물창고로 육성 중

서비스산업 전반 및 유망서비스 업종별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대폭 확대(전년비, 만명)
('18) 5.1 ('19.1/4) 24.0 (2/4) 29.5 (3/4) 39.2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연간목표(30건) 초과달성
10.2일 기준 승인건수 100건 돌파

관광경쟁력 세계 16위, 역대 최고 순위
('15) 29위 → ('17) 19위 → ('19) 1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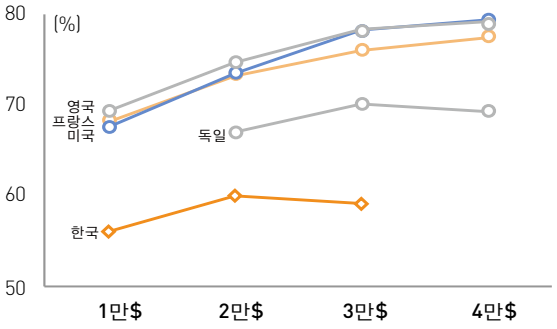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정부 차원의 서비스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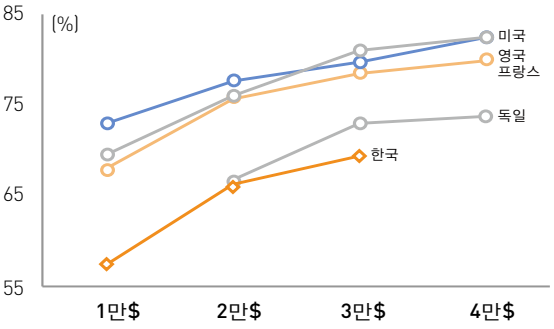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입니다.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 · 건설 등 여타산업에 비해 훨씬 큽니다.
  * 부가가치유발계수(한은, '15) : (서비스)0.875 (건설)0.804 (기타)0.82 (제조(공산품))0.642
    취업유발계수(한은, '15, 명/10억) : (서비스)15.2 (건설)12.5 (기타)11.4 (제조(공산품))8.0
- 한편 경제성장이 고도화되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된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성장수준은 저조한 편입니다.

국민소득 단계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국민소득 단계별 서비스업 고용 비중



- 즉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寶庫)이자 발전여지가 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절실합니다.
  *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OECD 평균수준으로 제고시 1%p이상 성장률 제고 효과(KDI, '19)

서비스산업 혁신정책 추진

① 유망서비스 업종별 경쟁력 강화 + ②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의 투트랙(two-track) 접근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19.1)하고 정책과제 발굴 · 협의를 위해 유망서비스 업종별로 민관합동 TF를 구성 · 운영하였습니다.
  * 총괄TF 팀장 : 기재부 차관보 / 업종별 TF 팀장 : 각 주무부처(문체부 · 복지부 · 국토부 등) 국장
-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19.6.26)
  * '16.7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이후 3년만의 종합전략(약 80건의 신규과제 포함)

서비스업-제조업간 차별 완화



① 재정 · 세제 · 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에 있어 서비스업-제조업 전반의 차별 해소

서비스 R&D 체계 구축



②표준화 · R&D · 규제혁신 등 제조업에 비해 체계화 되지 못한 기초인프라 확충

서비스업-제조업간 융합 확산



③ 서비스업-제조업간 융합발전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



④ 혁신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화

유망 서비스업



⑤관광 · 콘텐츠 · 물류 O2O 등 유망서비스 분야 육성 · 보완대책 마련

• 관광 · 보건 · 콘텐츠 · 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혁신전략도 지속 발표하였습니다.('19.4~)

관광

- 관광거점도시 조성, 한류 · 평화 · 역사관광 추진 등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마련(4.2일)
- 해양레저관광(5.15일), K-Culture 페스티벌(6.26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7.17일) 등



보건

-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출시 등 全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마련(5.22일)
-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병행마련(5.20일)



콘텐츠

- 정책금융 강화, 실감콘텐츠 육성, 한류 확산 등 콘텐츠 3대 혁신전략 마련(9.17일)
- 실감콘텐츠(10.7일), 영화(10.14일), 만화(10.17일)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지속 마련



물류

- 물류분야 제도혁신(생활물류법 제정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물류인프라 확충 등 물류산업 혁신방안 마련(6.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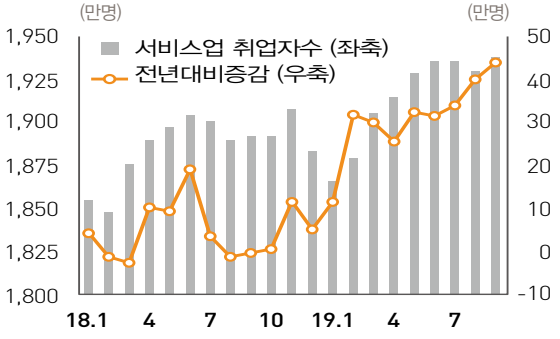
서비스산업 정책추진 효과

서비스산업 일자리가 확대되고, 규제혁신 시범사례가 창출되는 등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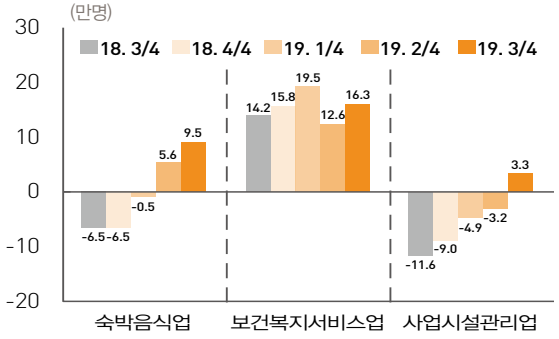
• **서비스산업 일자리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18) 5.1 ('19.1/4) 24.0 (2/4) 29.5 (3/4) 39.2

서비스업 취업자 수 추이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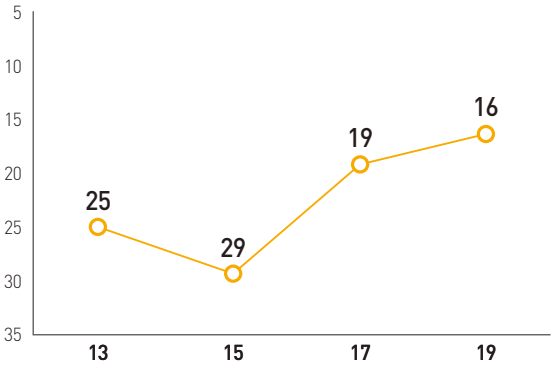
관광

- 방한 외국인관광객 수 회복 추세
  * '19.1~9월 누적 약 1,300만명(전년비 +16.1%)
- 관광경쟁력 세계 16위, 역대 최고 수준
  ('17년보다 3단계 상승, W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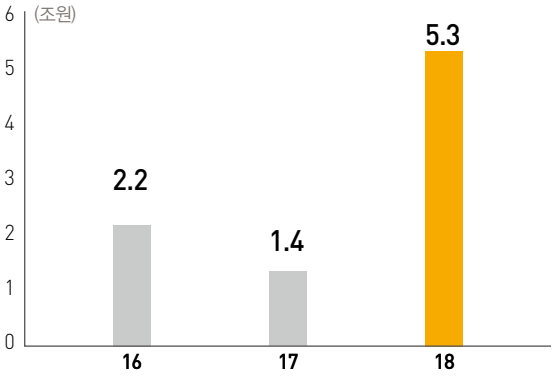
보건

-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확대, 규제 신속 확인제 도입 등 규제 혁신
- 바이오헬스 벤처투자가 최초로 ICT 추월 등 자금집중
  * 벤처투자 규모(억원, '19.1~9) : (바이오) 8,928 vs (ICT) 8,049
- 신약 개발 확대('17년 29건 → '18년 30건), 신약 기술수출 증가 등 기술이전 확대

WEF 관광경쟁력 순위 추이



신약 기술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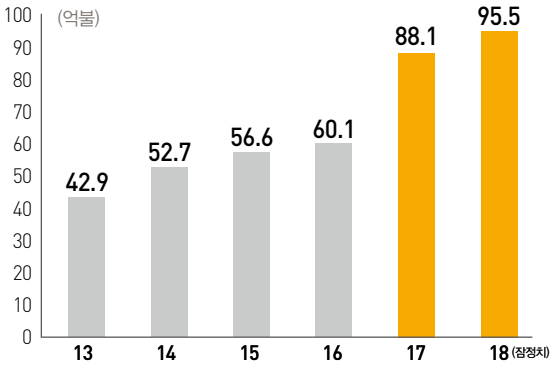
콘텐츠

-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확대
  *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차트 1위 석권('19.4), 영화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19.5) 등
- 콘텐츠산업 수출액 지속 증가
  ('18년 기준, 전년대비 8.4% 성장)
  * ('14) 52.7 → ('15) 56.6 → ('16) 60.1 → ('17) 88.1 → ('18) 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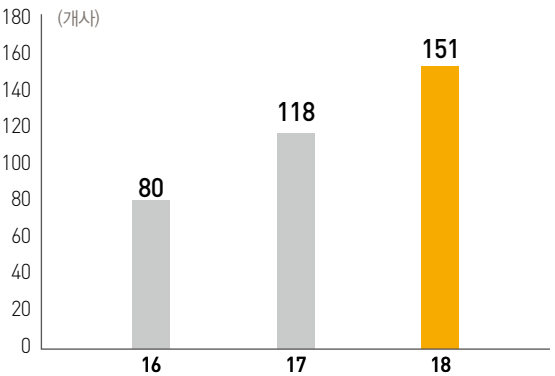
물류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거점 배송센터 유치
  * 美 아이허브('19.1), 美 오플닷컴('19.2), 中 성원그룹('18.3) 등
- 택배 물동량 연 10% 내외 증가 및 생활물류 스타트업 창업* 확대
  * ('15) 40개사 → ('16) 80 → ('17) 118 → ('18) 151

콘텐츠산업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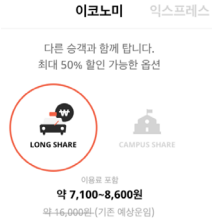
생활물류 스타트업 창업



• **서비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 승인건수가 100건을 돌파하였습니다.(연 목표 30건)**

* 분야별로는 금융 53건, 보건 · 의료 12건, 콘텐츠 12건, 공유경제 10건, 기타 14개 등(10.2일 기준)

서비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계	
	**심야시간대**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택시 동승 중개 허용** (7.11일, 실증특례) ↓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 수입증대 등 기대		의사가 심전도 데이터를 전송받아 **내원 안내** 또는 **1 · 2차 의료기관**으로 **방문 안내**(2.14, 실증특례) ↓ 환자 불편감소 및 안전강화, 사회적 비용 절감 등 기대

향후 계획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신설하여 서비스발전법 입법이 지체되더라도 법안상의 산업 육성책*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이행하겠습니다.**

* ❶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 운영, ❷ 기본 · 시행계획 마련, ❸ 규제혁파 · 갈등해소,
❹ 서비스–제조업간 제도적 차별 개선, ❺ 재정 · 세제 · 금융 지원 강화,
❻ 정보화 · 통계화 · 표준화 · R&D 등 기초 인프라 구축

• **또한,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 구성 · 운영을 통해 파급력이 큰 핵심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마련한 서비스산업의 종합적인 혁신전략 및 4대 유망서비스업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습니다

06

규제혁신?
先허용 · 後규제 등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성과사례 창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통해 해묵은 과제들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규제혁파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금년목표 100건 조기달성(141건, '19.10.2일 기준)
규제 샌드박스 "1+4법" 완성
정보통신법 · 산업융합법(1.17일), 금융혁신법(4.1일), 지역특구법(4.17일), 행정규제기본법(7.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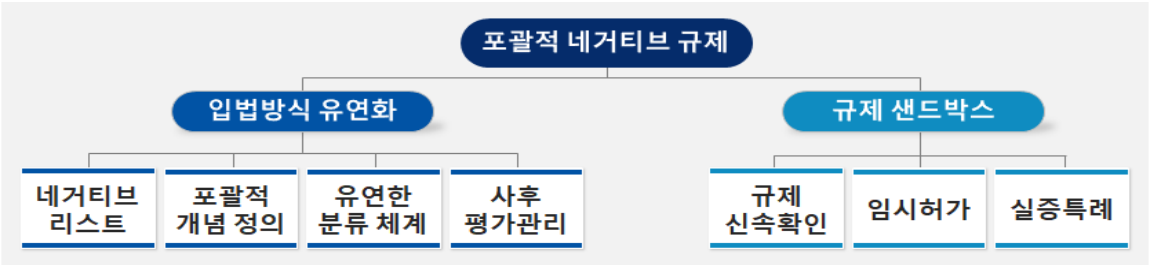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 연내 1,800여개 행정규제 정비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 폐지

현장 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 지속 추진 중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총 230건 과제 발굴 · 개선 추진중),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총 240건 개선중),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산업·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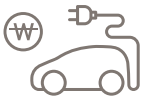


- (입법방식 유연화) '先허용 · 後규제 원칙'의 입법방식 유연화 시행*(7월)을 계기로 신산업 · 기존산업 관련 법령 제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 '18.1월부터 1~4차에 걸쳐 네거티브 전환과제 377건 발굴 · 개선 지속 추진중

- (규제 샌드박스) "1+4법「정보통신법 · 산업융합법(1.17), 금융혁신법(4.1), 지역특구법(4.17)+행정규제기본법(7.17)」"을 완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10월까지 141건의 사례를 창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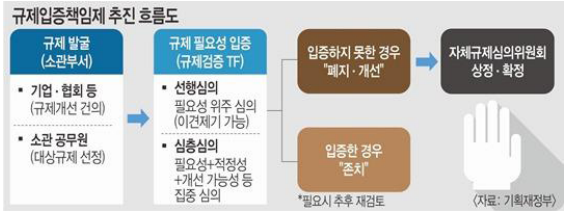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현대차, 실증특례)	전기차 과금형 충전 콘센트 (차지인, 임시허가)	웨어러블 심전도계 환자 관리 (휴이노, 실증특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페이 · KT, 임시허가)
			

금년 목표인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창출을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 및 현장 기반 규제혁신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	현장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
	
금년 중 全부처로 확대 실시하여 총 1,800여개의 행정규칙 규제를 폐지 · 개선중입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총 230건 과제 발굴 · 개선중),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총 240건 발굴 · 개선중),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의 성과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시스템을 적극 전환하겠습니다.

*** 규제입증책임제란?**

획기적인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그 규제가 폐지되는 제도,
기재부 시범실시('19.1.23~3.7)를 통해 ①외국환거래, ②국가계약, ③조달 규제 총 272건중 83건(30.5%)을 폐지 · 개선
→ 全부처로 확산('19.3~6)하여 1,017건 규제 개선

Q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 유예해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분야 및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수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한국		외국
신속확인	VS	해당없음
임시허가		해당없음
실증특례		실증특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범위 비교

국가	도입 범위
	실물경제 포함하는 4대 분야
	금융 중심, 최근 에너지분야 확대
	금융 중심, 최근 에너지분야 검토
	'18년 실물경제 제한적 도입(4건)

- 법 시행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규모는 세계적으로 승인 사례가 가장 많은 영국(40여건)에 비해 3배가 넘는 등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적용 사례를 창출하였습니다.

심사기간 · 승인규모 비교

국가	심사 기간 및 승인 실적
	2~3개월, 금년중 100여건 이상
	통상 6개월, 年 40여건 승인
	'16년 도입 후 승인 6건
	통상 6개월, '18년 후 승인 4건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현황

구분	지정 사례(개)
산업융합	33
ICT융합	32
금융혁신	53
지역혁신	23

07

공정경제?
기업 투명성과 상생의 분위기 확산

'공정경제'는 정당한 경쟁과 보상을 보장하는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주체의 혁신의지를 일깨울 것이라 기대됩니다.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대다수 해소
93 → 4개, 자산 10조원 이상 기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향상
하도급분야 개선응답 비율 : 87 → 94%

상생결제 규모 100조원 돌파

공정경제 확산을 통해 시장경제가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을 다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경제 정책 추진 필요성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 우리 경제는 그간 성장과정에서 불투명한 경영문화 · 불공정 거래관행 등으로 인해 경제체질이 약화되었습니다.
- 공정경제 정책을 통한 정당한 경쟁과 보상 룰 확립은 경제주체의 혁신의지를 일깨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공정경제 정책 추진

①기업 소유 · 지배구조 개선, ②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③상생문화 조성, ④소비자 권익 보호 등 다각도로 공정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❶ 기업 소유 · 지배구조 개선



- 기존 순환출자 해소 유도를 위한 재계와의 소통 강화
-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코스피 상장사 대상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19)
-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추진
- 사익편취 규제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등 대기업 집단 시책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안 국회 제출, '18.11)

❷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 유통 · 가맹 · 대리점 등 4대 분야 대책 순차 마련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 · 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 하청의 대금 조정신청요건 확대 등
- 공공기관이 거래관행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범거래모델 마련 · 확산('19.6~)
- 불공정행위 감시 · 감독 강화 (자동차 · 전기 · 건설 등 불공정행위 빈발업종 집중점검 등)

❸ 상생문화 조성



- 민간 중심 상생협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생결제 법제화('18.9 시행) 및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 추진('18.11 도입발표)
-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18.12.13 시행)
- 민간주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 · 지원

❹ 소비자 권익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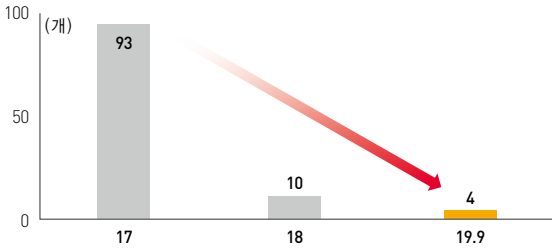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18.5)하고, 소비자 권익 제한과제 개선권고
- 손쉬운 정보제공 · 피해구제 등을 위해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확대 · 개편('18.1)
-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 · 기준 개선 및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시장에서 공정경제의 온기가 확산

순환출자 상당부분 해소, 불공정거래 개선 체감도 향상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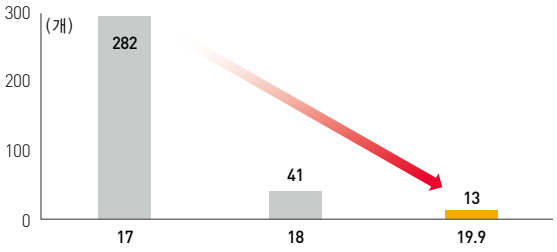
•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등 기업 소유 · 지배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수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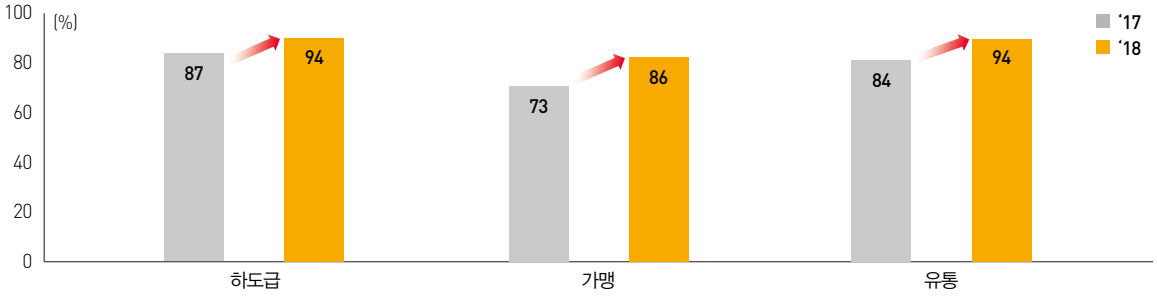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수



*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기준

•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관행의 개선 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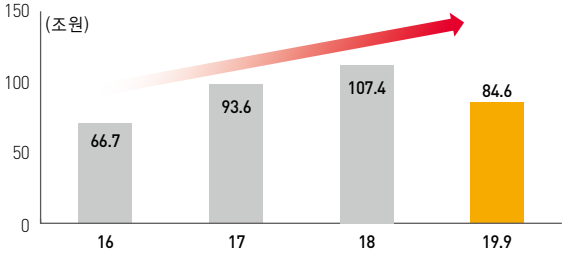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응답 비율



* 2018 서면실태 조사결과(공정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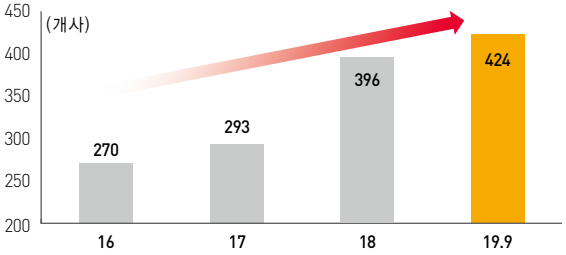
• 상생결제, 성과공유제 등 정부 · 민간이 함께 하는 상생협력 뿐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자발적 상생협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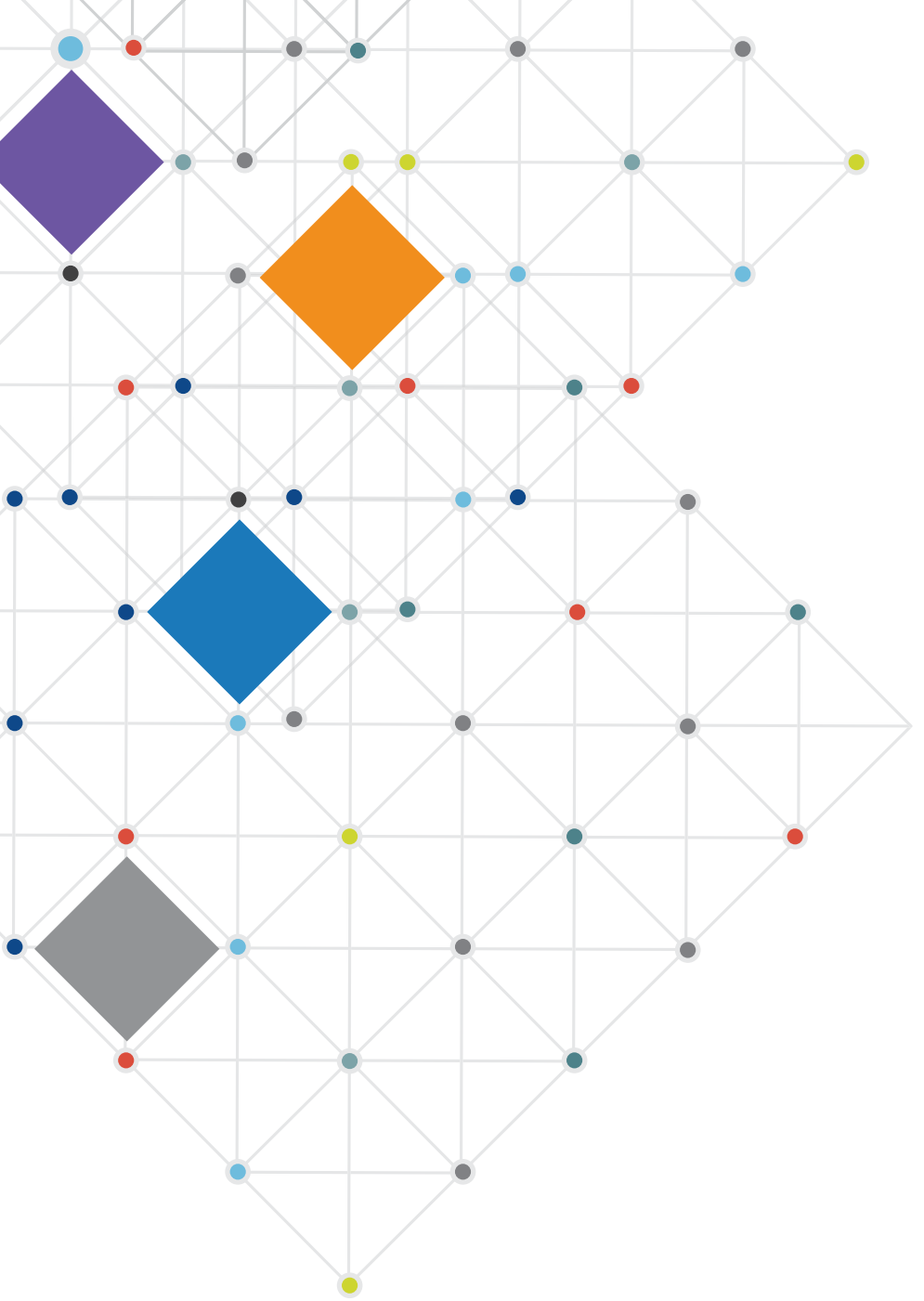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수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경제 분야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정당한 경쟁과 보상 룰을 확립하겠습니다.



한국경제 바로알기

포용성장

PART 3

포용성장?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선진국도 추진하는 글로벌 트렌드

일자리 정책? 기업·근로자·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양질의 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

청년 대책? 일자리·교육·주거 등 희망사다리 복원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조절하되 가야하는 길

근로시간 단축? 현장에 안착시켜 "생산성 향상과 쉼표 있는 삶" 구현

사회 안전망? 촘촘하고 튼튼하게 보강

국민 살림살이?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계비는 줄이고

저출산 · 고령화? 투트랙 대응 : 삶의 질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



01

포용성장?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선진국도 추진하는 글로벌 트렌드

포용성장은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정책방향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OECD는 ①기회균등 · ②시장 역동성 · ③효율적 거버넌스를 강조한 「포용성장 정책체계」를 마련('18.5, 각료이사회)

G20 정상회의, "포용성장 달성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할 것"('19.6, 일본)

APEC 정상회의,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대비"('18년, 파푸아뉴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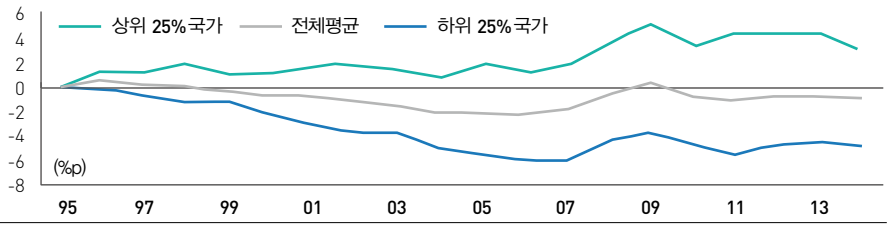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포용성장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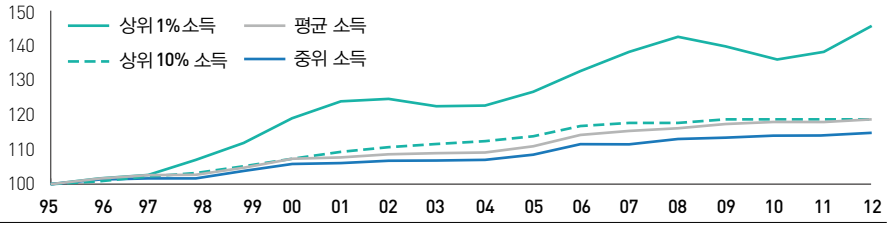
포용성장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성장모델입니다.

•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득과 기회의 분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OECD 31개국)



고소득자 임금 변화 (OECD 9개국)



* 자료 : OECD포용성장 정책체계보고서(1995년=100기준)

• 양극화, 소득분배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기반한 포용성장이 필요합니다.

국제기구들의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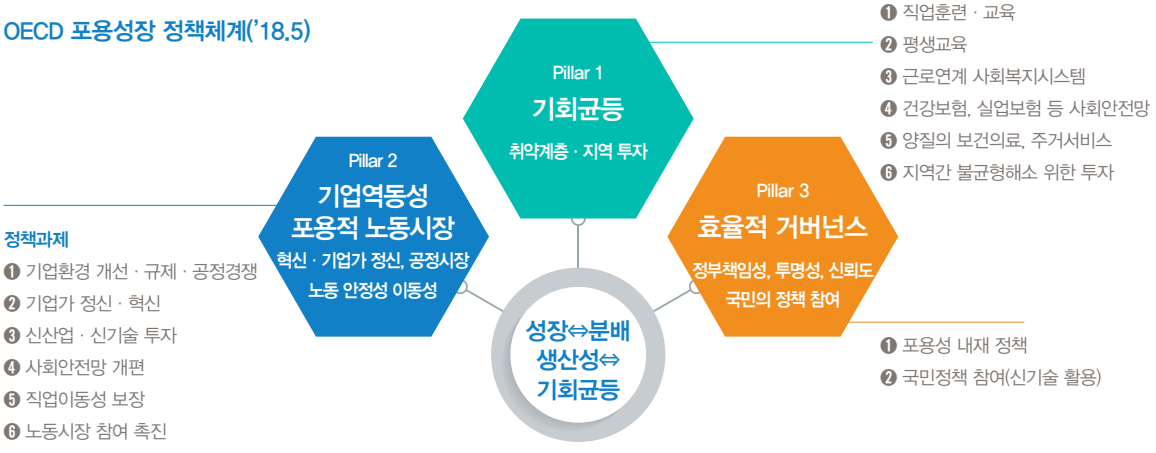
OECD·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포용성장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OECD · IMF는 균등한 기회제공,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공평한 분배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OECD는 '18년 「포용성장 정책체계」를 마련하여 회원국들의 포용성장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IMF*도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IMF, '17) Broad sharing of the benefits of, and the opportunities for, economic growth.

OECD 포용성장 정책체계('18.5)



국제논의 및 주요 선진국 사례

G20 등 국제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포용성장을 매년 논의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G20에서는 '13년 정상회의(러시아) 이후 매년 "포용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선언문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use all policy tools to achieve strong, sustainabl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 …")

• APEC에서도 포용성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 중이며, '18년 정상회의는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대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 선언문

"우리는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promote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

•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양극화 해소 및 포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예 : (독일) '15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및 인상 ('15)€8.5 → ('17)€8.84
(일본) 아베 총리 경단련에 3% 임금인상 요청('18년 신년하례회) 등

우리나라의 포용성장 정책

포용성장 달성을 위한 3대 축으로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균형있게 추진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소득보강, 촘촘한 사회안전망, 핵심생계비 절감 등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혁신성장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창출, 제2벤처 붐, 규제혁신 등을 통해 혁신의 토대를 구축합니다.
공정경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듭니다.



02
일자리 정책? 기업 · 근로자 ·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양질의 일자리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산업혁신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청년 · 여성 · 어르신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활성화 및 미래인재 양성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부문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 필요성

일자리는 국민 삶의 근간이자, 최우선 과제입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❶ 가계의 소득 보장, ❷ 노동시장 역동성 제고, ❸ 경제 활력을 위해 중요합니다.
- 고용 취약계층의 ❶ 자기계발 · 경력관리 및 ❷ 장기실업 · 이력효과 방지를 위한 일자리 지원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OECD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44%)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제공은 중요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일자리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 일자리

산업혁신, 규제개혁, 창업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6월)



- 스마트화 · 친환경화 · 융복합화
- 신산업 육성 + 주력산업 혁신
- 도전과 축적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개편
- 정부는 투자와 혁신 뒷받침

서비스산업 혁신전략(6월)

- 서비스산업 전반 혁신(4대전략)
  * 재정 · 세제 · 금융 등 차별해소, 인프라 구축, 제조–서비스업 융합, 거버넌스 체계화
- 업종별 성과창출(+1 전략)
  * 관광,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 O2O · 新산업





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 관련 1+4법 완성
  * 정보통신법 · 산업융합법(1.17일), 금융혁신법(4.1일), 지역특구법(4.17일)+행정규제기본법(7.17일)
- 규제 샌드박스 사례 141건 창출('19.10까지)
  * (대표사례) 모바일 운전면허증(임시허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서비스(실증특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실증특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실증특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19.2)
- 광주(1월), 구미(7월), 강원(8월), 군산(10월) 등

직업훈련 ·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른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재교육을 확대하고 혁신인재 양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기술훈련

- **전체 직업훈련 중 신기술분야 훈련비중 확대**
  - * 구직자 신기술양성훈련 '19년 5% → **'22년 15%**
  - * 재직자 디지털양성훈련 '19년 4% → **'22년 15%**

혁신인재

- **유망분야를 선도하는 고급인력 양성 → '23년까지 23만명 혁신인재 양성**
  - * '23년까지 D.N.A, SW 등 ICT분야 인재 **13만명 양성**
  - * AI 대학원 '19년 3개 → **'20년 8개**

학습권

-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확대개편('20년)**
  - * 재직자 · 실업자 · 자영업자 · 특고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지원확대**

취약계층 훈련

- **신중년 ·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훈련 제공**
  - *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19년 11개과정 · 500명 → **'22년 23개과정 · 1,100명**
  - * 폴리텍 여성재취업훈련과정 '19년 950명 → **'22년 1,400명**

취약계층 일자리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원		'18년	'19년	'20년(안)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8만명 지원	5만명*지원
	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지원	20만명 지원	29만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15만명 지원	25만명 지원	35만명 지원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4만명 지원	8만명 지원	12만명 지원
여성	여성친화적 일자리	아이돌봄	2.3만명 지원	3만명 지원	3.4만명 지원
		장애인 지원	6.2만명 지원	7.3만명 지원	7.8만명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	2.5천명 신규 지원	5천명 지원
	적합직무장려금		3천명 지원	5천명 지원	6천명 지원
어르신	노인일자리		51만명 지원	61만명 지원	74만명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여 운영 예정

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

지역 노사민정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방안 발표('19.2)

* 상생협약 기본요소 :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 고용 · 투자 확대, 인프라 · 복지협력 등

광주를 시작으로 '19.10월까지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

지역 노사민정이 적정 근로조건, 고용 확대, 인프라·복지 협력 등 상생협약을 맺음으로써 지역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이 적정 근로조건 등을 합의함으로써 23년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 와 같이 노사민정 합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했습니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투자 · 고용을 넘어 지역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인프라 · 복지협력 등을 도모하면서 신규 투자 ·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 예시

勞	적정 근로조건 합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생산성 향상 등
使	고용 · 투자 확대, 원 · 하청 상생, 고용안정 보장 등
民	상생협약 준수 감시, 모델 추진의 우호적 여건 조성 등
政 (지자체)	기업 투자지원, 생활인프라 확충 등 근로자 복지 제공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지역에서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하면 중앙에서 심사·선정 후 패키지 지원으로 적극 뒷받침합니다.

- 상생협약을 맺은 지역의 지자체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신청하면 민관 심사위원회(위원장 : 산업부장관)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中企 투자세액공제 우대,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할인 등
  (근로자) 공공어린이집 확충, 산단 정주 · 교통 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정착을 위해 개념 · 선정절차 · 지원근거 등을 법률로 정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산중위안) 국회 계류중)

전국 6개 지역 확산

'19.1.31일 광주를 시작으로 10월까지 6개 지역에서 신규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 고용	특징
광주 (1.31)	합작법인(광주시-현대차 등) 경형 SUV 생산 • (투자) 약 5,754억원 / 연 10만대 • (고용) 직접 1,000명, 간접유발 1만명 이상	• 23년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 설립
밀양 (6.24)	뿌리기업 28개社 확장 이전(창원→밀양) • (투자) 3,500억원 • (고용) 직접 560명	• 뿌리산업 기업 입지의 지역주민 갈등 해소
대구 (6.26)	이래AMS 재도약을 위한 노사상생 • (내용) 지역 금융지원 1,058억원 • (고용) 기존 고용안정 및 1,200명 신규 직접고용	• 지역 공동노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 지원
구미 (7.25)	LG화학 이차전지 소재 양극재 생산 • (투자) 5,000억원 이상 / 연 6만톤 • (고용) 직접 300명, 간접유발 700여명	• 핵심소재 부문 해외 생산계획의 국내전환
횡성 (8.13)	9개 中企 조합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산 • (투자) 661억원 / 연 1만대 • (고용) 직접 580명	• 9개 중소기업 간 이익 · 리스크 공유 협업모델
군산 (10.24)	중견 · 중소기업 중심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 (투자) 4,120억원 / 17.7만대(승용 · SUV, 버스, 트럭 등) • (고용) 직접 1,900명	• 양대노총 참여 최초사례

* 최종 선정 여부는 균특법 개정 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은 조속히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심사를 거쳐 선정·지원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03
청년 대책? 일자리 · 교육 · 주거 등 희망사다리 복원

청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청년층 고용여건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 16개월 연속 상승

'19.9월 43.7%(전년대비 +0.8%p), 9월 기준 '05년 이래 최고

청년 실업률 하락세

'19.9월 7.3%(전년대비 △1.5%p), 9월 기준 '12년 이래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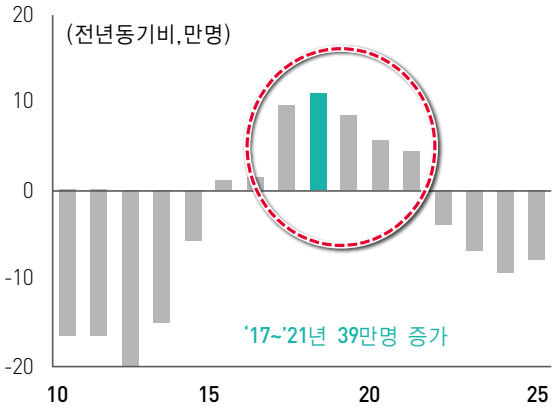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청년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희망사다리 복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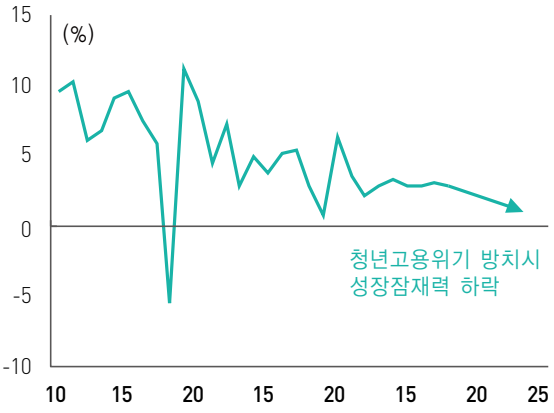
인구구조적 요인에 의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결혼·주거 등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에 진입(+39만명)함에 따라 구직경쟁이 격화되면서 청년들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 청년실업은 국가 성장능력을 저해하며, 청년들의 사회진출 좌절이 결혼 · 출산 등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 인구 추이



경제성장률 추이



청년 지원노력

정부는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 일자리대책('18.3) : 예산 · 세제 · 금융 ·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대책 주요과제

청년 채용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 3년간 2,700만원 지원

고용증대세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연 1,2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청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중소 · 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이 3년 근무시 3천만원 목돈 마련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중소 · 중견기업 재직청년이 5년 근무시 3천만원 목돈 마련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최대 1억원 융자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청년 교통비 월 5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19.3) : 취업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년희망사다리('19.7, '19.8) : 청년층 어려움 완화를 위한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 ④취약청년 자립지원 분야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대책 주요과제

일자리

청년전용창업 융자 확대(+300억원)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제공

중소기업 클린업(Clean Up) 프로그램 도입
화장실 · 샤워실 개 · 보수 지원으로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 2.9만호 공급
행복주택(2.4만호), 역세권 셰어하우스 및 매입임대(0.5만호)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
취약청년, 신혼 · 다자녀부부 대상 우대금리(최대 0.5%p) 적용

교육

소외계층 장학사업 지원 확대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1,500 → 2,350명), 희망사다리 장학금(12,600 → 17,400명),
파란사다리 해외연수 장학금(1,200 → 1,600명) 등

선취업 · 후학습 지원 확대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확대 (인원 2.6 → 3.2만명, 단가 3 → 4백만원)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확대 (15 → 25개교)

취약 청년

청년저축계좌 신설
주거 ·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 근로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지원

청년 · 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저소득 · 저신용 청년에게 생활자금, 고금리대출 전환 자금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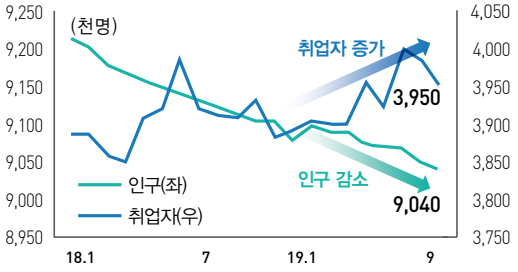
청년 일자리 성과

그간 노력으로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청년층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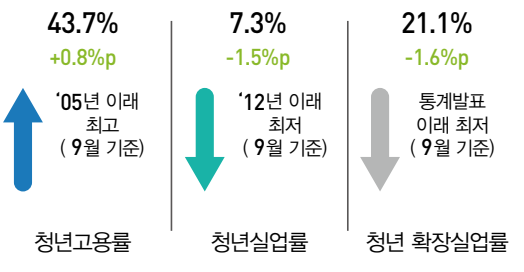
•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상승하는 한편, 청년층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최근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감소했습니다.

청년 인구 및 취업자수



* 자료 : 통계청

청년 고용지표 변화('19.9월 기준, 전년동월비)



* 자료 : 통계청

향후계획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청년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19.7)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www.2030.go.kr



-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조
- **목적** :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 · 조정 업무 수행
- **기능 및 역할**
  -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추진단 구성 및 역할

단장(국무2차장 겸임)

부단장(일반직고위공무원)

청년정책과	청년권익증진과	청년소통과
•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 청년정책 조정 · 관리	• 소통채널 구축·운영
• 기본법·시행령 제정	• 주요 현안과제 관리	• 청년정책 행사·홍보
• 정책연구, 회의체 운영	• 신규과제 정책화 검토	•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업
• 문화분야 청년정책 조정·관리 등	• 분야별 현장점검 등	• 분야별 제안 관리 등

• 또한 국회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 '18.5월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청년연령 정의(19~34세) △청년정책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주재) 및 사무국 설치 등



04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조절하되 가야하는 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임금격차 해소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측면은
시장과 소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 임금 5분위 배율 하락
저임금근로자 비중 19.0% (통계작성 이후 최저)
임금 5분위 배율 4.67배 (통계작성 이후 최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
일자리안정자금(조원, '18) 2.97 → ('19) 2.82 → ('20년 예산안) 2.16
사회보험료 지원(조원, '18) 0.9 → ('19) 1.3 → ('20년 예산안) 1.2

경제 ·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감안, '20년 최저임금은 2.87%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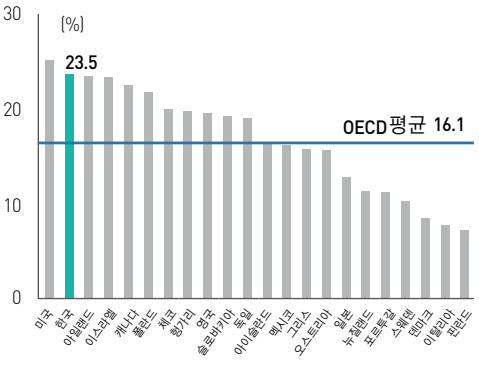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가계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임금 10분위 배율이 높은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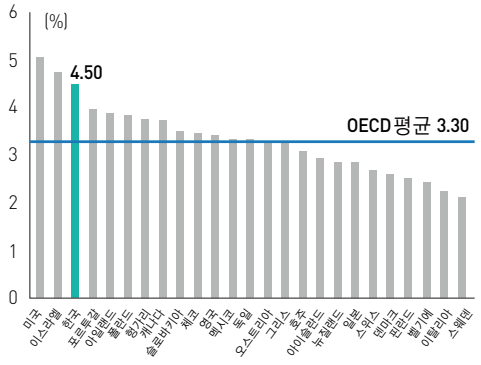
OECD 국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16)



주1) :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

자료 : OECD

OECD 국가의 임금 10분위 배율('16)



주 : 1)상위 10% 임금 ÷ 하위 10% 임금

자료 : OECD

• 근로자의 생활안정, 임금격차 완화, 가계의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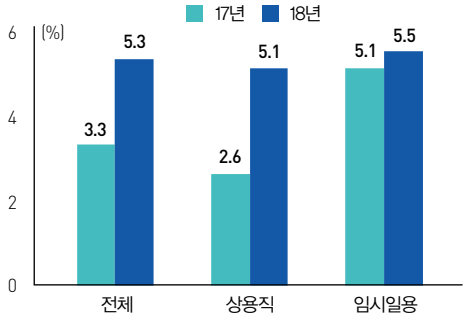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최저임금 인상은 명목임금 상승을 이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 임금 5분위 배율 하락 등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상용직과 임시 · 일용직 모두 명목임금의 인상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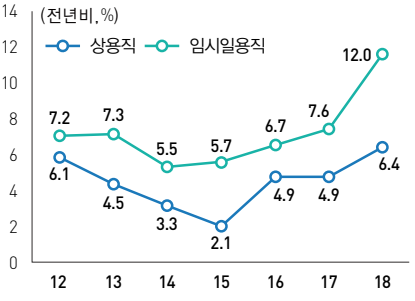
* 월 환산액 최저임금 기준(만원): ('17) 135.2 → ('18) 157.4 → ('19) 174.5 → ('20) 179.5

명목임금 상승률



주 : 1인 이상 사업체 기준(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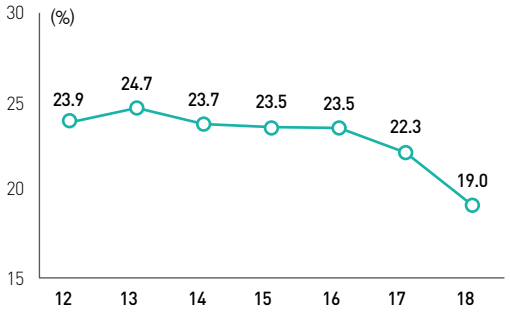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



주 : 1인 이상 사업체 기준(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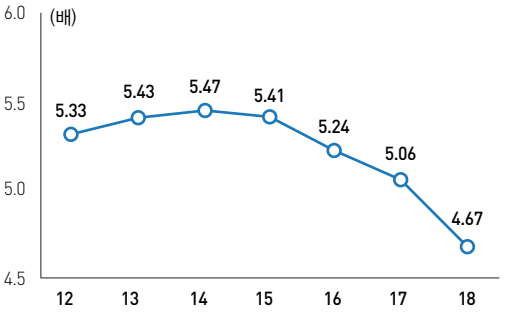
• 또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통계조사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5배 이하로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가 완화되었습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전일제 상용근로자 기준

임금 5분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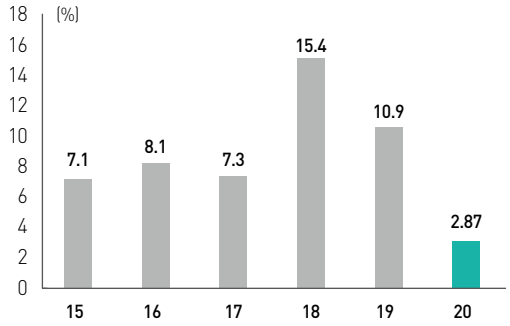
*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전일제 상용근로자 기준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보완방안

다만, 인상속도가 시장 기대에 비해 빨랐던 점을 감안하여 영세·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현장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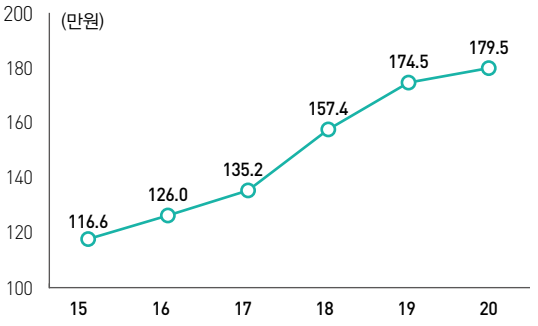
• '20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년대비 2.87%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수준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최저임금 월단위 환산액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또한 근로자 소득보강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도 대폭 확대합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 개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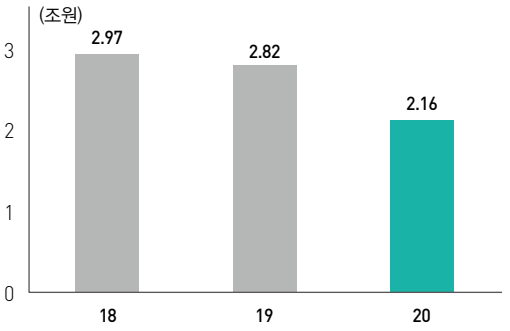
('18) 179만 가구, 1.3조원 → ('19) 388만 가구, 4.3조원

근로장려금 확대 · 개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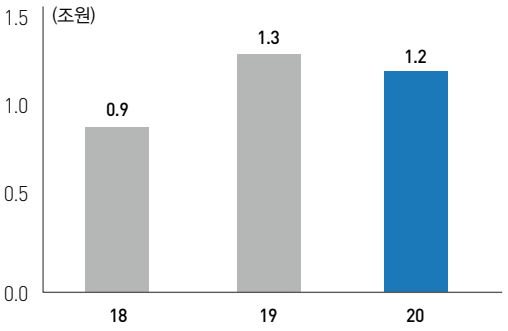
① 소득요건: (단독) 1,300→2,000 (홑벌이) 2,100→3,000 (맞벌이) 2,500→3,600만원 미만
②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1.4 → 2억원 미만
③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30세 이상 → 연령요건 폐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을 '20년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향후 계획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겠습니다.

* 결정체계 이원화 : 구간설정委(전문가 9명) + 결정委(노 · 사 · 공익위원 각각 7명, 총 21명)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 :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 추가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향후 최저임금은 개편된 방식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주요사항

1. 결정체계 이원화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
역할	① 최저임금(안) 심의구간 결정 ② 최저임금의 영향 분석	심의구간 내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
위원 수	전문가위원 9명(위원장 호선)	노사공 각 7명(총 21명)
위원 선정방법	노사정 각5명 추천(총 15명)노사 순차배제(각 3명)	국회 4명, 정부 3명 추천
구간 결정방식	현행 최저임금委 의결방식과 동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 ·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명문화

2.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 · 보완

현행	정부안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① 근로자의 생활보장 :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② 고용 · 경제상황 :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05

근로시간 단축? 현장에 안착시켜 "생산성 향상과 쉼표 있는 삶" 구현

300인 이상 사업장에 '18.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이후 근로시간 단축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습니다.

'18년 年근로시간 1천시간대 최초 진입

'17년 2,018시간 → '18년 1,993시간

시간당 생산성 지속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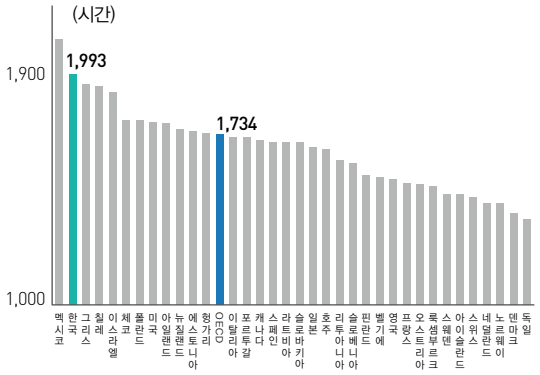
부가가치 생산성 지수(생산성본부) : '17년 104.7 → '18년 108.7

'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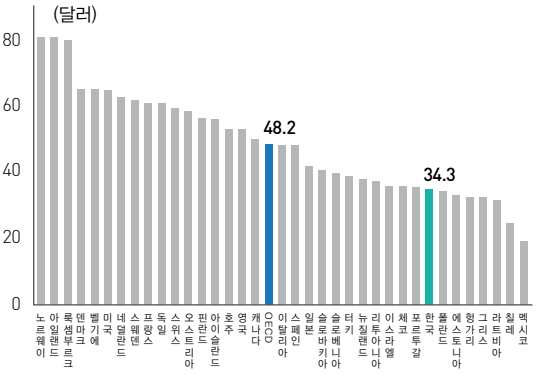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탈피하고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간 근로시간



* 자료 : OECD, '18년 기준

시간당 생산성



* 자료 : OECD, '17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18.7.1일~), 300인 이상 특례제외사업장('19.7.1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유연근무제 보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 기업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기업규모별 계도기간 운영기간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시점)	부여 계도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18.7.1일~)	· 전체 기업 : 6개월(~'18.12) · 개선계획 제출 기업 : 추가 3개월(~'19.3)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 : 탄력근로 관련 개정법 시행 시까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19.7.1일~)	· 개선계획 제출 기업(유연근로제 도입, 노선버스 등) : 3개월(~'19.9)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 : 탄력근로 관련 개정법 시행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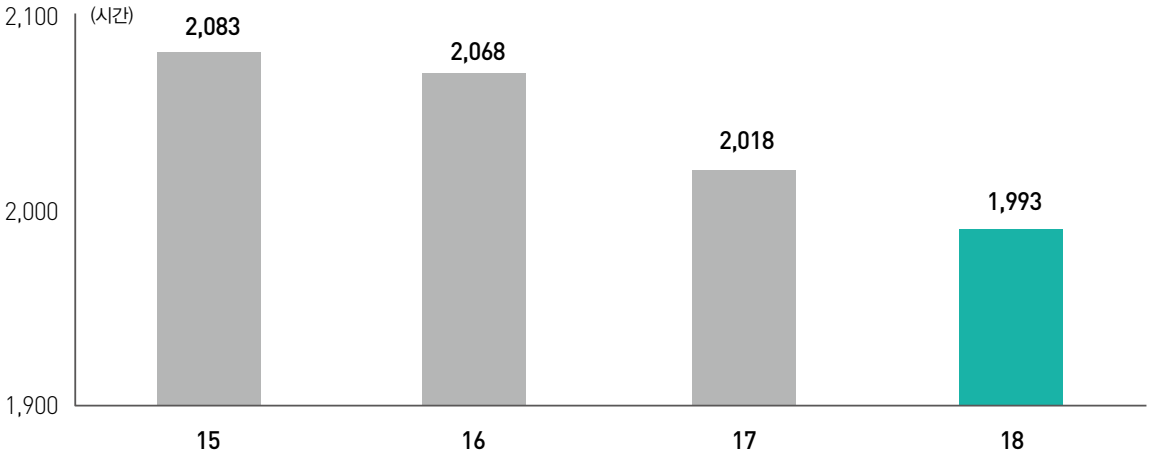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금융 관련 전문 업무를 포함하는 한편, 원활한 제도 활용을 위해 대상 업무의 범위 및 세부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주요 소재 국산화 등 관련 업체 대응을 돕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였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의 효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 → 52시간) 영향 등으로 年근로시간이 '18년에 최초로 1천시간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연간 취업자 근로시간(OECD)



50~299인 사업장('20.1.1일~)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다만,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은 그 대응이 어려운 기업이 많아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위기간 확대(3→6개월), 운영요건 완화, 건강권 · 임금 보전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인건비 · 노무비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도 '20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19년 347억→'20년 904억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20년 46억원, 신규), 일터혁신 컨설팅('19년 219억(142억+추경 77억) → '20년 236억원)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주52시간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06
사회안전망?
촘촘하고 튼튼하게 보강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조하고,
사회·고용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안전망이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상 기초생보 부양의무 기준 완화('19)

기초연금 인상('19.4) : 25만원 → 30만원(소득 하위 20% 어르신)
장애인연금 인상('19.4) : 25만원 → 3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일자리 확대: ('18)51만개 → ('19)61만개

장애등급제 폐지: ('19.6월까지)1~6등급 → ('19.7)중증 · 경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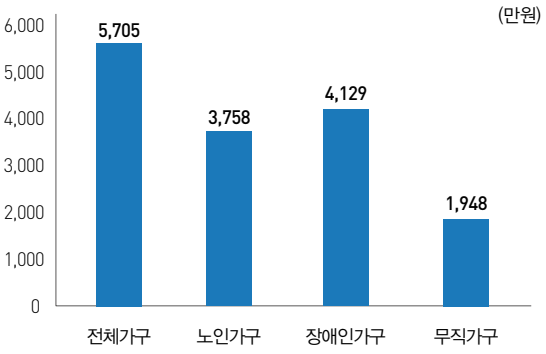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18.9)1,328만명 → ('19.9)1,379만명, +51만명

소득·나이·장애정도 등에 따라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사회 ·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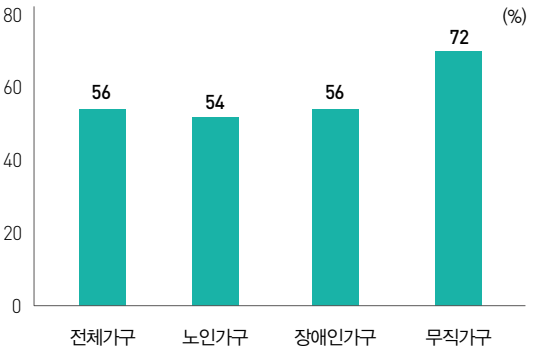
노인 · 장애인 · 무직 가구는 소득수준은 낮은 반면, 의료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로 인해 소비성향은 높은 편입니다.

2017년 가구유형별 가구소득



* 자료 : 통계청

2017년 가구유형별 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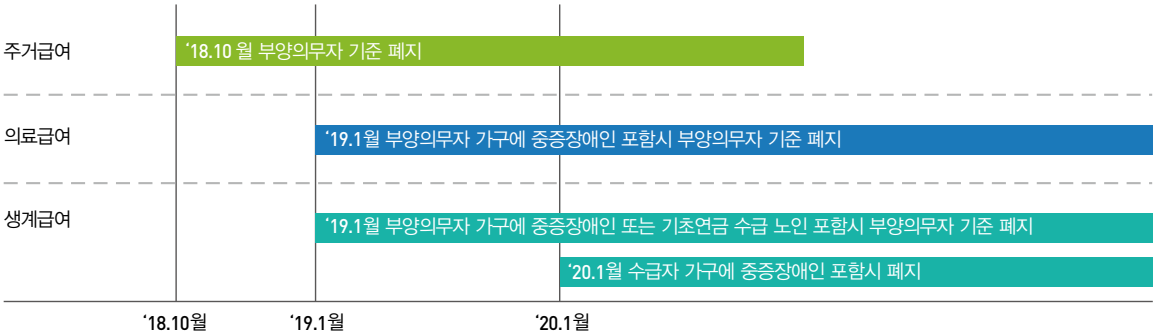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 취약계층의 소득개선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회 · 고용안전망 강화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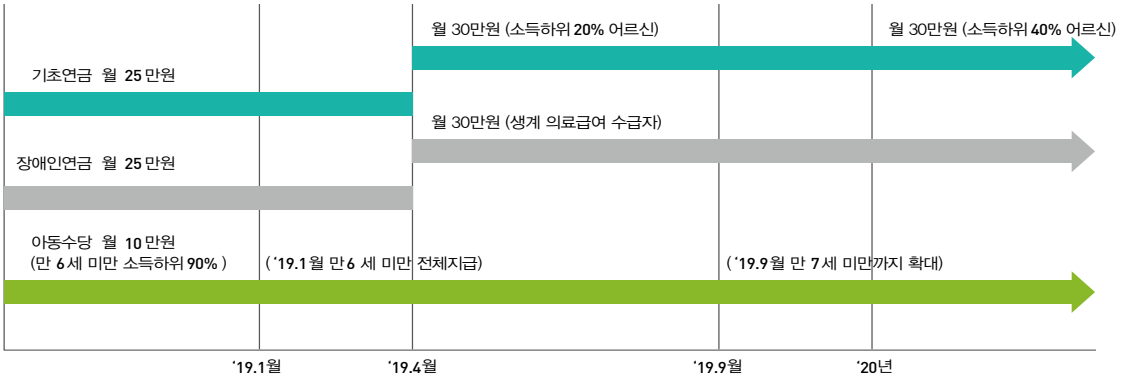
저소득 · 취약계층 소득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르신 · 장애인 생활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어르신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만개) : ('18) 51 → ('19) 61 → ('20년안) 74

•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만명) : ('18) 24 → ('19) 29.5

•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다양한 환경과 장애인 분들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88년~'19.6) 1~6등급 ⇨ ('19.7) 중증 · 경증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를 돕고 실업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지급기간 : (근로자)90~240일→120~270일 (자영업자)90~180일→120~210일
일지급수준 : (근로자)평균임금의 50→60% (자영업자)기준보수의 50→60%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前)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 필요 → (改) 개업일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 1주일 중 2일 이내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이직 전 18→24개월 이내 유급근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급

**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

국민 한 분 한 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06-1

국민 살림살이?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계비는 줄이고

국민의 가계소득 증대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
월 453만원('18.2/4) → 470만원('19.2/4)

근로장려금(EITC) 최대지원금액
85~250만원('18) → 150~300만원('19)

선택진료제 폐지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도입
'19년 고3 → '21년 전학년

교육급여 인상
초 : 11.6, 중 · 고 : 16.2만원('18) → 초 : 20.3, 중 · 고 : 29.0만원('19)

반값등록금 지원
'18년 중위소득 120% → '19년 중위소득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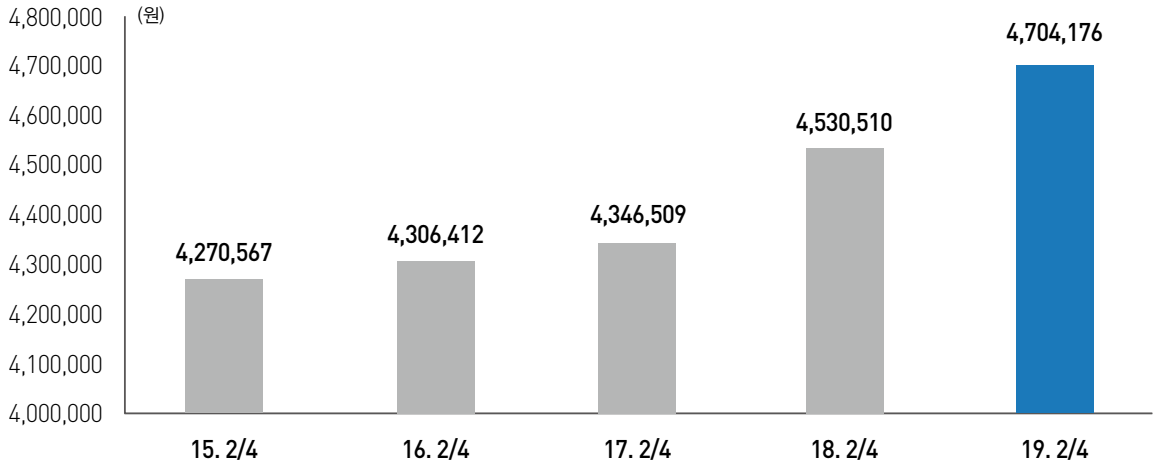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계소득 개선 및 생계비 경감 필요성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연도별 2/4분기)



* 자료 : 통계청

• 1분위 소득도 작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증가수준이 크지 않아 가계소득 증대 및 생계비 경감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 1분위 소득(원) : ('18.2/4) 1,324,915 → ('19.2/4) 1,325,477

가계소득 증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지원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반기 1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액 변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변화

	현행	개선
연령요건	30세 미만 단독가구 제외	**연령 기준 폐지**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가구당 2억원 미만**
소득요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 적용대상가구: 179만 가구('18) → 388만 가구('19)

•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최대지급액을 50~70만원(기존 30~50만원)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도 중복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18년 개정)

•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부담 경감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지원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방안('17–'19년 연도별 비교)

	'17년	'18년	'19년
두루누리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월보수 140만원 미만	월보수 190만원 미만	월보수 21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10인 미만 60%, 기존가입자 10인 미만 40%	신규가입자 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 기존가입자 10인 미만 40%	신규가입자 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 기존가입자 10인 미만 40%
건강보험료 감면	없음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이면서 '18년 직장 신규 가입자 50% 경감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이면서 '19년 직장 신규 가입자 5인 미만 60% 5인~30인 미만 50% 경감 * '18년 지원자는 30% 경감

생계비경감_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 선택 진료비 전면 폐지('18.1)
▶ 병원급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19.7)
▶ MRI · 초음파 등 건강보험 단계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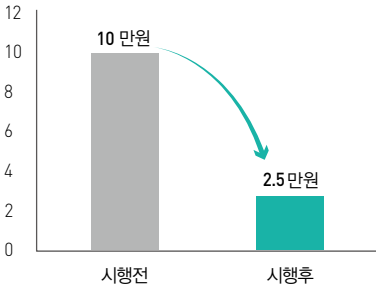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 (노인) 치매국가책임제,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감소
▶ (아동) 입원진료비, 치과 치료 부담 감소
▶ (여성 등) 여성 난임시술 및 장애인 보장구에 건보 적용

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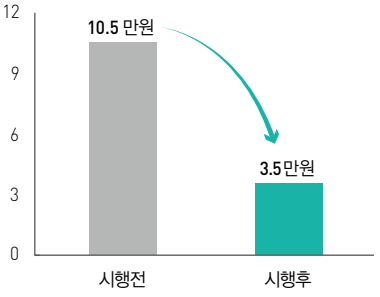
▶ 소득 하위 50% 국민 연간 본인 부담 경감('18.1)
▶ 소득 하위 50% 가구까지 재난적 의료비 최대 3천만원 지원('18.7)

12세 이하 충치치료 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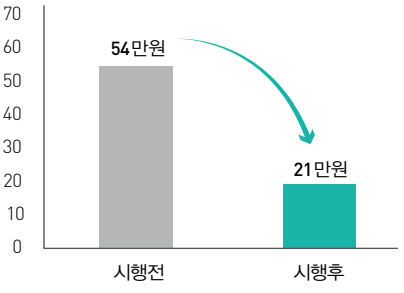
시행시기 : '19.1월

하복부 초음파(종합병원 기준)



시행시기 : '19.2월

눈 · 귀 · 안면 MRI(종합병원 기준)



시행시기 : '19.5월

생계비경감_교육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초 · 중 · 고

▶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18년 초 11.6, 중 · 고 16.2만원 → '19년 초 20.3, 중 · 고 29.0만원)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도입('19년 고3 → '21년 전학년)
▶ 복권 · 체육진흥기금 장학금 신설(각 1,500명)

대학생

▶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확대
('18년 중위소득 120%이하 → '19년 130%이하)
▶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18년 국공립, '22년 사립)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확대
('18년 290억원 → '19년 580억원)
▶ '17년 대비 대학생 기숙사 5만명 추가 수용(~'22)

생계비경감_통신 · 교통비

요금감면과 시장경쟁 촉진으로 통신·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 생계 · 의료 월 최대 3.35만원,
차상위 계층 월 최대 2.15만원 감면('17.12~)
▶ 기초연금수급자 월 최대 1.1만원 감면('18.7~)

알뜰폰 활성화

▶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데이터△19.2%, 음성△17.8%, '19.9)
▶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20.12)

교통비 부담완화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서울북부외곽('18.3), 서울-춘천('18.4),
수원-광명('18.4)
▶ 명절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17.9)

알뜰교통카드 확대

▶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교통비 30% 절감효과,
세종 · 울산 · 전주 시범시행('18))
* 월 44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할인 판매

교통 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 벽오지 100원택시 및
소형버스 운행
(전국 78개시 82개군)

저소득·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국가가 나눌 수 있도록
향후에도 소득 보강 및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07

저출산 · 고령화? 투트랙 대응 : 삶의 질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왔던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정책과 함께 인구정책 TF를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년 합계출산율 0.98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미만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
'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18년 만에 고령 사회 진입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29년 인구 감소 예상

범부처 인구정책 TF 구성 →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삶의 질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급격한 인구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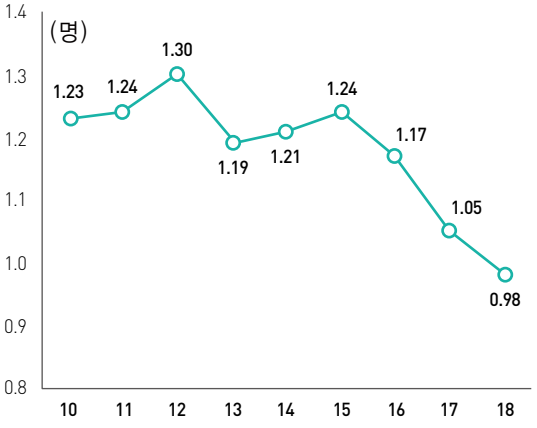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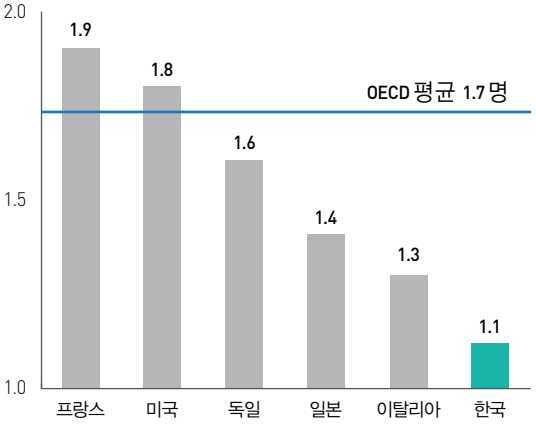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작년에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OECD 주요국 출산율(2017년 기준)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세계 최단 기간인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 출산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의학기술 발전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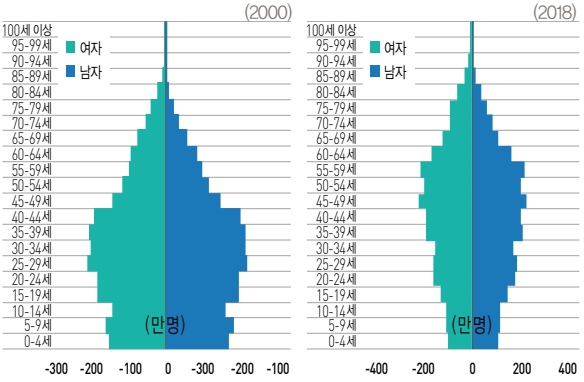
* 고령화 사회 진입 후 고령사회 진입까지 시간 : (한국)18년 (일본)24년 (독일)40년 (이탈리아)61년 (미국)73년 (프랑스)11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고령화 사회(7% 이상) → 고령 사회(14% 이상) → 초고령 사회(20% 이상)

주요국 고령화 진행 속도

	고령화	고령	소요연수
한국	2000	2018	18년
일본	1970	1994	24년
독일	1932	1972	40년
이탈리아	1927	1988	61년
미국	1942	2015	73년
프랑스	1864	1979	115년

인구구조(피라미드) 변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는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지역공동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

고령자의 은퇴 후 소득공백과 노후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 여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복지지출 증가

인구감소로 세입은 감소하지만, 보건 ·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삶의 질 제고'와 '적응력 강화', 투트랙(Two-Track)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인구 충격 완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 구조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지방 인구과소지역 증가 등

(현재) '출산율 제고정책'(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향후) '①삶의 질 제고' + ②인구구조 변화 '적응력(adaptability) 강화'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 TF)

- 이를 위해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사회 · 경제 각 분야에 인구구조 변화가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

수정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속도를 가속화하고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저출산 문제는 개인 · 문화 · 제도 ·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우며 장기적인 시계가 필요합니다.
- ①출산 · 양육비는 최소화하고 ②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늘려나가며, ③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출산 · 양육비 부담은 줄이고

- **아동수당 지원 확대**
  만 7세 미만 월 10만원 보편지급
-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최대 1년 → 2년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3일 → 10일



돌봄체계의 품질은 높이고

-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달성 추진**
  ('22년 → '21년)
- **종일보육 내실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연장보육반에 전담교사 배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범정부「인구정책 TF」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인구정책 TF」를 통해 마련한 4대 핵심전략,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 · 사회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 ❶ : 생산연령인구 확충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정책 통합

전략 ❷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 제3차 기본계획 이행 및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주관)
-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
- 평생 · 직업교육 기능 강화
-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
- 군인력 획득체계 개선
-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
-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
- 지역공모사업 연계 · 혁신

전략 ❸ : 고령인구 증가 대응

- 생산 ·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 주택정책 방향 전환
-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 주택연금 활성화
- 퇴직 · 개인연금 활성화

전략 ❹ : 복지지출 증가 관리

-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